

제337회 국회
(정기회)

국회 본회의 회의 의록

제 6 호

국회사무처

2015년10월13일(화) 오전 10시

의사일정

- 1. 정치에 관한 질문

부의된 안건

- 비교섭단체(정의당) 대표발언 1
- 1. 정치에 관한 질문 5

(10시04분 개의)

○의장 정의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습니다.

○의사국장 장대섭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종걸 의원 외 127인으로부터 국무위원(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황우여) 해임건의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장윤석 의원 대표발의로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춘진 의원 대표발의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9건의 법률안이 발의되었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의장 정의화 방금 의사국장이 보고한 바와 같이 이종걸 의원 외 127인으로부터 국무위원(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황우여) 해임건의안이 제출되었습니다.

해임건의안은 국회법 제112조제7항에 따라 본회의에 보고된 때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각 교섭단체대표의원께서는 이 안건이 국회법에 따라 심의될 수 있도록 의사일정을 협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비교섭단체(정의당) 대표발언

(10시06분)

○의장 정의화 대정부질문에 들어가기 전에 비교섭단체 대표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의당의 심상정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상정 의원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국회의장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여러분!

정의당 대표 심상정입니다.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일주일 후면 우리 정의당은 창당 3주년을 맞습니다. 지난 3년은 정의당에게는 생존을 위한 몸부림의 시간이었습니다.

저희는 오늘에 이르기까지 진보정치가 실패한 원인을 제거하는 데 부단히 힘써 왔습니다. 이제 내부를 정비했고 외양도 갖추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7월 정의당은 3기 당 대표를 선출하면서 새로운 도약을 선언했습니다.

정의당은 아무리 어렵더라도 가치 중심의 정치라는 원칙을 지켜 나갈 것입니다.

더 좋은 대안으로 경쟁하겠습니다. 또 당장의 성과에 급급하기보다 길게 보고 일관성 있게 실천해 나갈 것입니다.

무엇보다 정의당은 가난한 사람을 위한 민주주의를 위해 단호히 싸울 것입니다.

요즘 ‘헬조선’이라는 말이 유행입니다. 이 말은 현 세태를 풍자하는 신조어를 넘어 이제 하나의 사회현상이 되었습니다.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 말이 도대체 무슨 뜻입니까? 이 나라가 지옥 같아 못 살겠다는 말입니다. 벼랑 끝으로 내몰린 우리 국민들이 내뿜는 깊은 탄식과 비명입니다.

그래서 헬조선은 곧 헬정치라는 말로 들립니다. 우리 정치권에 대한 증오 섞인 원망입니다. 그러기에 헬조선이라는 말은 저에게 광화문 네거리를 가득 메운 시위 군중의 고통보다 더 무겁고 더 아프게 다가옵니다.

그렇다고 대한민국이 모든 사람에게 헬조선인 것은 아닙니다.

이른바 금수저, 은수저에게는 태평성대도 이런 태평성대가 없습니다. 부모 잘 만나 날 때부터 주식부자이고 날 때부터 부동산 부자입니다. 세습자본주의가 열렸다는 한탄이 절로 나오고 있습니다.

돈만 아니라 지위도 대물림됩니다. 이들에게는 현대판 음서제라는 비단길도 깔려 있습니다.

상위 1%는 모두 갖고 나머지 99%는 빈곤과 비참을 강요받는 승자독식 사회, 이것이 민주화 이후 30년 대한민국의 현주소입니다.

정의당은 삶이 고단한 분들의 절규에 응답하겠습니다. 부모가 누구든 출신이 어디든 또 성별을 떠나 누구나 열심히 일하면 자신의 노력과 능력에 따라 평가받는 사회를 만들겠습니다. 기득권 정치와 단호히 맞서 땀 흘려 일하는 사람들의 희망을 열어 갈 것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정의당은 다른 종류의 정당, 현대적인 선진 정당으로 거듭나겠습니다.

저는 정치에 대한 국민들의 좌절이 얼마나 큰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불신과 냉소보다 좋은 정치에 대한 갈망이 더 크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진보정치 열풍이 불고 있는 미국과 영국의 시민들 못지않게 우리 국민들도 다른 종류의 정치를 목말라하고 있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정의당은 보다 근본적인 변화를 위해 담대한 정치 기획에 나서겠습니다. 여당은 충성 경쟁으로, 야당은 계파 갈등으로 민생정치는 간 데 없이 한국 정치를 병들게 하고 있습니다. 여당은 책임정치를 하지 못하고 야당은 대안정부가 되지 못합니다. 말끝마다 앞세우는 대화와 타협도, 먹고사는 문제도 정치 밖으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정당은 민주주의의 엔진입니다. 좋은 정당 없

이 좋은 정치도, 좋은 사회도 가능하지 않을 것입니다. 한국 민주주의는 낡고 고장난 엔진이 아니라 새로운 엔진을 장착해야 합니다. 이제 다른 종류의 정당이 필요합니다.

정의당은 첫째, 당원 중심 정당의 모범을 창출해서 정당정치의 새로운 지평을 열어 가겠습니다.

기성 정당들이 앞다투어 당원 없는 정당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당원은 정당의 정체성을 형성하는 책임 주체입니다. 자발적인 당원 참여 없는 정당은 도당에 불과합니다. 당원 민주주의가 꽃피는 정당, 젊고 유능한 리더십이 성장하는 정당, 정의당은 그런 강하고 매력적인 선진 정당으로 나아가겠습니다.

둘째, 정당 사상 최초로 중앙당을 예비내각 체제로 개편해서 수권 능력을 비약적으로 키워 낼 것입니다.

만년 소수정당의 체질을 과감하게 혁신하고 실력 있는 정책정당으로 거듭나 한국 사회의 변화를 선도해 가겠습니다.

셋째, 진보세력을 통합하고 명실상부한 민생대표 정당으로 발돋움할 것입니다.

오른쪽도 왼쪽도 아닌 오직 아래로만 내려갈 것입니다. 그리하여 생활 속에 뿌리내린 민생정치 선도해 가겠습니다.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정의당을 교섭단체로 만들어 주십시오. 그것이 한국 정치를 바꾸는 가장 빠른 길일 것입니다.

한국 정치는 부패하고 무능합니다. 낡은 것은 좀처럼 죽지 않고 새것은 들어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낡은 정치가 사라지지 않는 것은 제대로 된 경쟁이 없기 때문입니다. 정의당이 교섭단체가 되면 한국 정치의 과감한 변화를 주도할 힘센 메기가 될 것입니다. 정의당을 한국 정치의 신형 엔진으로 키워 주십시오.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지난 9월 13일 노사정 합의와 새누리당이 발의한 5대 노동법안으로 박근혜정부의 노동시장 개혁의 실체가 적나라하게 드러났습니다. 재계의 더 큰 탐욕을 위해 봉급쟁이들을 쥐어뜯 수 있는 만큼 쥐어짜겠다는 정책입니다.

첫째, 임금피크제는 양심 불량 피크제입니다.

임금피크제는 정년 연장에 따른 비용 문제 때문에 제기되었습니다. 정년연장법이 통과되더라도 그것이 곧 정년까지 고용 보장을 의미하는 것

이 아니기 때문에 국회에서는 정년 연장의 기업 별 실정에 맞게 노사가 협의하도록 한 것입니다.

그런데 제사보다 쟁쟁에 욕심낸다고 실질적인 정년 연장 실현 방안을 내놓는 대신에 기업과 정부가 한 몸이 돼서 임금 삭감에만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공정하지 않습니다.

더 잘못된 일은 임금피크제를 느닷없이 청년고용대책으로 둔갑시킨 것입니다. 마치 청년고용의 만병통치약인 것처럼 엄청난 홍보를 쏟아 부으면서 정작 실질적인 청년고용대책은 외면해 버렸습니다.

이것은 대국민 사기극입니다. 진정 고통 분담을 요구하려면 고액연봉자들부터 상한제를 도입해야 마땅합니다. 이제 우리 사회도 최고임금제를 도입할 때가 되었습니다.

둘째, 일반하고 요건 완화와 취업규칙 변경은 사용자들에게 쉬운 해고의 문을 활짝 열어 주는 것입니다.

시장경제에서 노동자는 약자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헌법에서 노동자의 기본권을 보호하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현행법은 징계해고와 정리해고가 아니면 노동자가 근로계약을 맺은 대로 성실히 일하는 한 해고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부터는 사용자가 정한 기준에 못 미치면 저성과자라는 낙인을 찍어 마음대로 해고할 수 있는 시대가 열리게 될 것입니다. 절대 안 될 일입니다.

셋째, 새누리당의 5대 노동법안은 한마디로 전경련의 청부입법입니다.

박근혜정부와 새누리당에게 묻겠습니다.

어떻게 새누리당의 법안에는 ‘비정규직으로 계속 일 할래, 아니면 그만 둘래’라는 질문만 있습니까? 정규직 전환이라는 선택지는 왜 없습니까? 기간제 사용기간을 4년으로 확대하는 것은 전 국민을 평생 비정규직으로 만들겠다는 법입니다.

파견제법은 대기업에 이미 만연되어 있는 불법 파견 면죄부법에 다름 아닙니다. 파견제를 뿌리 산업까지 확대하면 정규직이 뿌리째 뽑혀 파견 노동자들로 넘칠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 박근혜 정부가 추진하는 노동시장 선진화입니까?

또 연장근로를 늘려 주 60시간을 하겠습니까. 청년고용 창출을 위해 가장 시급한 것이 노동시간 단축입니다. 그런데 거꾸로 더 늘리겠다고요? 정부 여당은 청년고용을 거론할 자격이 없습니다.

정부 여당의 노동시장 개혁 방안은 한마디로

재벌의, 재벌에 의한, 재벌을 위한 법안입니다. 2014년 전경련이 규제완화 핵심 요구사항을 제출한 것 100% 수용한 법안입니다. 한마디로 양심과 정의가 실종된 나쁜 정책입니다. 민생경제를 파탄 내고 양극화를 심화시키는 길입니다.

청년실업 120만 시대입니다. 2013년까지 최근 5년간 국민총소득에서 기업소득이 차지하는 비중은 평균 25.19%로 OECD 평균보다 7%나 높습니다. 그런데 10대 재벌의 청년고용은 2010년 이후 계속 줄어 박근혜정부 2년 차인 지난해에는 마이너스 2.9%를 기록했습니다. 국민이 버는 돈 대기업이 다 가져가면서 고용도 투자도 늘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디에서 청년일자리가 나올 수 있겠습니까?

청년실업은 최경환 부총리가 말하는 정규직 과보호 때문이 아니라 박근혜정부의 재벌 과보호에서 비롯되었다는 것이 진실입니다.

재벌 대기업의 공간을 여는 것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정부가 강력한 정책의지를 가지고 선도해야 합니다. 그럴 때만이 노동조합도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의 사회연대 방안에 대해 검토할 수 있을 것입니다.

박근혜정부에게 요구합니다.

첫째, 쉬운 해고, 취업규칙 변경 행정지침, 새누리당 노동 5법 추진을 즉각 중단하고 노동시장 개혁을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합니다.

둘째, 청년고용절벽 해소를 위한 긴급 조치가 필요합니다.

청년의무고용 확대 법안을 정기국회 제1호 법안으로 처리합시다. 동시에 청년수당을 신설해서 구직과 주거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 지원 방안을 신속하게 검토합시다.

셋째, 노동시장 개혁은 사회적 대타협이 필요합니다. 속도전과 사회적 합의는 양립할 수 없습니다.

노사정위원회에서 배제된 비정규직, 청년 등 시민사회들이 함께 참여하고 고용, 임금, 노동시간, 복지를 포괄적으로 협의할 수 있는 사회적 대타협기구를 국회에 설치할 것을 제안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오늘은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가 지역선거구 획정안을 국회에 제출하는 날입니다. 하지만 양당이 국민 앞에 온갖 다짐을 앞세우며 독립시킨 선거구획정위원회는 또다시 기득권 정치에 휘둘러 중심을 잃고 있습니다.

투표가치의 평등을 실현하라는 것이 헌법의 명령입니다. 천만 사표를 살려 내서 득표율에 비례하는 의석을 보장하라는 것이 국민의 요구입니다. 모처럼 찾아온 정치개혁의 골든타임은 이번에도 기득권 정치에 의해 풍전등화의 위기에 처했습니다.

그동안 농어민 권익을 가장 잘 대변해 온 정당이 어디입니까? 저는 감히 진보정당이라고 자부합니다. 농민대표들은 비례대표를 늘려 농어민 이익을 더 잘 실현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농촌 지역구를 유지해야 된다는 주장은 선거권의 평등에 부합될 때 정당성을 얻을 수 있습니다.

현행 제도 아래서 유권자 절반의 선택이 버려지고 있습니다. 거대 정당은 득표율보다 더 많은 의석을 가져가고 작은 정당은 득표율보다 더 적게 가져가는 제도입니다. 민주주의 원리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흡사 주먹이 지배하는 조폭 세계의 논리와 유사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여전히 비례의석 축소를 거론하는 것은 투표가치의 평등을 희생시켜 부당한 특권을 유지하겠다는 것입니다.

제도 개혁이 만병통치약은 아닙니다. 그러나 어떤 경우에는 특효약이 될 수 있습니다. 저는 선거제도 개혁이야말로 민생 없는 대결 정치라는 오늘의 한국 정치가 걸린 중병을 치유하는 맞춤형 처방이라고 생각합니다.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다시 한 번 호소드립니다.

비례대표를 확대하고 배분 방식을 연동형으로 개혁합시다. 그것이 헌법적 가치를 실현하고 민주주의를 바로세우며 민생정치를 강화하는 길이라고 믿습니다.

평화와 공동번영을 위한 남북한 경제협력강화협정을 제안합니다.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8월 25일 남북한 합의로 남을 향하던 포문이 닫히고 북을 향하던 확성기 방송도 멈췄습니다. 전쟁 위기로 치닫던 군사적 긴장은 일단락되고 굳게 닫혀 있던 대화의 문이 재개되었습니다. 평가해 마땅한 큰 진전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번 합의가 화해와 협력이라는 길고 긴 여정의 출발이지 끝이 아님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남북 간에 군사적 긴장과 갈등이 고조될 때마다 우리 국민들은 공포에 휩싸이고 금융시장은 출렁거리야 합니까? 안보와 경제, 언제까지

이 쌍끌이 위기 속에 국민들이 불안해해야 합니까? 이제 반목과 공포에 노출된 남북관계에 종지부를 찍고 평화와 공동번영으로 가는 기관차를 출발시켜야 합니다.

저는 남북한 경제협력강화협정, 사실상의 남북한 FTA 추진을 제안합니다. 남북한 경제협력강화협정은 정경분리의 원칙에 따라 국제사회가 인정하는 가장 낮은 단계의 경제통합을 의미합니다. 기존 남북경협이 근원적 한계를 넘어 국가간의 제도화된 경제협력으로 남북 모두 윈윈 할 수 있는 전략입니다. 점진적인 경제통합으로 남북 간의 신뢰 회복과 상호의존도를 높여 갈 수 있는 방안입니다. 남북 간의 경제협정은 북한에게는 세계로 통하는 길을, 남한에게는 북방경제로 통하는 길을 열어 한반도 평화와 경제통합의 새로운 출발, 3통 전략이 될 것입니다.

중국과 대만은 2010년 사실상 FTA를 체결해서 정치·군사적 적대관계를 완화하고 공동의 경제이익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주당 30편에 불과했던 정기 항공노선은 800여 편으로 늘어났고 왕래 인원은 연간 800만 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8만 개의 대만 기업이 중국에 진출했고 200만 명이상이 중국에 상주하고 있습니다. 정경분리 원칙으로 경제공동체 차이완을 형성해서 사실상의 통일을 실현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어렵지 않습니다. 남북 정상들의 결단이 필요할 뿐입니다. 저의 제안은 이미 남북이 합의한 남북기본합의서 체제로의 복귀이고 부속합의서를 구체화하는 것입니다. WTO 등 국제통상법적 제한은 큰 장애물이 되지 못합니다. 상호체제 인정에서 출발하는 장기적이고 점진적인 경제개방이 사실상 통일의 길임을 확인하면 됩니다.

지금 동북아는 커다란 전환의 시대에 놓여 있습니다. 이러한 시기 우리가 이 상황을 주도하지 않으면 남북한의 긴장이 빌미가 되어 한반도는 주변 강국의 힘의 각축장이 될 우려가 있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평화를 정착시키고 동아시아 지역 경제통합과 동북아 협력질서 구축에 기여하는 것만이 평화통일을 앞당기는 길이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역사왜곡 저지·민생 살리기 야권 정치지도자 회의를 제안합니다.

최근 우리 국민들은 역사 교과서 국정화 시도, 노동개약 등 박근혜정부의 전방위적 공세에 큰 위기를 느끼고 있습니다. 국민들은 얼마나 야당

을 얽잡아보았으면 집권세력이 저렇게 무도하게 나올까, 진보정당은 왜 또 저렇게 약한지 원망하고 있습니다. 우리 국민들은 과연 야당들이 벼랑으로 내몰리고 있는 국민들의 삶과 민주주의를 지킬 의지와 능력이 있는지 의심하고 있습니다. 패배에 길들여져 싸우지 않는 야당, 기득권을 움켜쥔 채 혁신하지 않는 야당에 선뜻 정권을 안겨줄 국민은 없습니다. 야당들이 분발해야 합니다.

노동자를 쉬운 해고와 평생 비정규직으로 내모는 박근혜 정권의 민생폭거에 단호히 맞서야 합니다. 친일을 미화하고 독재를 찬양하는 역사 쿠데타를 결코 허용하지 말아야 합니다. 정치개혁에 대한 국민적 열망을 무시하는 비례대표 축소 시도에 대해 야권의 굳건한 공조로 맞서야 합니다.

각개약진만으로는 재벌 대기업과 결탁한 박근혜 정권의 총공세를 막아낼 수 없습니다. 야권이 힘을 모아 땀 흘려 일하는 월급쟁이들, 개혁을 열망하는 시민사회와 함께 싸워야 합니다. 이 싸움에서 이겨야 국민들이 신뢰할 것입니다. 그래야 의회권력 교체와 정권 교체도 가능해질 것입니다.

야권의 정치 지도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머리를 맞대고 역사 교과서 국정화 저지, 노동개악 저지, 정치개혁을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 공동실천에 나섭시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정의화 심상정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1. 정치에 관한 질문

(10시25분)

○의장 정의화 의사일정 제1항 정치에 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대정부질문에 들어가기 전에 의장으로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정치에 관한 질문을 시작으로 4일간 대정부질문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대정부질문은 국정이 국민 요구에 부응하여 잘 운영되는지 국회가 확인하고 또 대안을 제시하는 자리입니다.

우리 국민들께서는 일을 제대로 잘하는 국회를 원하고 계십니다. 대정부질문을 통해서 생산적인 논의가 이루어지고 예산국회 역시 정상적이고 아주 순조롭게 진행되어야 합니다.

지금 우리 앞에는 민생법안, 선거구획정 문제 등 국회와 정부가 논의해야 될 여러 현안들이 남

아 있습니다. 19대 마지막 정기국회에서 이러한 현안들이 원만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좋은 아이디어가 제시되는 내실 있는 그런 대정부질문이 되기를 바랍니다.

국무총리나 국무위원께서는 의원들의 질문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고 관련 자료는 추후에라도 빠짐없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대정부질문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질문하실 의원은 모두 열네 분이십니다. 오전에 네 분 의원의 질문을 실시하고 정회를 한 다음에 오후에 속개해서 열 분 의원의 질문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1인당 질문시간은 답변시간을 제외하고 14분이고 질문 과정에서 전광판에 영상이 표출되는 시간은 의원께서 발언하지 않으셔도 발언시간에 포함된다라는 점을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국회법 제121조제3항에 따라 통일부장관과 행정자치부장관의 대리 출석을 의장이 각 교섭단체대표의원과 협의를 거쳐서 승인을 했습니다. 이 점 양지해 주시고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의 공지사항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경북 문경·예천 출신의 새누리당 이한성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성 의원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정의화 국회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황교안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경북 문경·예천 출신 이한성 의원입니다.

(정의화 의장, 정갑윤 부의장과 사회교대)

대한민국의 신성장동력을 찾기 위해 박근혜 대통령께서 창조경제를 힘차게 추진하고 계시고 수많은 과학자·기술자들이 땀 흘려 연구에 연구를 거듭하고 있지만 그 성과가 좀처럼 나지 않고 있는 가운데 선진국들은 훨씬 빠른 걸음으로 미래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이웃나라 일본은 작년에 노벨과학상 수상자를 배출한 데 이어 연거푸 올해도 두 사람의 노벨과학상 수상자를 배출하였으며, 중국도 토종 과학자가 처음으로 노벨과학상을 받게 되어 세계를 놀라게 하고 있습니다.

미래의 신성장동력은 에너지 효율 고도화를 통한 에너지 절감과 환경 보호에 이바지할 수 있는 산업에서 찾아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선진 각국이 이를 위해 열띤 경쟁을 벌이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답보 상태에서 헤어날 수 못하고

있습니다.

저는 무엇이 원인인지 짚어 보고 정부와 기업에 대책을 촉구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총리, 나오시기 바랍니다.

방금 심상정 정의당 대표께서 발언하신 내용, 잘 들으셨지요?

○국무총리 황교안 예, 들었습니다.

○이한성 의원 우리 이번에 새누리당이 제출한 노동 선진화 관계 법안, 5개 법안이 이게 뭐 ‘재벌의, 재벌에 의한, 재벌을 위한 법안’ 이렇게 얘기하는데, 맞습니까?

○국무총리 황교안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노동 근로자들과 우리 경제의 회복을 위한 그런 조치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이한성 의원 이게 뭐 전경련의 청부입법이겠습니까?

○국무총리 황교안 전혀 그렇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한성 의원 그래도 우리도 나름대로 새누리당이 또 정부와 이렇게 걱정을, 나라 백년대계를 걱정하면서, 노심초사 이렇게 또 걱정하는 가운데 또 노사정 합의를 통해서 이루어 낸 법안 아니겠습니까?

○국무총리 황교안 국민을 위한 경제활성화를 위해서 추진하고 있는 법안들입니다.

○이한성 의원 지금 노동 사정이 참 우리나라가 대단히 안 좋지요. 경제성장률이 둔화되고 하니까 거기에 따른 취업계수가 아주 뚝뚝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국무총리 황교안 그렇습니다. 그에 대한 대책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이 노동개혁입니다.

○이한성 의원 WEF라는 것은 세계경제포럼, 일명 쉽게 다보스포럼인데, 다보스포럼에서도 우리나라 경쟁력이 28위에 있다고 하면서도 노동 효율성, 이것이 너무 떨어져서 걱정스럽고 많은 제안을 해 주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국무총리 황교안 알고 있습니다.

○이한성 의원 (영상자료를 보며)

노동생산성도 많이 떨어집니다. 우리나라는 29.95달러인 데 반해서 미국은 56달러, 57달러에 육박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도 좀 개선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국무총리 황교안 예, 반드시 개선되어야 될

항목입니다.

○이한성 의원 거기다가 대기업, 우리 심상정 대표께서는 언급을 안 하셨는데 대기업과 또 중소기업의 비정규직 간에 차이가 너무 크다, 좀 알고 계시지요?

○국무총리 황교안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이한성 의원 대기업이 100만 원 버는 동안에 중소기업 비정규직은 34만 6000원을 번다, 1년 같으면 5000만 원 벌 때 1730만 원을 번다, 이런 뜻입니다. 알고 계시지요?

○국무총리 황교안 예, 알고 있습니다. 이번 노동개혁에서도 그 부분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같이하고 있습니다.

○이한성 의원 좀 개선이 되어야겠지요?

○국무총리 황교안 예.

○이한성 의원 거기다가 부수하는 여러 가지 사회안전망 부실은 또 더 심합니다. 그것도 알고 계시지요?

○국무총리 황교안 알고 있습니다. 역시 노동개혁 과제 중의 하나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한성 의원 현대자동차 생산직 근로자들의 평균 임금이 1년에 한 팔구천만 원 되지요?

○국무총리 황교안 9000만 원이 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한성 의원 그러면 그게 달러로 얼마입니까? 한 8만 달러 안 됩니까?

○국무총리 황교안 그렇습니다.

○이한성 의원 미국의 국민소득, 평균소득 얼마입니까? 한 5만 5000달러 되지요?

○국무총리 황교안 예.

○이한성 의원 평균소득보다, 되는데 엘라베마에 있는 현대자동차 근로자들의 평균 임금 혹시 아십니까? 한 3만 5000달러……

○국무총리 황교안 그보다 훨씬 못 미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한성 의원 3만 5000달러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한 5만 5000달러 평균에 엘라베마에 있는 현대자동차 근로자들의 평균 임금은 한 3만 5000달러.

우리나라는 지금 국민소득이 얼마입니까, 평균 국민소득이 1인당?

○국무총리 황교안 지금 2만 8000불을 넘고 있습니다.

○이한성 의원 한 3만 달러 채 안 됩니다. 그런데 현대자동차 근로자들 임금은 달러로 쳤을 때

8만 달러가 넘어요. 이게 3만 달러, 평균소득이 안 되는 나라에서 현대자동차는 어떻게 8만 달러를 넘게 받습니까? 좀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국무총리 황교안 근로자들이 임금을 많이 받는 것은 바람직한 일입니다마는 과도하게 많아지는 것은 결과적으로 노동자 간의 편차를 키우고 부당한 근로소득을 취하는 것이 아니냐 하는 그런 우려들을 낳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한성 의원 그러니까 우리 국민소득이 한 8만 달러 될 때 평균 정도 받는 것은 좋다, 그런데 우리 국민소득이 3만 달러도 못 넘기는 상태에서 이 귀족노조는 무려 8만 달러를 넘게 받는다, 1억 받는 사람도 있겠지요, 이제, 이게 좀 문제 아니겠습니까? 이 귀족이라고, 모르지 않습니까?

○국무총리 황교안 그런 격차가 해소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한성 의원 임금피크제 어떻게, 다 노동자들이 바라고 있지요, 근로자들이? 한 72.8%가 이것에 찬성하고 있던데, 이것을 지금 비난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데 대해서 이런 것들 다 이제 노사정 합의를 통해서 그래도 최고로 합의안을 도출한 것이 이번 법안이다, 그렇게 보는 것이지요?

○국무총리 황교안 국회에서 충분한 논의를 해주실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한성 의원 정치권의 문제입니다마는 지역구 의석수가 좀 확대되어야 된다는 것이 양당 입장이 비슷할 겁니다. 새정치민주연합에서는 아마 또 다른 정의당과의 관계 때문에 그런지 모르지만 적어도 지방 출신 국회의원들은 다 지역구 의석수는 늘리고 비례대표는 조금 축소가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지니고 있는데, 총리께서 의견이 있습니까?

○국무총리 황교안 형평성의 문제나 또 최근에 논의가 된 헌법재판소의 결정의 취지를 반영하는 등의 충분한 논의를 국회에서 해서 국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결론을 내주실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한성 의원 비례대표를 많이 없애자는 것은 아니고 비례대표를 조금 줄여서 지금 현재 비례대표를 그대로 놔두고, 또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라서 2 대 1로 유지를 하자면 5개 군을 다녀야 되는 국회의원이 나온다, 4개 군도 사실 벽잡니

다, 4개 군을 어떻게 다닙니까?

4개 군이 왜 4개 군이 되었겠습니까? 전부 산악지역의 인구밀도가 과소해서 인구가 없기 때문에 4개 군이 합쳐진 것인데 거기는 도로도 없습니다. 이웃 군을 가기 위해서는 잘 뚫린 도로를 뱅뱅 돌아서 가야 돼요. 한 180도, 이백몇십 도로 돌아서 돌아가야 되는 그런 의정활동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 가지고 4년 동안 국회의원 얼굴도 못 보면서 선거를 다시 치르는 이런 사태와 비례대표를 조금 줄이는 문제하고 이익교량을 한다면 어떻게 됩니까?

○국무총리 황교안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바를 제가 충분히 알겠습니다. 국회에서 충분한 논의를 거쳐서 그런 부분들에 관해서도 농촌의 의견들도 충분히 수렴하고 또 국민 전체의 생각도 같이 반영하는 이런 좋은 결론이 나오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한성 의원 그래서 지역구 의석수도 조금 확대를 해서 비례대표를 조금 양보하고 그런 절충점을 찾자 이런 뜻이지 비례대표를 아예 없앤다 이런 뜻은 아닌데, 그런 이익교량을 합리적인 선에서 찾아서 선거구 획정이 되어야 되겠다 이런 입장인데, 총리께서는 동의하십니까?

○국무총리 황교안 의원님 걱정에 공감합니다.

○이한성 의원 역사 교과서가 또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저도 역사 교과서 문제에 대해서 교과서를 전부 읽지는 않았지만 일부 문제되는 것을 읽어 보니까 레닌을 미화한다든지 공산주의는 제국주의와 관계없다든지 또는 이승만 대통령께서 남북 분단을 시켰다든지 이렇게 왜곡하고 있거든요. 좀 알고 계시지요, 그런 것?

○국무총리 황교안 지금 역사 교과서에 사실이 왜곡되어 있는, 그래서 국민들의 우려를 갖게 하는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한성 의원 레닌은 1917년 4월에 오스트리아에 있다가 귀국을 했습니다. 그때 조국 러시아는 전쟁에 휘말려 가지고 모든 물자가 전쟁으로 다 빨려 들어가고 그래서 노동자, 군인들, 상인들이 다 민생 도탄에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불만이 많겠지요. 그러나 전쟁은 이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레닌이 쓰옥 편하게 들어와서, 물론 독일이 보냈겠지요. 레닌이 러시아에 들어가면 선동을 해서 아마 우리한테

유리하게 작용할 것이다……

과연 그 뜻대로 레닌은 자기 조국의 정부, 왕정을 무너뜨리고 독일에게 유리한 짓을 했습니다, 노동자와 농민들을 선동해서. 그런 다음에 정권을 잡았지만 그 뒤에 레닌이 참 착한 사람으로 알고 수병들이 ‘이것 너무 심하지 않습니까’ 하고 항의했을 때는 수병들을 무참히 학살한 그런 인물입니다. 알고 계십니까?

○국무총리 황교안 레닌의 행적에 대해서는 자세히는 몰라도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내용들은 알고 있습니다.

○이한성 의원 그래서 러시아가 제법, 왕정이 무너지고 내각제로 됐을 때는 제법 민주화를 시행했다가 레닌에 의해서 도로 공산화되면서 전체주의화가 되고 아주 민생이 더욱더 어려워진 가운데, 민족자결을 부르짖은 것도 사실은 자기 힘을 모으기 위해서 한 것이고 막상 정권을 잡자 레닌은 우크라이나 또 중앙아시아의 여러 소국들을 병합시켰습니다.

평상시에 민족자결주의를 외치던 것하고 정반대, 자기가 하면 로맨스이고 남이 하면 스캔들 딱 맞는 이런 짓을 해 놓고도 자본주의 국가는 제국주의고 자기들은 민족자결을 존중한다 이렇게 호도했습니다. 맞습니까?

○국무총리 황교안 예, 그런 주장 있었습니다.

○이한성 의원 2차 대전이 끝나고 스탈린이 트루먼 대통령과 또 애틀리 영국 수상 또 장개석, 이렇게 승전국가 회담을 할 때, 아마 동구 지배권을 강화하고 터키의, 트리폴리라든지 이런 지역에 대한 욕심을 부리다가 좌절이 되니까 그때 동부지구로 넘어와서 일본과 한반도를 삼키겠다는 의도를 분명히 했습니다.

그 결과 소련군이 진주를 했고 그 뒤에 중공군의 북한 진주도 용인이 됐고 그 여파로 그 당시에 바로 공산정권 수립을 위한 여러 가지 인민위원회라든지 정부조직을 거의 다 만들어 놓은 상태에서 이제 할 수 없다고 생각하고 이승만 대통령이 조치한 것이 바로 48년 5월 달의 총선과 8월 15일 날 건국 아니겠습니까? 어떻습니까?

○국무총리 황교안 의원님 말씀하신 그런 역사적 사실에 대해서 저도 그렇게 공부했고 또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한성 의원 그래서 이것을 이승만 대통령 때문에 남북 분단이 됐다 이렇게 호도하면 되겠습니까? 어떻습니까? 이게 사실이, 참 사실이 아니

지 않습니까?

○국무총리 황교안 예, 그렇게 보고 있지 않습니다.

○이한성 의원 이제 그 정도로 하고.

사실은 우리나라가 신성장 동력에 대한 추진을 소홀히 한 상태에서 다른 나라는 너무 앞서가고 있다 이런 걱정을 제시하기 위해서 제가 썼는데, 코펜하겐선언 당시에 우리나라는 202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전망치의 30%를 줄이겠다, 그 당시에는 대단히 획기적인 선언이었습니다. 기억하시지요?

○국무총리 황교안 예, 알고 있습니다.

○이한성 의원 그런데 사실 그 선언만 하고 그 뒤에 한 것은 별로 없습니다. 우선 2010년도의 배출량은 그 전년도에 비해서 6.9%나 늘고 계속해서 늘다가 작년에는 좀 줄었습니다. 그것 알고 계시지요?

○국무총리 황교안 예.

○이한성 의원 그런데 사실은 다른 나라에서는 그때는 시큰둥하다가 아주 온실가스 배출 감축을 위한 그런 노력에 박차를 가했습니다. 특히 아마 영국이 대표적인 사례가 될 겁니다.

영국은 2010년도에 100MW, 그러니까 한 10만kW 정도, 태양광발전이 그 정도였습니다. 아주 미미했습니다. 그런데 2014년 10월경에는 40기가, 한 4만MW가 되고 이것은 원전 4기 수준입니다. 4년 만에 이만큼 해냈습니다. 원전 4기, 대단한 거지요?

그리고 다른 나라도, 오스트리아도 현재 신·재생에너지율이 한 50%를 넘고 있습니다. 국민들이 전체 쓰는 에너지의 23%를 신·재생에너지로 쓰고 있습니다. 좀 알고 계십니까?

○국무총리 황교안 예, 그런 신·재생에너지 개발을 위한 각국의 노력들이, 선진국의 노력들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한성 의원 그러니까 다른 나라를 지금 시간 관계상 다 언급은 못 하겠습니다마는 일취월장, 정말 장족의 발전을 하는 동안에 우리나라는 계속해서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증가시켜 오고 감축을 위한 노력은 하지 않았습니다. 감축을 위한 노력이라는 것은 바로 신·재생에너지를 개발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국무총리 황교안 신·재생에너지를 개발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계획한 대로는, 뜻대로는 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니다.

○**이한성 의원** 뜻대로 되지 않았지요. 거기다가 지금 원전은 적어도 화력발전소는 더 짓지 않겠다, 그러면서 원전은 2개 더 짓겠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마저도 세계적인 추세에 지금 안 맞는다…… 영국이 4년 동안에 원전 4기에 해당되는 태양광을 건설했습니다. 엄청난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할 수 있는데 우리는 왜 안 한 겁니까? 대단히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 예를 다른 나라를 다 들 수가 없습니다, 아주 일취월장, 아주 폭발적인 그런 증가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그 점은 원고를 총리께서 참고를 좀 해 주시고, 다 알고 계시겠지만.

그래서 앞으로는 이렇게 태양광발전이라든지 풍력발전을 통해서 전 세계, 아마 후진국은 좀 늦겠지만 적어도 선진국을 중심으로 에너지를 무료로 쓰는 시대가 올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원자력발전소가 당장은 쌀지 모르지만 해체하는 데 드는 비용은 원전 1기 해체할 때 수 기를 해체하는 비용이 들 것이다, 그러고도 안심을 못 한다, 그래서 원전은 점점 해체해 가는 중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태양광이나 풍력으로 40기, 80기, 100기 이렇게 할 수 있는 이런 선진국의 사례를 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것을 뭔가 근본적으로 새로 재검토해야 된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어떻습니까?

○**국무총리 황교안** 신·재생에너지가 산업화되기 위해서는 많은 기술의 발전이 필요한데 저희가 아직 그런 부분이 축적되지 못해서 많은 R&D를 통해서 기술 축적을 위한 노력들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의원님 말씀하신 그런 방향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한성 의원** 카터 대통령 사진 한번 띄워 주세요.

화면 띄웁니까?

(영상자료를 보며)

1979년도 6월 달에 카터 대통령이 백악관 옥상에 올라가서 태양광 발전을 기념하는 행사 사진입니다. 이 당시에 1kW/h 발전단가가 한 68달러, 엄청나게 비쌌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앞으로 이렇게 신·재생에너지로 간다’, 상징적인 행사를 했는데 레이건이 들어서면서 저 태양광발전기를 철거해 가지고 현재는 조지아 카터박물관에 가

있습니다.

어쨌든 카터는 그때 출발을 잘했고, 그 당시 68달러 하던 태양광발전 비용은 현재 30센트로 떨어져 있습니다.

외국이 그렇게 하니까 우리나라에서 이것을 앞서 간다면 얼마나 도움이 되고, 앞으로 기업이 공짜로 전기를 쓴다면 그게 보통 경쟁력 아니겠습니까? 그런 사회를 우리나라가 추구한다면 더 좋은 일 아니겠습니까, 어떻습니까?

○**국무총리 황교안** 태양광발전 시설을 지금도 계속 늘려가고 있습니다마는 아직은 기대에 못 미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한성 의원** 전기차도 마찬가지로, 이 점에 대해서는 시간 관계상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폭스바겐이 무너지고 테슬라는 완전히 뒀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들어가십시오.

○**국무총리 황교안** 예, 알겠습니다.

○**이한성 의원**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우리나라가 미래의 신성장 동력이자 지구환경을 살릴 신·재생에너지로 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규제도 상당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인내와 단합을 통해서 새로운 미래를 대한민국이 선도할 것을 기대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 정갑윤** 이한성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기 광명갑 출신의 새정치민주연합 백재현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재현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정갑윤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황교안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경기 광명갑 출신 새정치민주연합 백재현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국민행복 10대 공약’이라는 환상에 가려진 슬픈 대한민국의 현실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요사이 각종 언론에서 쓰이는 표현에서 가장 암울한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헬조선’이라는 단어입니다.

‘금수저’ ‘흙수저’로 표현되는 불평등, 세월호·메르스와 같은 국가적 재난에서조차 책임지지 않는 국가, 앞이 캄캄한 현실이 미래에도 전혀 개선되지 않으리라는 막막함, 이 모든 암울함을 국민들이 표현하기를 지옥 같은 대한민국, 헬조선

이라는 슬픈 표현입니다.

한 해 10만 명씩 폐업하는 영세 자영업자, 최저임금조차 받지 못하는 200만이 넘는 노동자들, 절벽으로 내몰리는 1577만 국민들은 이것을 좀 살려 달라고 박근혜 후보에게 표를 던졌습니다.

그러나 당신이 되고 나서 민생경제는 창조경제라는 휘황찬 구호에 가려졌습니다. 그토록 강조했던 경제민주화를 비롯한 사회적 약자를 위한 정책들은 하나둘씩 신기루처럼 사라졌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대통령이 되고자 국민행복 10대 공약을 제시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도 지키지 못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토록 신뢰를 강조했던 박근혜정부의 민낯입니다.

지키지 못한 10대 공약을 하나씩 보겠습니다.

첫 번째, 가계 빚을 줄이겠다고 했지만 가계부채는 1130조 원이 넘어섰습니다.

두 번째, 만 5세까지 국가 책임 무상보육을 하겠다고 했지만 누리예산 2조 1000억 중 5000억만 국가가 부담하고 나머지는 지방에 떠넘겼습니다. 지방교육재정이 파탄 났습니다.

세 번째, 고교 무상교육을 하겠다고 했지만 예산 한 푼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네 번째, 4대 중증질환 100% 국가가 책임지겠다고 했지만 일부만 보장되고 있습니다.

다섯째, 창조경제를 통해 새로운 일자리를 늘리겠다고 했지만 전혀 늘지 않고 고용안정 등 17개 고용지표, OECD 최하위 수준입니다.

여섯 번째, 근로자 일자리를 지키겠다고, 해고요건을 강화하겠다고 했지만 강화는커녕 쉬운 해고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일곱 번째, 공공부문부터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겠다고 했지만 비정규직 기간을 배로 늘리겠다고 합니다. 국민 배신입니다.

여덟 번째, 안전사회를 만들겠다고 했지만 세월호 참사, 메르스 사태로 우리의 소중한 아이들과 이웃을 잃었습니다.

아홉 번째, 경제민주화하겠다고 했지만 대기업들의 상권 침탈로 골목상권 자영업자는 다 죽어가고 있고 정부가 앞장서서 적합업종 법안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열 번째, 지역균형발전과 탕평인사를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소위 4대 권력기관이라고 불리는 검찰, 경찰, 국정원, 국세청의 핵심 보직 29명 중 영남 출신이 18명, 62%를 차지했습니다. 오히려 2년 전 42%보다도 20%가 늘었습니다. 국민

배신입니다.

반복되는 거짓과 정부에서 발표하는 것에 의문을 가지게 되면 중복이라고 낙인찍어 헐박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제 국민 앞에 점점 더 괴물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박근혜정부가 성공하기를 고대합니다. 국민 앞에 괴물이 되지 않으려면 청와대부터 헌법을 준수하고 국민들이 헌법대로 살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는 국민의 당연하고도 기본적인 요구입니다.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황교안 총리님 앞으로 나와 주세요.

총리, 국정 교과서에 대해서 얘기 좀 하겠습니다.

독일 나치시대에도 국정 교과서가 있었습니다. 일본 제국주의에도 국정 교과서가 있었습니다. 독재가 크게 치달았던 유신정권 시절에도 국정 교과서를 사용했습니다. 역사적으로 전체주의·제국주의를 하려 할 때, 전쟁을 하려 할 때 그리고 독재를 하려 할 때의 일입니다.

역사 왜곡을 했다고 국제적으로 비난받고 있는 일본 우익의 아베 정권조차도 역사교과를 국정 교과서로 한다는 얘기를 못 들었습니다. 전 세계에서 북한을 비롯한 소수 몇 국가만이 역사 교과서를 검정이 아닌 국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렇게 된다면 일본 아베 정권의 역사 왜곡을 우리가 비난할 수 있겠습니까? 올바른 교과서라는 용어로 둔갑시킨다고 해서 국민이 속을 것 같습니까? 1972년 유신헌법처럼 국민들을 속일 수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대통령후보 때는 국민행복, 국민대통합을 외쳤습니다. 대통령이 되고 나서서는 정권을 위한, 정파를 위한 국론 분열만을 시키고 있습니다.

세월호로 국민들을 슬픔으로 몰아넣고, 메르스로 국민들을 공포로 몰아넣고 이제 역사 왜곡으로 국론을 분열시키려고 합니다. 국민들이 일본의 역사 왜곡을 비난하는 것조차 부끄럽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총리, 무리수를 뒤 가면서 역사 교과서 국정화를 추진하는 그 이유가 도대체 뭘입니까? 솔직하게 대답하세요.

○국무총리 황교안 어제 교육부장관께서 자세히 설명을 했습니다마는 우리 학교에서 사용하고 있는 역사 교과서가 많은 왜곡이 있고, 또 그것으로 인해서 사회적 혼란이 야기될 수 있기 때문에……

○**백재현 의원** 왜곡의 구체적 사례 좀 얘기해 보실래요?

○**국무총리 황교안** 어제 말씀드렸다시피…… 예를 들면 북한에서 주장하고 있는 주체사상이 있습니다. 그 주체사상을 무비판적으로 게재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어린 학생들이 보면 어떻게 생각을 하겠습니까?

(「세습을 비판하는 거예요」 하는 의원 있음)

(「조용히 해, 조용히!」 하는 의원 있음)

(「증거를 대고 이야기하세요!」 하는 의원 있음)

또 6·25 전쟁에 대해서도 북한뿐만 아니라 남한도 책임이 있다, 이래서 6·25 전쟁의 발발이 남한에도 책임이 있는 것처럼, 이런 서술들이 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백재현 의원** 직접 보셨나요?

○**국무총리 황교안** 예, 봤습니다.

○**백재현 의원** 제가 본 것하고 많이 차이가 있어요.

또요, 아시는 대로 한번 얘기를 다 해 보세요. 시간은 충분히 드릴게요.

○**국무총리 황교안** 그것을 지금 이 시간에 다 얘기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들이 대표적인 것들이고……

(「얘기하세요. 얘기해 봐요. 아는 게 없잖아요, 총리?」 하는 의원 있음)

(「구체적으로 얘기해 봐요」 하는 의원 있음)

○**백재현 의원** 구체적으로 얘기해 보세요. 지금 얘기에 저는 동의하지 않지만,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 보세요.

○**국무총리 황교안** 답변을 할까요?

○**백재현 의원** 예.

○**국무총리 황교안** 아까 제가 두 가지를 말씀드렸습시다마는 6·25 전쟁 당시에 국군에 의한 양민 학살의 사례를 상세하게 소개한 교과서가 있습니다.

○**백재현 의원** 팩트가 아닌 내용이 있던가요?

○**국무총리 황교안**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교과서에서는 우리 남한군에 의한 학살만을……

○**백재현 의원** 지금 교과서가 팩트 아닌 게 실린 게 있다는 겁니까?

○**국무총리 황교안** 학살만을 이야기하고 있고 북한의 학살에 대해서는 소개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런 내용을 학생들이 읽는다면 어떻게 이해

를 하겠습니까? 이런 부분들이……

○**백재현 의원** 아니, 현행 교과서가 팩트가 아닌 내용이 있느냐고 묻는 거예요.

○**국무총리 황교안**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백재현 의원** 잘못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국무총리 황교안** 확인한 내용입니다.

지금 현재 사용되고 있는 교과서들에……

○**백재현 의원** 팩트가 아닌 것을 검정, 인정을 받을 수 있겠어요? 검정을 해 줬습니까?

○**국무총리 황교안** 그런 부분에 관해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남한의 양민 학살에 대해서는 상세하게 소개하고 북한의 사례는 소개하지 않는, 전혀 소개하지 않는 이런 교과서가 있습니다. 그러면 남한에서 양민 학살 사례가 있었던 것이……

○**백재현 의원** 팩트는 맞지만 해석이 좀 달라질 수는 있겠지요.

○**국무총리 황교안** 예, 그런 것이……

○**백재현 의원** 그런데 팩트를, 있는 사실을 확인하라는 거예요.

○**국무총리 황교안** 지금 그게 팩트가 아니겠습니까?

(「반쪽짜리 팩트니까 그렇지요」 하는 의원 있음)

(「실으려면 다 실어야지요. 북한이 양민 학살……」 하는 의원 있음)

○**백재현 의원** 솔직합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부의장 정갑윤** 자, 의원 여러분, 좀 진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재현 의원** 솔직하게 얘기합니다.

식민지 역사를 근대화의 초석으로, 출발로 만들려고 그리고 쿠데타로 이루어진 유신독재를 부국의 초석을 놓는 과정으로 후대에 가르치고 싶은 것 아니에요?

○**국무총리 황교안** 그럴 생각 전혀 없습니다. 없고, 만약 그런 시도가 있다면 제가 막겠습니다.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백재현 의원** 뿐만 아니라 내년 총선에서 친일·보수 세력의 결집을 염두에 둔 것 아니에요? 솔직하게 얘기하시는 게 맞습니다.

○**국무총리 황교안** 지금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백재현 의원** 총리에게 묻습니다.

황 총리가 2009년에 저술한 ‘집회시위법 해설’이라는 책에서 5·16 군사정변을 5·16 혁명이라고 기술했었지요? 맞지요?

총리께서 쓰신 책……

○국무총리 황교안 그 당시에 제가 쓰면서 그렇게 기술한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백재현 의원 헌법재판소는 1993년, 1995년, 2003년에 5·16을 쿠데타로 규정했고 대법원도 2011년 국가보도연맹 피해자들이 제기한 손해배상소송에서 5·16을 쿠데타로 규정했음에도 불구하고 총리께서는 정치적으로 다양한 평가가 역사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청문회에서 밝힌 바 있습니다.

맞지요?

○국무총리 황교안 제가 그 책을 쓸 때는 법안 제안설명을 보고 그 제안설명에 나와 있는 취지를 거기에다 기재한 것입니다.

○백재현 의원 그래서 지금도 역사적으로, 정치적으로 다양한 평가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고 계시나요?

○국무총리 황교안 여러 분들이 많은 의견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백재현 의원 청문회 때 그 소신을 그대로 갖고 있다 이 말씀인가요?

○국무총리 황교안 여러 분들이 여러 가지 의견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렸고, 그중에는 예를 들면 우리 교과서 중에는, 교과서에는……

○백재현 의원 법원의 판단이 낮잖아요?

○국무총리 황교안 지금 어떤 역사적 사건에 관해서 그것이, 법원의 어떤 판단이 어떤 특정 사안을 규율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의 의견을 제시하는 것이지요. 그런 많은 의견들이 있습니다.

○백재현 의원 자, 다시 한 번 물을게요.

총리님, 만약 국정 교과서가 만들어진다면 5·16 군사정변이라고 해야 할까요, 5·16 군사혁명이라고 해야 할까요?

○국무총리 황교안 지금 교과서에는 집필진을 다양하게 전문가들을 활용해서 그분들이 객관적인……

○백재현 의원 어떻게 표현해야 되냐고 묻는 거예요.

○국무총리 황교안 객관적인 사실에 맞는 그런 표현들을 역사적인 검토를 통해서……

○백재현 의원 바로 우리 황 총리 같은 분 때문에 국정 교과서를 만들면 안 되는 거예요.

평생을 법조인으로 사신 분이예요. 양대 최고 심급인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에서 법적 평가가 끝난 사안을 두고 법조인의 양심을 지키지 못하고 정치적 이해를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소신 있게 답변을 못 하시는 거예요.

○국무총리 황교안 지금 그 부분에 관해서는 나중에 전문가, 다수의 전문가들을 편집위원으로 그렇게 위촉하고 또 집필진으로 구성을 해서 객관적이고 균형 있는, 역사에 근거한 교과서를 만들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결과를 봐 주시고 그 과정에서 많은 의견을 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백재현 의원 쓸데없이 국론 분열시키지 맙시다. 과연 그 교과서가 정권의 이해와 무관하게 객관과 중립을 지킬 수 있겠는가. 유신을 찬양했던 그때 그 교과서가 다시 나오지 말라는 법이 있겠습니까?

○국무총리 황교안 유신을 찬양하는 교과서가 나올 수 없습니다. 그렇게 만들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백재현 의원 할 일 많은 대한민국, 더 이상 국론분열 그만하시고 포기하세요!

헌법의 기본원리는 삼권분립입니다. 집권 여당 원내대표자도 사퇴하게 한 국회법 파동 때에도 이미 드러난 일이지만 청와대가 입법권을 가진 국회의 권한을 침해하며 삼권분립을 무력하게 만드는 일들이 너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어요.

대표적으로 얼마 전 여야 대표가 합의했던 안심번호 국민공천제에 대한 청와대의 간섭입니다. 청와대는 역선택, 조직선거, 신빙성, 졸속합의라는 근거를 들어 반대했습니다. 김무성 대표의 말씀처럼 다 틀렸어요. 중대한 삼권분립 위반입니다.

경선에 관한 문제이니 각 정당에서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는 문제이고 입법이 필요한 사항이니 국회가 결정할 문제입니다. 더구나 안심번호와 관련된 선거법 개정은 양당 대표들의 합의하에, 양당 대표들의 합의 전에 이미 정개특위 법안소위에서 여야 합의 처리된 바가 있습니다.

총리, 이 합의된 내용 보셨어요?

○국무총리 황교안 예, 봤습니다.

○백재현 의원 보고받았습니까?

○국무총리 황교안 이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백재현 의원 내용을 어떻게 알고 있어요?

○국무총리 황교안 예?

○**백재현 의원** 설명 한번 해 주세요.

○**국무총리 황교안** 지금 무슨……

○**백재현 의원** 합의된 내용을……

○**국무총리 황교안**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내용들이 포함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백재현 의원** 내가 그 내용 설명 안 드렸는데요. 어떤 내용으로 합의가 됐는지 얘기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보셨다니까.

○**국무총리 황교안** 어떤 부분에 관해서 여쭙 보시는지, 많은……

○**백재현 의원** 안심번호제도를 도입할 때 어떻게 여야가 법안소위에서 합의가 됐는지 합의 내용을 알고 계시냐고 묻는 겁니다. 알고 있는 대로 얘기를 해 주시라고요.

○**국무총리 황교안** 여야 대표 간에 합의한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소위의 합의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파악을 아직 못 하고 있습니다.

○**백재현 의원** 보고 못 받으셨어요?

○**국무총리 황교안** 예.

○**백재현 의원**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법안소위에서 통과된 내용 대단히 중대하고 대통령도 관심 표명한 내용인데 총리께서 그 내용에 대해서 정확히 알고 얘기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국무총리 황교안** 법안소위의 통과 내용에 대해서 앞으로 이제 법제화되는 과정에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재현 의원** 바로 보고를 받아 보세요.

제가 좀 설명을 드릴게요. 역선택 가능성을 말합니다. 안심번호가 아니라 이미 DB화된 전화번호로 하는 경우 역선택이 더 높아져…… 제가 정개특위입니다. 정개특위 위원이에요.

이를 해결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여야 동시 조사예요. 조직선거, 범위가 적을 때 조직선거 가능한 것입니다. 선거권자가 범위가 적을수록 쉬운 것이지요. 그래서 대의원, 당원, 기존 여론조사 방식, 안심 여론조사 이런 방식으로 가는 것이 훨씬 더 조직선거가 불가능한 거예요.

신빙성을 말합니다. 기존 여론조사는 확보한 DB를 기반으로 연락을 취하기 때문에 조작이 가능해요. 훨씬 더 취약한 것이지요.

줄속 합의 말합니다. 안심번호는 선거에 가장 전문가라고 할 수 있는 선관위가 제안한 사항이에요. 사실은 지선 때에도 도입하려고 준비했던 거예요. 그리고 국회 정개특위 소위에서 여야 간

에 서로 심도 있게 심의하고 그 문제점을 해소해서 합의한 내용입니다.

안심번호제는 그저 도구에 지나지 않는 거예요. 가장 비용이 적게 들고 가장 정확하게 민심을 반영하고 가장 갈등이 적게 하는 도구가 안심번호제도입니다. 그렇게 만들겠다는 게 국회의 판단이었어요. 그래서 정개특위 법안소위에서는 여야가 합의로 처리하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청와대가 맞지도 않는 근거를 들면서 그 판단을 짓밟는 거예요.

이러한 입법사항에 대해 청와대 월권이 자꾸 이루어진다면 헌법상 삼권분립에 크나큰 큰 위협이 될 것입니다. 청와대와 정부에서는 헌법을 준수하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들어가지지요.

정종섭 장관님!

올해 8월 새누리당 국회의원 연찬회 만찬장에서 ‘총선!’ ‘필승!’을 외친 장관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행동은 명백한 공직선거법 85조, 9조 위반이에요.

장관 이전에 헌법학자로서 양심에 비추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자치부장관 정종섭** 의원님 말씀 대단히 감사합니다.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듯이 사실은 참 생각지도 않은 일이 갑작스럽게 발생을 했고 그 점에 관해서는 제가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렸……

○**백재현 의원** 반성하는 거지요?

○**행정자치부장관 정종섭** 예.

○**백재현 의원** 국민 앞에 사과하세요.

○**행정자치부장관 정종섭** 그것은 제가 저번에 말씀하듯이 의원님뿐만 아니라……

○**백재현 의원** 아니, 지금 이 시점에 국민 앞에……

○**행정자치부장관 정종섭** 국민들께도 그런 논란을 불러일으킨 데 대해서 대단히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백재현 의원** 경주 총선에 나가십니까?

○**행정자치부장관 정종섭** 저는 지금 행정자치부장관이기 때문에 제 일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백재현 의원** 그런데 교부세를 경주에 100억을 썼더라고요.

○**행정자치부장관 정종섭** 그것은 아마 사실관계가 다를 겁니다.

○**백재현 의원** 저는 19살 때 9급 공무원으로 시작을 해서 지방자치가 30년 만에 부활될 때 기초의원, 광역의원, 광명시 단체장 민선 2기·3기 그리고 국회의원 18대·19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무원들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잘 알고 있어요. 대다수 공무원들은 중립을 지키려고 부단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행자부장관은 선거의 주무관청이고 경찰청을 관할하는 행정부 수반이기 때문에 대단히 처신을 잘해야 됩니다. 여당에 잘 보이기 위해서 새누리당의 총선 필승을 외쳤다면 대단히 잘못된 것입니다.

반성하신다니까 더 이상 말씀 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재정이 대단히 어렵습니다. 무엇 때문에 어려운지 아세요? 일은 내려보내고 돈은 안 주기 때문에 그래요. 재정수입 8 대 2 구조를 고치지 못하고 지출은 6 대 4 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행자부는 매년 590억 원에 불과했던 인센티브 예산을 2014년에는 3488억으로 그리고 2015년에는 8052억으로 늘렸어요. 이것은 중앙정부가 돈을 가지고 지방을 통제하겠다는 내용 아니겠습니까? 인정하시지요?

○**행정자치부장관 정종섭** 의원님께서도 옛날에 다 공직생활 하셨듯이 행정자치부가 지방자치단체를 통제한다는 것은 이 시대에 맞지도 않습니다.

○**백재현 의원** 예산이 이렇게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 이유는 그런 형태로 나타난다는 것이지요.

○**행정자치부장관 정종섭** 예, 국고보조금 사업에 대해서는 다소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정부에서 다시 재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백재현 의원** 제가 지방독립세에 대한 것을 법안을 대표발의하면서 연간 9800억 원 그리고 작년에 담뱃값을 올리면서 약 3200억, 약 1조 3000억의 지방재정을 확충한 바가 있습니다. 대단히 많이 싸웠습니다, 기재부하고도.

행자부가 좀 더 적극적으로 지방재정을 확충하겠다는 방법이 얼마든지 있어요. 그런 노력을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행정자치부장관 정종섭** 의원님 아시다시피 우리 박근혜정부 출범 이후에 그전 정부하고 비교해서 이미 4조 원 이상이 지방자치단체에 더 내

려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행정자치부는, 여기에서도 여러 번 제가 말씀드렸듯이 어쨌든 여러 가지 다각도로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에서 좀 확충이 되도록 제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백재현 의원** 우리 정종섭 장관은 헌법학자이시니까요, 117조 118조만이 지방자치 조항들입니다. 이 조항 가지고는 대단히 부족하다는 데 동의하시지요?

○**행정자치부장관 정종섭** 예, 다소 그렇습니다.

○**백재현 의원**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에서 지방분권 개헌 16개 시도 순회토론회를 하고 있는 것 알고 계시지요?

○**행정자치부장관 정종섭** 예, 제가 듣고 있습니다.

○**백재현 의원** 새로운 헌법이 만들어진다면 지방분권과 지방자치제도 조항을 확실하게 넣어야 된다고 동의하시지요?

○**행정자치부장관 정종섭** 글썄, 개헌 문제가 또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적절하지 않지만 우리 백 의원님 말씀하시듯이 지방분권이 더 강화돼야 되는 점에 대해서는 저는 평소에 우리 백 의원님과 같이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백재현 의원** 행자부가 지방재정 확충하는 데 최선을 다해 주기 바랍니다.

들어가십시오.

○**행정자치부장관 정종섭** 예, 더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재현 의원** 박인용 우리 처장님 오실래요?

박인용 안전처장관님!

자료를 줘서 아시겠지만 4.0이 넘는 B/C 분석이 나오는 중에 사업이 안 되고 있는 것이 목감천정비사업입니다. 국토부가 치수사업으로 해야 되느냐 방제사업으로 해야 되느냐 때문에 앓고 있는데 목감천사업을 방제사업으로 빨리 하십시오. 그렇지 않으면—4.65가 나오는 사업이니까요—큰 재난이 닥칩니다. 30만 명이 수해를 입을 가능성이 큼니다.

검토해 주시겠습니까?

○**국민안전처장관 박인용**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은 목감천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 사항은 국토부에서 지금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안양천권역 하천기본계획에 따라서……

○**백재현 의원** 치수사업으로 하면 5년, 10년 걸려요. 방제사업으로 돌려야만이 빨리 해결할 수 있다고 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국민안전처장관 박인용**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용역사업이 계속되고 있는데 이것이 완료되면 추진되는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안전처에서도 지원할 분야가 있는지 확인해 가지고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갑윤 부의장, 정의화 의장과 사회교대)

○**백재현 의원** 방재사업으로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들어가지지요.

총리님, 다시 한 번 뵙시다.

‘헌법 1조의 가치를 지키고 싶습니다’라는 말씀을 하신 적이 있지요, 원내대표께서요? 대한민국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어떤 신문과, 여론조사를 해 보니까 자본·돈이 1위예요. 대통령·청와대가 2위이고 3위가 국민이 나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런 의견에?

○**국무총리 황교안** 헌법의 가치, 국민에게 주권이 있다고 하는 이 가치가 지켜져야 되고 그런 부분들이 국민들 사이에도 공유돼야 되고 우리 모든 국가의 구성원들이 그 부분에 존중하는 그런 분위기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백재현 의원** 그렇습니다.

국민들은 돈이나 권력에 비하면 참으로 작기만 합니다. 국민들은 차별에 맥을 못 추는 정부나 대통령 눈치만 보는 여당을 보면서 그렇게 느꼈을 것입니다.

충격적이지지요, 총리도?

○**국무총리 황교안** 정부가 좀 더 노력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백재현 의원** 대한민국은 인치의 나라입니다. 인치의 나라가 아닙니다, 헌법을 최고 규범으로 하는 법치의 나라입니다. 헌법을 정부는 지켜야 됩니다. 그리고 국민들이 헌법대로 살 수 있도록 해 줘야 됩니다.

더 나아가서는 민주주의와 인권을 신장시키고 살 만한 국가를 만들기 위해서는 수명을 다한 87년 체제의 제왕적 대통령제의 헌법은 개정돼야 합니다.

새누리당과 박근혜정부는 헌법 개정에 시급히 나서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들어가지지요.

○**의장 정의화** 백재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울 서초갑 출신의 새누리당 김희선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선 의원**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정의화 국회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황교안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서울 서초갑 출신 새누리당 김희선 의원입니다.

제19대 마지막 정기국회에 대정부질문을 하게 됨을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오늘 정치 분야 질문에서 제19대 국회를 식물 국회, 무능 국회, 무기력 국회라는 오명을 쓰게 한 원인으로 지적된 국회 선진화법에 대해서 평생 법조인으로 살아온 본 의원의 소견을 말씀드리고 선배·동료 의원님들과 함께 과연 그 개선 방안은 없는지 생각해 볼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어느 정치학자로부터 제헌국회 때부터 19대 국회까지 정치개혁 논의가 안 된 적이 없는데 그 이유는 매번 개혁은 있었지만 본질은 건드리지 못하고 주변만 개혁했기 때문이라는 말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본 의원은 그 말에 동의합니다.

국회 선진화법에 대한 질문을 하기 전에 제가 평소 생각했던 검찰 개혁, 국정원 개혁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문하겠습니다.

법무부장관 나와 주십시오.

장관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검찰도 개혁 얘기가 나왔지요?

○**법무부장관 김현웅** 예, 그렇습니다.

○**김희선 의원** 검찰에 대한 국민의 불만과 불신 그 핵심은 뭐라고 보십니까?

○**법무부장관 김현웅**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법 집행의 공정성에 대한 우려가 불만·불신의 핵심인 것 같습니다.

○**김희선 의원** 그렇습니다. 검사들이 제일 싫어하는 말이 있지요? ‘정권의 시녀’ 이 말로 상징되는 검찰의 중립성 논란 또 국민들로부터 유전무죄 무전유죄라고 불리는 법 집행의 공정성 논란 이것이 국민들의 검찰에 대한 불만의 핵심이다 이렇게 보는데 동의하시는 것이지요?

○**법무부장관 김현웅** 예, 그렇습니다.

○**김희선 의원**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개혁의

핵심 어디에 있습니까?

○**법무부장관 김현웅** 검찰 개혁에 대해서는 다양한 견해들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마는 국민의 눈높이에서 공정하고 투명하게 검찰권을 행사함으로써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희선 의원** 저는, 다 맞는 말씀인데 그 중심에는 인사가 있다고 봅니다. 검찰 인사의 중립성과 공정성을 확보하는 것 이게 핵심이라고 보고요.

자, 그런 의미에서 박근혜정부의 검찰 인사, 과거 문민정부 이후 지금까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장관님?

○**법무부장관 김현웅** 현 정부 들어서 검찰총장 후보추천위원회를 가동하고 또 검찰인사위원회의 심의 기능을 대폭 강화하는 등으로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가 되도록 지금 노력을 해 왔습니다.

앞으로도 검찰 인사가 능력과 인품 또 업무 실적 등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희선 의원** 본 의원도 장관의 평가 수용합니다.

그런데 제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지금 장관의 평가가 아닙니다. 앞으로 2년 반 뒤 박근혜정부가 끝났을 때 5년 차 검사, 10년 차 검사, 15년 차 검사들이 ‘정말 박근혜정부에 와서 비로소 검찰 인사가 제대로 잡아졌다, 달라졌다 그리고 박근혜정부에서 검사한 것이 행복했다’ 이렇게 느낄 수 있도록 장관님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부장관 김현웅**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희선 의원** 본 의원도 25년 검사 생활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름대로 인사 혜택을 많이 받은 사람 중의 하나입니다. 하지만 제 경험으로 볼 때 인사 때마다 ‘내가 어디서 태어났다’, ‘내가 어느 고등학교를 나왔다’ 심지어는 ‘내가 대학이 어디인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때 아마 장관도 비슷한 경험을 했을 것으로 제가 생각을 합니다.

정부가 바뀔 때마다 검사들끼리 모여 앉아서 다음 정부에서는 누구누구가 잘 나가겠구나 이런 이야기를 하고 또 그것이 현실화되는 것을 보면서 저는 과연 선진국에서도 이런 일이 있을까, 우리 후배들은 정말 이런 세상에서 살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본 의원은 이것만 해결이 돼도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 또 법 집행의 공정성은 저절로 확립된다 그렇게 믿습니다.

유념해 주시고요.

장관님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국무총리께 질문하겠습니다.

총리님, 국정원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국정원은 대통령 직속기관이기는 하지만 총리께 질문하겠습니다.

국정원에 대한 우리 국민들의 가장 큰 불만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국무총리 황교안** 역시 국정원의 정치적 중립성에 관해서 많은 걱정들이 있고……

○**김희선 의원** 그렇지요.

○**국무총리 황교안** 논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희선 의원** 그 부분하고 또 간첩을 제대로 잡는 것이냐, 북한 정보는 제대로 알고나 있는 것이냐 하는 그 전문성 부족 이거 아니겠습니까?

○**국무총리 황교안** 같은 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김희선 의원** 그것을 위한 개혁의 본질도 결국은 인사입니다. 더군다나 국정원 직원은 검찰하고 달리 계급정년제 대상인 것 총리님 알고 계십니까?

○**국무총리 황교안** 예, 알고 있습니다.

○**김희선 의원** 10·26 이후에 1981년부터 국정원 직원들이 계급정년제 대상이 되었습니다. 더군다나 참여정부 때 계급정년 연수를 대폭 단축했고 다행히 이명박 정부에서 조금 원상회복을 했습니다마는 저는 원천적으로 국정원 직원 직종이 계급정년제하고는 맞지 않는 직종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국정원 차장 시절에 국정원 직원들이 검찰과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인사에 예민하고 승진 때마다 혈안이 되어 있는 것을 제가 목도했습니다. 바로 그 원인은 계급정년제에 있습니다.

20대 중반에 들어와서 음지에서 일하면서 승진을 못 하면 50대 초반에 퇴직을 하고 그 후에 취직도 힘듭니다. 항상 승진을 해야 한다는 압박감에 정치권에 줄대기를 하고 정보 장사를 하고 정권 바뀔 때마다 도박을 합니다.

직원들이 이렇게 신분이 불안정한 것이 직원들의 이런 일탈행위의 원인이 되고 그것이 바로 국정원의 비전문성, 전문성 약화 또 무력화로 이어

집니다.

총리께서 국정원을 직속하지는 않지만 대통령께 직급정년제 폐지를 건의해 주십시오. 박근혜 정부에서 정말 제대로 된 국정원 개혁이 되는 것을 보고 싶습니다. 말씀해 주시지요.

○**국무총리 황교안** 의원님의 걱정을 적절한 방법으로 같이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희선 의원** 법무부장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장관님, 통신비밀보호법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법관 영장을 받고도 휴대폰을 감청 못 하는 나라, 우리 아이가 유괴되어서 잡혀가면서 납치범이 협박을 하는데 법관의 영장을 발부받고도 통신사에 시설이 구비가 되어 있지 않아서 감청을 못 하는 나라, 대한민국 외에 전 세계에 또 있습니까?

○**법무부장관 김현웅** 미국 영국 독일 등 주요 선진국들에서는 통신업체의 감청설비 구축을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또 그 불이행에 대해서 제재를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희선 의원** 이 통신비밀보호법이 개정이 안 돼서,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법관의 영장을 가지고도 감청을 못 해서 수사에 많은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제가 잘 알고 있거든요. RO 사건, 왕제산 사건 같은 간첩 사건 또 지난 세월호 사건 때 유병언 검거 때도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제가 국정원 차장으로 재직하면서 국정원이 앞으로는 더 이상 불법 감청을 할 수 없다 하는 것을 제가 목도했습니다. 참여정부 시절에 국정원 원장 두 분이 불법 도·감청으로 구속이 되고 그 당시 국정원에 있던 감청장비가 폐기됐습니다.

그래서 국정원에서 불법 감청을 하려면 그 장비를 새로 들여와야 되는데 어느 원·차장이 감히 이런 장비를 새로 구입하라고 지시할 수 있습니까?

이 통비법이 개정이 되면 통신사에 이제 감청 장비를 설치해야 되는데 그러면 그 장비를 이용해서 남용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본 국정원 분위기로 볼 때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이제는 그런 지시를 하더라도 언젠가는 그게 노출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보호해 줄 사람은 대한민국에 아무도 없다는 것을 직원들이 누구보다 잘 알고 있

습니다.

제가 그래서 국정원 차장 시절에 이 법 개정을 위해서 동분서주하면서 이렇게 설명을 드렸는데도 워낙 불신이 커서 개정이 되지 않았어요.

장관님, 이 법이 개정이 되더라도 통신사에서 감청장비를 새로 구입, 구비해야 되고 그 기간이 2년이 걸리는 것 장관님 알고 계십니까?

○**법무부장관 김현웅** 휴대전화 감청설비 구비의무가 법제화되더라도……

○**김희선 의원** 그 시설 하는 데 2년이 걸립니다.

○**법무부장관 김현웅** 시설을 실제로 구비하기까지는 상당한 기간이 소요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김희선 의원** 그렇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이 자리에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 건의드립니다.

19대 국회에서 이 법을 개정해 주십시오.

시행 시기는 2년의 준비기간을 거쳐서 누가 정권을 잡을지 모르는 2018년 3월부터 시행할 것을 건의합니다. 장관도 야당 의원님들께 이런 논리로 적극적으로 설득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본론인 국회 선진화법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장관님, 국회 선진화법에 대해서 작년 9월 달에 한번에서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 제기했고 금년 1월 30일에 새누리당에서 권한쟁의심판 청구한 것 알고 계시지요?

○**법무부장관 김현웅** 예, 알고 있습니다.

○**김희선 의원** 이 헌법소원이 제기되면 헌법재판소에서 법무부에 공식으로 의견 내라고 제출하지요, 요청이 오지요?

○**법무부장관 김현웅** 의견을 제출할 것인지에 대해서……

○**김희선 의원** 아니아니, 그러니까 통보가 왔지요?

○**법무부장관 김현웅** 통보가 왔습니다.

○**김희선 의원** 그것 제출했습니까?

○**법무부장관 김현웅** 아직 제출하지는 않았습니다.

○**김희선 의원** 왜 안 했습니까?

○**법무부장관 김현웅** 국회의 내부적 의사결정 절차에 관련한 사안이므로 법무부에서 의견을 제출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신중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희선 의원** 국회 선진화법 문제되는 게 두

개의 규정입니다. 2개의 규정인데, 즉 국회의장의 직권상정 권한에 전이나 천재지변 외에는 교섭단체대표의 합의가 있는 경우에만 본회의에서 표결이 가능하다는 규정……

○**법무부장관 김현웅** 그렇습니다.

○**김희선 의원** 또 패스트 트랙, 즉 상임위에 계류된 법안을 신속처리대상안건으로 지정하기 위해서는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는 조항, 그렇지요?

○**법무부장관 김현웅** 그렇습니다.

○**김희선 의원** 우리 헌법 49조는 국회는 헌법 또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렇게 되어 있지요?

○**법무부장관 김현웅** 예, 그렇습니다.

○**김희선 의원** 그러니까 형식적으로만 보면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으면 과반수에 예외를 규정할 수 있는 것처럼 보이지요?

○**법무부장관 김현웅** 예, 그렇습니다.

○**김희선 의원** 그런데 헌법에서 이렇게 법률에 위임을 할 때 그 내재적 한계라는 게 있지요?

○**법무부장관 김현웅** 예, 그렇습니다.

○**김희선 의원** 우리 헌법에 일반의결정족수를 가중할 수 있는 경우 그게 어떤 경우가 있습니까?

○**법무부장관 김현웅** 우리 헌법 49조에서는 헌법 또는 법률에서 특별한 규정이 있으면 과반수의 의결 원칙에 예외를 둘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 국회법에서도 의원자격 상실 같은 경우 중요한 사안에 대해서 가중의결정족수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헌법에서는 대통령 탄핵, 헌법 개정, 의원 제명 이런 경우에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김희선 의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중요한 사안의 경우에만 과반수에 대한 예외를 인정하는 거지요.

그런데 이 선진화법은 사안의 경중에 관계없이 교섭단체대표 간 합의가 없으면 모든 법안에 대해서 본회의 표결이 불가능합니다. 19대 국회의 두 개의 교섭단체, 즉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의 의석수를 합치면 97%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97% 의원들의 동의가 없으면 본회의 표결이 지금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 선진화법은 대한민국헌법이 예상하고 있는 위임 입법의 내재적 한계를 벗어난

과잉 입법이다 본 의원은 이렇게 생각하는데 장관님은 어떻게, 장관님도 법조인이시니까 그에 대한 의견 어떻습니까?

○**법무부장관 김현웅** 국회 선진화법이 가중의결요건으로 국회의원의 심의표결권을 침해해서 위헌이라는 그런 견해도 있고 또 통상의 심의표결이 가능해서 합헌이라는 그런 견해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회의 내부적 의사결정 절차에 관한 사안으로서 현재 헌법소원과 권한쟁의심판이 계류 중에 있어서 법무부장관이 이에 대해서 직접 언급하는 것은 적절치 않습니다만 미국 하원의 경우 위원회가 30일 이상 법안 계류 시 재적의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서 위원회의 심사를 배제할 수 있도록 규정이 되어 있고 또 일본의 경우에는 특히 긴급을 요할 경우 과반수 의결을 통해 본회의에서 직접 심의가 가능하도록 하는 제도를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소관위에서 안건이 장기간 교착 상태에 있는 경우에 본회의에서 심의표결 할 수 없는 그런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제도적 보완책에 대해서 국회 차원의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김희선 의원** 장관님, 우리 헌법에 교섭단체라는 용어가 나오니까?

○**법무부장관 김현웅** 헌법에는 규정돼 있지 않습니다.

○**김희선 의원** 나오지 않지요?

○**법무부장관 김현웅** 예.

○**김희선 의원** 우리 헌법은 개개 국회의원을 헌법기관으로 규정하고 있지요?

○**법무부장관 김현웅** 그렇습니다.

○**김희선 의원** 그러니까 교섭단체라는 것은 각 정파의 협상을 위해서 편의적으로 만든 기관입니다. 그렇지요?

○**법무부장관 김현웅** 그렇습니다.

○**김희선 의원** 그런데 그 대표가, 헌법에도 없는 교섭단체대표가 개개 국회의원의 의사결정을 대리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교섭단체대표가 합의가 없으면 본회의 표결을 못 하게 하는 이것은 국회의원들의 우리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심의표결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보는데요. 아까 장관님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으니까 답변은 생략하시기로 하고요.

만약 20대 국회에서 20명으로 구성된 교섭단체가 탄생한다고 가정하십시오. 그러면 300명 정원

의 국회가 20명의 교섭단체 대표의 동의 없이는 어떤 법의 표결도 본회의에서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본 의원은 또 선진화법 처리 과정에도 절차적 정당성이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무슨 말씀이나 하면 선진화법 18대 국회에서 통과시킬 때 192분의 국회의원이 참여하셨는데요. 그 당시 재적의원의 42.5%, 127명이 찬성을 했습니다. 무슨 말씀이나 하면 재적의원 과반수도 안 되는 의원들이 찬성을 한 거거든요. 앞으로 사실상 97% 또는 재적의원 5분의 3의 요건을 필요로 하려면 최소한 18대에서 그 정도 의원들은 찬성을 했어야 그나마 절차적으로 정당하다, 본 의원은 이렇게 믿고 있거든요.

그다음에 19대 국회에서 선진화법 운영이 어떻게 됐습니까? 물론 폭력 국회는 없어졌습니다. 하지만 ‘입법 홍정’ ‘끼워 넣기’ ‘발목 잡기’ 이런 새로운 용어들이 탄생을 했거든요.

물론 의회주의는 대화와 타협을 전제로 합니다. 하지만 19대 국회가 보여 준 대화와 타협 그 모습은 우리가 선진 의회민주국가에서 보는 대화와 타협하고는 내용이 다릅니다.

아까 장관 그 말씀, 이게 무슨 국회에서 처리한 규칙에 관련된 규정이고 이래서 아직까지 의견을 제출하지 않았다는 말씀, 저는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19대 국회, 정말 선진이라는 말이 무색할 정도로 법안 통과에 엄청난 우여곡절을 겪어야 했습니다. 정부에서 급하게 요구하는 경제활성화법 몇 개를 통과시키려면 어마어마한 산통이 필요했습니다.

이 문제가 단순히 국회법 어느 한 조항이 위헌이냐 아니냐 하는 문제라면 제가 아까 장관님 답변 수용하겠습니다. 이해하겠습니다. 하지만 이 선진화법은 우리 대한민국에서 앞으로 만들어지는 모든 법에 해당이 되고 우리 대한민국 의회민주주의의 미래하고 관련된 사안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관, 다시 한 번 검토하시고 법무부에서 정식으로 의견을 제출해 주십시오 부탁드립니다. 앞으로 헌법재판관들을 만나실 때 이런 부분에 대한 의견을 꼭 좀 얘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법무부장관 김현웅** 예, 신중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희선 의원** 들어가 주세요.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국회 선진화법을 해결하는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헌법재판소에서 하루빨리 결정을 해 주는 것과 우리 국회에서 스스로 결자해지를 하는 것입니다. 헌법재판소에서 19대 임기 내에 결정을 내려 주면 좋겠지만 그것이 안 되면 이번 국회에서 개정해야 합니다. 과반수를 차지하고 있는 새누리당의 소속 국회의원으로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정상적인 의회민주주의를 위해서 이 법을 19대 국회에서 개정하고 시행 시기는 누가 다수당이 될지 모르는 20대 국회가 시작하는 2016년 5월 30일부터 할 것을 제안합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은 평생 대한민국 검찰·국정원·국회에서 근무했습니다. 공교롭게도 제가 근무했거나 근무하고 있는 기관이 모두 개혁의 대상으로 꼽히는 기관이지만 한 번도 이 기관에 근무한 것을 부끄럽게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다만 본 의원은 제가 근무했던 검찰·국정원·국회가 개혁 대상이 아니라 진정으로 국민들로부터 사랑받고 신뢰받는 기관으로 거듭나기를 바라는 충정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정의화** 김희선 의원님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동대문을 출신의 새정치민주연합 민병두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병두 의원** 총리님 나오세요.

저는 식민지 근대화론에 입각한 식민사관도 반대하고 북한을 찬양하는 종북사관도 반대합니다. 그러나 더더욱 무섭고 더더욱 안 되는 것은 획일사관, 주입식 사관이라고 생각합니다.

총리, 동의하십니까?

○**국무총리 황교안** 예, 그런 사관이 지배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민병두 의원** 획일사관, 주입식 사관이 지배하면 안 된다는 것에 동의하십니까?

○**국무총리 황교안** 균형 있는 사관이 우리 어린 학생들에게 교육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민병두 의원** 그런데 왜 국정 교과서를 만드시지요?

○**국무총리 황교안** 국정 교과서가 편향되고 왜곡된 그런 사실들을 잘못 전하고 있는 현행 교과서 체계의 문제를 개선해서 균형 있고 바른 그런

교육을 학생들에게 하자 이런 취지로 추진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민병두 의원** 역사 교과서에 김일성 주체사상을 미화한 부분을 확인했습니까?

○**국무총리 황교안** 김일성 주체사상을 무비판적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민병두 의원** 총리, 이교도 심판할 때 ‘스스로 적그리스도라고 하며 재림 예수라고 하며……’ 인용을 하지요? 판결문에도 주장을 인용하지요? 그러나 결론은 다르지요. 단 한 문장을 인용하고 대부분을 비판한 것에 대해서 어떻게 그런 결론을, 해석을 하실 수 있습니까?

○**국무총리 황교안** 단 한 문장을 보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고 교과서 전체를 해당 부처에서 전문가들이 충분히 검토를 해서 전체적인 취지가 역사를 왜곡하고 있다고 판단되는 부분을 지적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민병두 의원** 6·25가 북침이라고 기술한 교과서가 있습니까?

○**국무총리 황교안** 어떤 교과서에 보면 아까도 제가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북한뿐만 아니라 남한도 그 부분에 대한 책임이 있다 이런 취지의 기재가 있는 교과서가 있습니다.

○**민병두 의원** 저는 그 교과서를 다 읽어 봤습니다.

(교과서를 들어 보이며)

그 어느 교과서도 그렇게 기술하지 않고 있습니다.

총리의 주장이 사실이라고 한다면 황우여 교육부장관과 전직 장관 그리고 교육부의 국·실장, 그리고 수정위원들을 북한 찬양·고무죄로 긴급체포할 용의가 있습니까?

○**국무총리 황교안** 어느 교과서를 제가 보고를 받아 보니까 ‘동기로 본다면 인민공화국이나 대한민국이나 조금도 다를 바가 없다’, 6·25 전쟁의 원인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들이……

○**민병두 의원** 그래서 황우여 장관에 책임을 묻고 관련 국·실장들을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긴급체포할 용의가 있습니까?

○**국무총리 황교안** 국가보안법 적용 여부에 대해서는 충분한 검토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냥 단적으로 어느 한 사실을 가지고 적용 여부를 말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민병두 의원** 그렇게 국기를 문란하고 지금 정

부의 주장대로 수십만, 수백만의 학생들이 그런 책을 읽었다고 한다면 황우여 장관을 포함해서 국·실장들을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체포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국가가 방치해도 되는 겁니까?

○**국무총리 황교안** 국가보안법은 적용을 위한 여러 조건들이 필요하고, 지금 현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역사에 대한 오해와 곡해 이런 부분들을 바로잡기 위해서 교과서 체제 개편을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민병두 의원** 그러한 기술이 사실이 아니라고 한다면 허위사실 유포로 명예훼손죄에 해당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무총리 황교안** 어떤 기술 부분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민병두 의원** 정부에서 주장하는 북한 미화 이런 기술 내용이 없다고 한다면 허위사실 유포로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보지 않습니까?

○**국무총리 황교안** 그런 전체로 제가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마는 정부에서는 책임감을 가지고 어린 학생들이, 미래의 학생들이 잘못된 교육을 받는 것을 바로잡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민병두 의원** 총리님, 내년도 초등학교의 사회 교과서에 의병을 ‘학살하고’가 아니라 ‘토벌하고’, 쌀을 ‘수탈하고’가 아니라 ‘수출하고’, 을사늑약을 ‘강압하고’가 아니라 ‘성공리에 마무리하고’ 이렇게 침략을 미화한 기술이 있는 것을 아십니까?

○**국무총리 황교안** 지난번 어느 교과서에서 그런 부분들이 지적이 돼서 교육부에서 지도를 통해서 그 부분을 개선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민병두 의원** 아직 개선되지 않고 있습니다. 제가 총리께 내년도 교과서를 드리겠습니다. 참고하십시오.

(교과서 전달)

국정 교과서의 최종 목표는 식민지사관을 합리화하고 5·16을 혁명이라고 하고 유신을 한국적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으로 귀착되는 것은 아닙니까?

○**국무총리 황교안** 조금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현재 우리의 상황에서, 우리 국가의 상황에서 방금 의원님 말씀하시는 그러한 역사적 사실의 왜곡, 의도적인 정국의 미화 이런 것은 가능하지 않습니다. 불가능합니다. 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되지 않도록 할 것입니다.

○**민병두 의원** 생각을 주입하고 사상을 주입하

는 정권은 커다란 역사적 재앙을 만들었습니다. 나치의 소년 나치, 킬링필드, 홍위병, 모두 하나의 사상이 주입된 비극입니다. 그 어느 국가도, 어느 정권도 하나의 사상을 주입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동의하십니까?

○**국무총리 황교안** 지금 정부가 추진하는 것은 하나의 사상을 주입하려고 그러는 것이 아닙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객관적인 사실에 입각하고 또 헌법적 가치에 충실한 균형 잡힌 역사 교과서 그것을 개발하는 것이 정부의 목표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집필진도 균형 있게 많은 집필진이 참여하고 많은 전문가들이 의견을 모아서 작성하도록 그렇게 준비·진행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민병두 의원** 총리님, 지금이 건국 70주년입니까, 광복 70주년입니까?

○**국무총리 황교안** 그런 부분에 관해서는 지난 번에도 많은 논란이 있었는데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 않도록 하겠습니다.

○**민병두 의원** 헌법에 임시정부 수립을, 정통성을 계승한다고 되어 있지요?

○**국무총리 황교안** 그런 취지의 기재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민병두 의원** 임시정부는 몇 년도에 수립되었지요?

○**국무총리 황교안** 1919년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만……

○**민병두 의원** 그래서 건국이나 광복이나 이런 논란을 잠재우기 위해서 4년 후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이 되는 때 임시정부 기념관을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십니까?

○**국무총리 황교안** 그런 부분은 충분한 검토들을 통해서 진행을 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민병두 의원** 미국의 초등학교 5학년 사회과목입니다. ‘당신이 공화당 캠프의 전략가라면, 당신이 민주당 캠프의 전략가라면 어떤 선거 전략을 만드시겠습니까?’, 한 학기 동안 공부한 주제입니다.

우리 학생들이 초등학교에서 ‘당신이 고구려·백제·신라의 통일 지도자라고 한다면 어떤 전략을 수립하겠습니까?’ ‘고려 말에 당신들이 고려를 살리기 위한 방안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런 주제를 갖고 한 학기 토론하는 사회를 만들었으면 합니다. 동의하십니까?

○**국무총리 황교안** 이번 교과서 개편 과정에서도 학생들이 자율적으로 참여해서 토론하는 이런 현장 프로그램들을 많이 게재하기 위한 원칙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민병두 의원** 어떠한 국가나 정부도 하나의 사상을 주입할 수 없습니다. 총리하고 저는 70년대 박정희 정권하에서 같은 고등학교, 같은 대학교를 나왔지만 이렇게 서로 다른 생각을 갖고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그 누구도 민주주의 국가에서 하나의 사상적 통제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경제가 어려운 때 이렇게 이념 논쟁을 하는 것 정말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제가 원래 준비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국무총리 황교안** 의원님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관해서 제가 한 가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에는 사상의 자유가 있습니다, 의원님 말씀하신 그대로입니다만. 그러나 그렇다 하더라도 그 사상의 자유가 외부로 표출되는 순간에는 법적인 제재가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를 지향하고 있는 국가입니다. 여기서 반 자유민주적인 또 우리가 쉽게 얘기하는 그런 공산혁명을 추구하는 사상들이 있다고 하면 그것은 우리 국가가 허용할 수 없는 그런 특수한 상황이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헌법의 사상의 자유라고 하는 것은 모든 사상을 다 포용하고 수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한계가 있습니다. 그것이 자유민주주의라고 하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민병두 의원** 40년 전에 우리나라 GDP의 20%를 4대 재벌이 차지했습니다. 20년 전에는 40%, 지금 60%입니다.

IMF 때 우리 국민들은 대기업에 힘입어서 우리 경제가 여기까지 왔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금을 모았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다릅니다. 4대 기업의 성공이 나의 성공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나와 내 가족이 행복한 나라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 경제는 갈수록 양극화와 불평등의 길로 가고 있습니다. 무능한 경제, 지난 7년간 8년간 보수 정부가 만들어 낸 결과입니다. 아주 나쁜 경제입니다. 이제 나쁜 경제를 정리하고 좋은 경제, 무능한 경제를 정리하고 유능한 경제의 시대로 나아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중산층과 서민이 가장 괴로워하고 힘들어 하는 부분을 보겠습니다.

전세금이 지난 8년 동안 얼마나 올랐는지 아십니까?

○**국무총리 황교안** 사십몇 % 오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민병두 의원** 전세금이 무려 50%가 올랐습니다. 월세 부랑민, 월세 방랑인이라는 말도 들리고 있습니다. 이는 정말 중서민들한테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OECD는 주거비와 관련된 가계비 부담이 20%를 넘지 않을 것을 권고하고 있는데 우리는 이미 35%를 넘어섰습니다. 재앙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무총리 황교안** 전월세난의 해소를 위해서 정부가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릴 겁니다. 그 문제의 심각성에 대해서 정부가 인지하고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안들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민병두 의원** 두 번째, 가계부채와 국가부채입니다. 이명박 정부 5년 동안 가계부채와 국가부채가 300조 원 늘었습니다. 250조 원 늘었습니다. 지금 박근혜정부 3년 동안 300조가 늘었습니다. 박근혜정부 5년 동안 500조가 늘 것으로 추정됩니다. 거의 시스템 리스크입니다.

국가가 이자를 갖다 부담해야 되고 미래 세대한테는 엄청난 재앙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무총리 황교안** 국가부채나 가계부채는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지금보다는 많이 낮춰야 된다, 그것을 국가적 과제로 생각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민병두 의원** 세 번째, 우리는 성장을 믿고 살아온 나라입니다. 그런데 지난 5년 동안 성장률이 계속 하락하고 있습니다. 수출이 내리막길로 가기 시작한 것이 벌써 5분기째입니다, 지난 30년 동안 5분기 연속 하락은 단 세 번 있었던 일입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더더욱 심각한 것이 6분기, 7분기 계속될 것이라고 보는 겁니다. 이제 성장신화마저 깨졌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무총리 황교안** 의원님 걱정하시는 것처럼 우리 수출상황이 좋지를 않습니다. 그 원인은 최근에 잘 아시다시피 세계 경제의 둔화 또 저유가 또 우리 가까이에 있는 중국 성장률의 감소, 우리 옆에 있는 엔화 약세 이런 것들이 수출 부진

으로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부에서는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면밀하게 검토하면서 수출기업이 활력을 되찾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전략과 함께 또 중장기적으로는 주력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또 지속적으로 수출 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그런 노력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아직 국민들의 기대에 충분하게 미치지 못하는 점이 안타깝습니다마는 지속적으로 국민들과 함께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민병두 의원** 금년 경제성장률을 3% 이상 예측하고 있는 곳은 정부와 한국은행뿐이지요? 아, KDI뿐이지요?

○**국무총리 황교안** 작년 말에 금년 성장률을 예측을 했습니다마는 그 이후에 많은 경제 여건들의 변화가 있었습니다. 이런 점 때문에 당초 계획한 것보다는 성장률이 낮아질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마는 정부에서는 3%의 성장률이 유지될 수 있도록 추경이나 각종 재정정책들을 통해서 또 소비 진작을 촉진하는 이런 여러 정책들을 통해서 성장률이 유지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민병두 의원** 지난해에 경제부총리가 ‘재정정책으로 7·30 선거 때 재미 봤다’ 하고 말한 것을 기억하시지요?

○**국무총리 황교안** 그 말은 제가 정확하게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

○**민병두 의원** 지난 8월에 새누리당 중앙위원회에 가서 ‘경제성장률을 잘 올려서 내년 총선에 도움이 되겠다’ 한 얘기를 기억하시지요?

○**국무총리 황교안** 그런 내용은 잘 기억 못 하겠습니다마는 그런 방향으로 우리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민병두 의원** 그다음 날 고급 사치재, 소비재 개인소비세를 인하한 것을 아시지요?

○**국무총리 황교안** 그것은 소비가 지금 많이 위축되어 있기 때문에 소비 진작을 위한 어떻게 보면 교육지책으로 그런 정책을 추진해서 실제로 소비가 다소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민병두 의원** 그렇게 개별소비세를 인하해 주면 연말까지 성장률이 0.25%p 정도 올라가는 것으로 예측하고 있는 것 아시지요?

○**국무총리 황교안** 성장을 촉진하는 여러 방안들을 다 총체적으로 활용을 하고 동원을 하고 또

정책에 반영을 해 나감으로써 결과적으로 우리 성장률이 너무 침체에 빠지지 않도록 하기 위한 그런 모든 노력의 일환이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민병두 의원** 그렇게 해서 금년 성장률을 3% 이상으로 맞추면 내년 총선에 도움이 되겠지요?

○**국무총리 황교안** 총선과는 관계없이 민생안정을 위해서 우리 경제의 재도약을 위해서 정부가 노력을 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민병두 의원** 지금 전월세금과 가계부채와 성장률, 수출 성장 이 모든 것이 심각한 때에 부총리라고 하는 사람은 내년 총선만을 생각합니다. 경제 실패의 책임을 몰아서 최경환 부총리의 책임을 요구할 생각이 없습니까?

○**국무총리 황교안** 지금 경제가 어려워서 경제 부처뿐만 아니라 범정부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경제 전문가가 아닌 저까지도 지혜를 모으고 있고 여러 분들의 의견을 모아서 보다 나은 정책이 없겠나 찾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노력들을 계속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민병두 의원** 그러면 내년 예산안 처리가 끝나면 경제부총리는 화려하게 당으로 복귀해서 내년 총선을 진두지휘합니까?

○**국무총리 황교안** 예산이나 정부의 정책과 특정한 정치 진출의 문제는 전혀 다른 차원에서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정부가……

○**민병두 의원** 그래서 이런 경제성적표를 갖고 내년에 최경환 부총리가 총선의 전면에 나서서 좋은 경제·나쁜 경제, 유능한 경제·무능한 경제, 정말 그런 대결 구도로 가서 저는 솔직히 경제의 큰 패러다임을 바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저는 유능한 경제가 무엇이나 오늘 이 자리에서 자세하게 설명하지는 않겠습니다. 다만 우리 사회가 잘되려면 사회 구성원 간의 사회적 대타협이 굉장히 중요하다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지난 대통령선거 직후에 저는 여야 간에 공통 공약을 실천하자 하는 제안을 한 바 있습니다. 복지 확대와 경제민주화라고 하는 사회적 합의는 앞으로 20년 내에도 오기 힘들다, 그렇다고 한다면 오히려 패자인 우리가 패자이지만 승자가 도망가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그 사회적 합의라도 지켜지게 하기 위해서 공통 공약을 실천하자라는 제안을 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다만 몇 개월만이라도 대통령이 경제민

주화는 끝났다, 이제 경제활성화를 해야 한다 하는 그 시점까지 일정한 성과가 있었습니다. 그러한 여야 간의 대타협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무총리 황교안** 제가 그 취지가 어떤 취지인지 정확하게 잘 못 들었습니다마는 다시 한 번 설명을 해 주시면 말씀드리겠습니다.

○**민병두 의원** 저는 또 다른 사회적 대타협에 대해서 얘기하겠습니다.

공무원연금은 대통령의 의제입니다. 야당은 대통령의 의제라고 해서 그것을 외면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사회적 대타협의 선례를 남기자 하는 취지에서 적극적으로 임했습니다.

용돈 연금이 돼서는 안 되고 지속 가능해야 되고 이런 원칙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합의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대통령은 그 합의를 자기의 원안이 아니라며 결국 집권당 원내대표를 내쫓는 걸로 마무리했습니다. 이래 갖고는 사회가 전진할 수 없습니다.

그 당시에 여야가 합의했던 공적연금,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까지 저는 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A값을 조정한다든지 퇴직연금하고 합한다든지 여러 가지 방안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멈춰서는 안 됩니다. 그러한 사회적 대타협은 전진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무총리 황교안** 사회적 대타협을 통해서 개선해야 될 부분들이 있고 또 시기에 따라서는 다른 방법을 택해야 될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모든 부분을 다 사회적 대타협에 의해서 진행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정부의 공직자로서는 그렇게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민병두 의원** 계속해서 제 질문하고 지금 어긋난 답을 하는 것 같아서 답답하기는 한데요, 계속하겠습니다.

임금피크제가 청년 고용을 늘린다고 하는 경제학 이론이나 검증된 사례가 있습니까?

○**국무총리 황교안** 그 부분에 관해서는 민간기구들에서 여러 가지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민병두 의원** 박근혜정부 초대 노동부장관으로 지금 노동연구원장 하신 분이 얼마 전에 국정감사에서 그러한 경제학 이론이나 교과서는 없다고 했습니다.

○**국무총리 황교안** 실증적인 조사를 통해서 임금피크제를 통해서 일자리 창출을 해 가는 성과들을 지표로 그렇게 보고한 연구보고서들이 있습니다.

○**민병두 의원** 저는 정말 사회적 합의가 가능하려면 정치적 교환이 있어야 합니다. 가령 전체 근로자 임금의 중위수의 한 1.5배 된다, 한 8000만 원 이상 된다, 그쪽에는 우선 임금피크제를 도입하자. 그 대신 대기업 임원들은 보수 공시를 피해 가는 건 절대 안 된다, 그리고 최고임금제를 도입하자. 그리고 국무총리를 비롯해서 우리 국회의원이랄지 고위 공직자, 공기업 임원들도 일정한 정도의 자기 희생을 감내하자. 이래서 사회 구성원 간에 서로 고통의 분담이 있어야 하는 것이 맞는 것 아닙니까?

○**국무총리 황교안** 우리 사회 구성원 모두가 사회적 약자의 어려움을 같이 공유하고 또 나누어서 함께 잘사는 사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된다는 그런 취지에 대해서는 공감합니다.

○**민병두 의원** 제가 몇 가지 더 사회적 대타협의 예를 들 수 있습니다만 시간 관계상 오늘 제 결론으로 가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지구상 최초의 인구 소멸 국가가 된다고 합니다. 100년 내에 우리나라 인구는 절반이 됩니다. 조금 있으면 폐촌이 되고, 서울·경기를 제외한 대부분의 시와 도에서 생산가능인구가 줄어들고 소비가 사라지게 됩니다. 이건 정말 심각한 위협입니다.

지난 십수 년간 80조 원을 쏟아부어도 아무 효과가 없었습니다. 찢끔찢끔 대책을 만들고 통크게 재원을 만들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현대·삼성이 사내유보금을 아무리 쌓아 둔들 뭐합니까? 애기 울음소리가 안 들리면 삼성 휴대폰을 살 아이들도 없고 현대자동차를 살 아이들도 없습니다.

그런데 대기업은 이명박 정부 때 축소됐던 법인세를 도무지 원상복귀할 생각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인구는 소멸해서 국가는 무너져 가는데 북한 핵보다 더 무섭다는 인구 소멸이, 시한폭탄이 터져 가고 있는데 자기 돈만 챙기고 있습니다. 정부도 꿈쩍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안합니다, 정말 통 크게 사회적 합의를 하자.

두 가지 방안이 있습니다. 국회예산처에서 추계해 본 것입니다. 제가 질의한 것입니다.

이명박 정부 때의 법인세율 원상회복하면 연간 3조 원 정도의 세금이 걷힙니다. 혹은 서택스 형식으로 하면 연간 2조 원이 걷힙니다.

최저임금 이상 받는 국민 중의 상당수가 지금 면세점 이하입니다. 그분들도 나라를 살리겠다는 심정으로, IMF 때 금 모으기 했던 심정으로 아이 울음소리 듣기 위해서 한 5000원이든 1만 원이든, 1만 5000원이든 국민 모두가 평균 1만 원씩 내면 한 3조~4조 정도의 예산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대기업이 한 3조~4조……

우리나라 국민이 국가 소멸을 방지하기 위해서 한시적으로 한 10년 동안만 목적세를 도입해 보는 겁니다. 국가소멸방지세,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무총리 황교안** 저출산 문제의 심각성에 대해서 같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같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것이 많은 돈을 투여해서 되는 문제인가,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난 10년 동안에 엄청나게 많은 예산을 투입했지만 저출산 문제가 해소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정부에서는 지난 10년간의 저출산 문제에 대한 대책, 추진 상황을 점검을 해서 금년이 이제 3차 계획을 짜야 될 그런 해입니다. 그래서 구조적인 문제 해결 방안에 방점을 두고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사회적 대타협의 문제에 관해서는 결국 그렇게 해서 돈을 투자하자는 것이 하나의 중요한 말씀이신데, 그 돈을, 재원을 투자하는 것만 갖고서는 되지 않는 부분들이 있더라, 이런 점을 감안해서 의원님 지금 말씀하신 부분도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민병두 의원** 그러니까 한정된 재원을 갖고 찢끔찢끔 나눠 주다 보니까 아무런 효과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한시적 목적세로 재원을 만들어서 네 가지 부분에 이 재원을 투입할 것을 제안합니다.

우선 우리 대학생들이, 청년들이 학자금이든 비학자금이든 사회에 나가기 전에 인생의 멩에를 크게 지고 가는 것은 안 됩니다. 우선 이 부분을 해결해야 됩니다.

다음 두 번째는 주택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이 자료에 있는 것처럼 외국의 많은 사례는 주택의 보유가 출산을 촉진시킨다는 결과를 보여 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정말 공공 부문의 일자리를 혁신적으로 늘리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네 번째는 보육 문제인데 이제는 국가가 부담해야 합니다, 보편 보육은. 그래서 국공립어린이집을 시장 평균의 30%까지는 올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기 계신 정부 관계자, 우리 국회의원 여러분들이 정말 제 제안을 생각해 보시고 우리나라의 시한폭탄을 제거하기 위해서 합심해서 노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정의화** 민병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기로 하고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0분 회의중지)

(14시12분 계속개의)

○**부의장 이석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계속해서 질문을 실시하겠습니다.

새누리당 비례대표 류지영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지영 의원** 존경하는 이석현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황교안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새누리당 비례대표 류지영 의원입니다.

송도 국제신도시 관할권, 한진 부지 처리 문제 등 지금 우리 사회는 해결이 쉽지 않은 갈등으로 신음하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다양한 사람들이 공동체를 이루어 살고 있는 민주사회에서는 당연하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문제는 가치와 이익이 충돌하는 현시대의 갈등이 수천 년 전 알렉산더 대왕이 고르디우스의 매듭을 단칼에 잘라 내는 식으로는 해결이 어렵다는 것입니다. 갈등은 잠복된 사회문제를 수면 위로 끌어올리는 순기능 역할도 하지만 오랜 기간 지속되면 사회 통합을 해치게 됩니다.

이에 중앙정부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법에 정해진 분명한 절차대로 대화, 타협의 과정을 거쳐 조정토록 해야 할 것입니다.

행정자치부장관님 나와 주세요.

장관님, 우리나라에서 지방자치제도 시대가 본격적으로 열린 것이 언제부터입니까?

○**행정자치부장관 정종섭** 올해가 지방자치 2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사실 91년부터 지방의회가 생겼지만 95년에 본격적으로 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류지영 의원** 거의 20년이 됐겠군요.

○**행정자치부장관 정종섭** 예, 그렇습니다.

○**류지영 의원** (영상자료를 보며)

대한민국헌법은 제117조와 제118조에 걸쳐 지방자치에 대해 규정하고 있고 구체적인 목적과 방법에 대해서는 규정하지 않고 이를 위임 입법하였는데 알고 계시지요?

○**행정자치부장관 정종섭** 예, 그렇습니다.

○**류지영 의원** 장관님, 우리나라 지방자치제도가 지향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행정자치부장관 정종섭** 아시다시피 우리나라 지방자치는 한편으로서는 풀뿌리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것이고 그 실현을 통해서 궁극에는 주민의 행복을 증진하는 데 있습니다.

○**류지영 의원** 근본적으로 우리나라의 지방자치행정은 민주적으로 수행되어야 하는 데 동의하십니까?

○**행정자치부장관 정종섭** 예, 그렇습니다.

○**류지영 의원** 만일 지자체의 운영이 비민주적이거나 또 능률적으로 수행되지 않거나 대한민국의 민주 발전을 저해하는 식으로 운영이 된다면 그때 중앙정부는 어떤 조치를 해야 하는 건가요?

○**행정자치부장관 정종섭** 다른 부처에도 권한이 있겠지만 저희 행정자치부는 기본적으로, 지방자치단체를 지원하고 지도하는 게 기본이고요, 그다음에 지방자치단체가 위법한 행위를 했을 때는 법에 정해져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류지영 의원** 감사합니다.

장관님 들어가시고, 총리님 나와 주세요.

총리님께서도 법률 전문가로서 앞서 장관님이 대답한 문제에 대해서 어떤 견해를 갖고 계시나요?

○**국무총리 황교안** 기본적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이 보장되면서, 그러나 법 안에서 움직이도록 하는 것이 맞겠다, 전체적으로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류지영 의원** 법은 최소한의 도덕이라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그게 무슨 뜻인가요?

○**국무총리 황교안** 꼭 지켜야 될, 도덕은 지켜도 그만, 안 지켜도 사회적 비난 가능성만 가중되지만 법은 지키지 않으면 제재가 가해지는 반

드시 지켜야 되는 규범입니다.

○**류지영 의원** 법은 모든 국민들과 또 공공기관이 지켜야 할 가치 기준이기 때문에 명확하고 분명하게 규정되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분쟁이 생기고 또 그로 인해서 당사자들에게 상처를 남기게 되는데, 동의하시지요?

○**국무총리 황교안** 예, 그렇습니다.

○**류지영 의원** 현재 서울시와 강남구는 한전 부지 공공기여금 사용을 놓고 첨예하게 대립하여 소송 중인데 알고 계십니까?

○**국무총리 황교안** 그런 분쟁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류지영 의원** 이런 문제로 현대차그룹은 지난 9월에 한전 부지에 대한 잔금 3조 1650억 원을 지불하고 소유권을 이전받았지만 공사 진행도 못하고 있습니다. 부지 개발로 나타나게 될 약 131만 명의 직간접 고용창출 효과와 또 262조 6000억 원의 경제 효과는 기약이 없어진 거지요.

언론에서는 마치 서울시민과 강남주민의 대립인 양 몰아가고 있어서 서울시와 강남구 또 현대차 그리고 서울시민 전체가 깊은 갈등을 겪고 있습니다.

화면을 봐 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현재 한전 부지에 대한 지구단위계획 변경 과정이고, 다음 화면을 보시면 당초 한전 부지는 지난 2009년 7월에 지정된 대로 인근 코엑스 등이 포함된 종합무역센터 주변지구 지구단위계획으로 묶여 있었고 2월까지만 해도 해당 지구단위계획에 잠실운동장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서울시는 현대차그룹의 사옥 건설계획을 반려했고 갑자기 3월에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하여 종합운동장 일대를 포함시켜 동일 개발지구로 변경했습니다.

이로 인해서 1조 7000억 원의 공공기여금을 놓고 분쟁이 시작되었는데, 총리님 알고 계시지요?

○**국무총리 황교안** 예, 그런 분쟁이 있습니다.

○**류지영 의원** 총리님, 서울시의 이 지구단위계획 변경이 합법적인 절차로 진행된 것인가요?

○**국무총리 황교안** 양 지자체 간에 갈등이 있는데 그 부분에 관해서 중앙정부에서 직접 개입하는 것은 적절치 않기 때문에 의견을 말씀드리는데도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류지영 의원** 문제가 있기는 있지요?

○**국무총리 황교안** 갈등이 있고 검토할 부분이 있습니다.

○**류지영 의원** 지구단위계획수립지침이라는 국토부 훈령이 있지요?

○**국무총리 황교안** 예, 그렇습니다.

○**류지영 의원** 화면을 보시면 지구단위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는 시설들이 열거되어 있지만 이 지침에 운동장이 있나요? 없지요?

○**국무총리 황교안** 그런 부분에 관해서는 자세하게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류지영 의원** 그렇다면 서울시가 종합운동장을 포함시켜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한 것은 국토부 훈령에 위배되는 것 아닌가요?

○**국무총리 황교안** 지구단위계획은 기본적으로 지자체가 처리하는 업무이기는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법에 위배되는지 여부는 별도로 판단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류지영 의원** 이 외의 절차상의 문제점들은 저 자료화면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다음 자료화면 보겠습니다.

이러한 사실들은 강남구의 도시관리계획 입안권 침해이자 주민들을 무시한 권리 침해입니다.

총리님, 아무리 좋은 결과를 가져온다 하더라도 관련 당사자와 전혀 논의 없이 진행이 된다면 어떻게 시민들을 설득할 수가 있겠습니까?

다음 화면을 보시면, 지난 3월에 서울시의 갑작스런 지구단위계획 변경 결정에 강남주민들이 여러 경로로 의사표현을 했지만 서울시는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하기는커녕 무시하고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고시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일방적인 도시계획 추진이 진행되고 있는 이 사실에 대해서 총리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무총리 황교안** 거듭 말씀드리지만 기본적으로 지자체의 고유사업이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계획 수립권자인 서울시와 강남구청, 양 자치단체 간의 충분한 협의를 통해서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류지영 의원** 다음 화면을 보시면,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서울역 고가도로 공원화사업인데요. 지난 2014년 9월에 주민과의 일체의 협의 없이 공원화사업을 일방적으로 발표합니다.

총리님, 서울역 고가도로 지나가 보셨지요?

○**국무총리 황교안** 예, 자주 가 봤습니다.

○**류지영 의원** 서울역 고가는 도심지 내 동서를 잇는 주요 교통축으로서 하루 교통량이 5만여 대

나 됩니다.

화면을 보시면, 평소에도 정체가 심한 지역인데 대체도로 없이 고가도로를 폐쇄할 경우 시민들의 불편을 어떻게 감당하시겠습니까?

○국무총리 황교안 이 문제도 역시 지자체 간의 문제라서 정부가 직접 개입하는 것은 신중히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지자체 간의 대화와 시민들의 의견을 잘 수렴해서 합리적인 해결책을 마련해 나갔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류지영 의원 게다가 남대문시장과 인근의 약 1만 2000여 개의 점포 또 4만여 명의 상인들은 상권에 타격을 받아서 생존권을 위협받게 됩니다.

다음 화면을 보시면, 고가도로 공원화사업에 대해 그 지역주민은 물론 서울지방경찰청과 문화재청, 코레일까지 모두 반대를 하고 있어요.

총리님, 주민 불편이 뻥히 예상이 되고 또 관련 국가기관들도 반대하는 서울역 고가도로 공원화사업, 이런 식의 일방적이고 무리한 도시계획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무총리 황교안 충분한 검토가 있었으면 좋았겠다 하는 아쉬움을 갖고 있습니다.

○류지영 의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추진하는 도시계획사업은 그 피해가 고스란히 서울시민에게 전가됩니다.

지난번 평택·당진항 매립지와 관련된 분쟁이 2000년에 시작이 되어서 15년이 걸려 마무리되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국무총리 황교안 예, 그런 일이 있습니다.

○류지영 의원 서울시와 강남의 분쟁도 이와 유사해서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서울시민은 물론 국민 전체가 피해자가 되고 맙니다.

총리님, 서울시장은 국무회의에 배석할 수 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에요?

○국무총리 황교안 가장 큰 자치단체를 행정적으로 관할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국정에 반영되고 검토될 수가 있도록 또 거꾸로 중앙정부의 생각도 지자체에서 참고할 수 있도록 협의가 가능한 시스템으로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류지영 의원 서울시는 특별시라고 하여 특별히 대우를 받고 있습니다. 따라서 시장도 다른 지자체장들에게 모범이 돼야 되고 또 좋지 않은 선례를 보여 주게 된다면 시민들뿐만 아니라 전

국민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볼 수 있지 않을까요?

○국무총리 황교안 그런 걱정도 종합적으로 정책에 반영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류지영 의원 서울시장은 누구보다도 법과 원칙을 잘 지키고 집행해야 하는 것이지 법을 자의적으로 판단하여 집행해서는 안 되지 않을까요?

○국무총리 황교안 기본적으로 거듭 말씀드리다시피 지자체 간의 문제에 관해서 질의하시기 때문에 제가 답변을 정확하게 드리는 것은 어렵습니다마는 모든 정책이 국민과 주민들을 위한 정책으로 그렇게 수립되고 진행이 되는 것이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류지영 의원 한전 부지, 서울역 고가도로 진행 과정을 통해 나타난 문제점들에 대해 많은 시민들이 매우 실망스러워합니다.

총리님, 더 늦기 전에 중앙정부가 나서야 할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립이 격화되는 서울시와 강남구의 갈등 또 고가도로 공원화사업, 총리께서는 이 문제들을 합리적으로 조정할 의사가 있으십니까?

○국무총리 황교안 총리가 직접 조정할 권한이 있지는 않습니다. 적절한 방법으로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바가 좀 감안이 될 수 있도록 한번 방안을 찾아보겠습니다.

○류지영 의원 국가 경제도 어려운데 계속 자존심 싸움을 하는 지자체 간의 갈등, 눈치만 보는 중앙정부, 그 피해는 국민들에게 고스란히 전해진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고 계시지요?

○국무총리 황교안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합니다. 다만 중앙정부와 지자체의 권한 분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다소 어려움이 있습니다마는 같이 중지를 모아서 해결의 방법을 찾아가는 것이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류지영 의원 다시 한 번 총리님께 최근 서울시의 무리한 도시계획 추진과 분쟁에 따른 주민 피해에 대해서 적극 조정에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국무총리 황교안 행자부와 한번 충분히 상의를 해 보겠습니다.

○류지영 의원 다음은 누리과정 예산에 관한 질의입니다.

총리님, 어린이집은 교육기관입니까, 아닙니까?

○국무총리 황교안 어린이집은 기본적으로는 보

육시설입니다마는 누리과정에 대해서는 교육과정에 포함돼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관해서는 교육기관으로 그렇게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류지영 의원** 제가 국회에 들어와서 복지부장관에게 가장 먼저 질의했던 사항입니다. 영유아 보육법상 보육의 정의를 알고 계시지요?

○**국무총리 황교안** 예, 그렇습니다.

○**류지영 의원** 화면을 봐 주세요.

법률에는 ‘교육을 제공하는 어린이집에 관한 사회복지서비스’라고 명시되어 있고, 다음은 유아교육법과 시행령입니다. 누리과정을 교육활동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맞습니까?

○**국무총리 황교안** 예, 그런 규정이 있습니다.

○**류지영 의원** 그렇다면 교육활동인 누리과정을 실시하는 기관인 유치원, 어린이집, 모두 교육기관으로 볼 수 있지요?

○**국무총리 황교안** 말씀드린 것처럼 교육기관의 측면이 있습니다.

○**류지영 의원** 총리님, 교육교부금은 어디에 지원하게 되어 있습니까?

○**국무총리 황교안** 교육교부금은 지방교육단체에 지급하게 돼 있습니다.

○**류지영 의원** 지방교육교부금법 제1조에 의하면 교육활동을 수행하는 교육기관에 대해서 지원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린이집과 유치원 모두 교육기관이니 교부금 지급이 가능한 것이 맞습니까?

○**국무총리 황교안**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류지영 의원** 최근 경제가 많이 어려워 당연히 지방교육재정도 어렵겠지요. 하지만 지방교육재정은 누리과정이 도입된 12년부터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건비 등을 과다하게 책정해서 이월되거나 불용되는 교육청의 예산이 연간 약 4조 원에 달하고 있는데 이런 예산상의 문제점들을 해결을 한다면 교육재정의 건전성 회복도 가능하지 않을까요?

○**국무총리 황교안** 의원님 걱정과 같이 교육청은 불용액의 최소화 또 투자우선순위 조정 등을 통해서 교육재정의 건전성을 회복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부는 정부 나름대로 또 역할을 하지만 지방교육청은 그 나름대로의 책임을 다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류지영 의원** 최근 우리나라는 저출산으로 어린이 수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고 2년간 감소

했던 교육교부금은 세입여건 개선으로 증가하게 됩니다.

화면을 보시면 교부금 증가 규모가 전년 대비 1조 9000억 원인데요. 누리과정 소요 증가액은 2000억 원입니다. 예산상의 어려움을 감안하더라도 누리과정 예산편성은 가능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무총리 황교안**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내년도에 지방교육재정은 교부금이 증가하고 또 지방세 전입금도 늘어날 것으로 이렇게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비해서 재정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방정부도 어려움이 많이 있겠지만 이 누리과정 예산편성은 법제화돼 있는 부분이고 또 그동안 그런 방향으로 논의가 이루어져서 추진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어린 아이들이 교육을 잘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협조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류지영 의원** 누리과정 예산은 지난해 국조실감등관리 과제로 선정된 사안입니다. 최근 의무지출 관련 법령을 개정했지만 갈등 해소는 이제부터가 시작이라고 봅니다. 부모들이 안심하고 아이를 믿고 맡길 수 있어야 출산율도 올라가지 않겠습니까?

○**국무총리 황교안** 그렇습니다. 중요한 부분입니다.

○**류지영 의원** 또한 현재 국무총리실 산하의 행정협조정위원회처럼 부처별로 갈등조정기구가 존재하고 있는데 그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다고 보십니까?

○**국무총리 황교안**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갈등조정 부분에 관한 실무역량이 좀 뒤늦게 준비되고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국민들이 만족할 만큼 갈등조정의 결과가 나오지는 않지만 정부는 갈등조정을 위해서 필요한 협의체도 만들고 노력을 해 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류지영 의원** 총리는 국무조정실의 역할을 가지고 있는 만큼 사회적 갈등에 대해서 보다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울러 선진국의 갈등조정 사례를 참고하시어 교육 등을 통해서 조정의 전문성을 키울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점에 대해서 총리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무총리 황교안** 예, 의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조정의 전문성을 키워서 결과적으로 많은 국

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원만한 국정이 운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류지영 의원** 총리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은 발전 가능성이 무궁무진합니다. 서로의 이익만을 위한 갈등으로 발목이 잡혀서는 안 됩니다. 현재의 갈등을 슬기롭게 해결할 수 있다면 우리는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을 것입니다.

갈등을 상처 없이 풀기 위한 전제조건은 결국 신뢰입니다. 법이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집행될 것이라는 신뢰, 정부는 법과 준칙을 준수할 것이라는 신뢰, 상생의 이익을 추구하게 될 것이라는 신뢰, 이를 통해 법과 원칙이 있는 나라, 그 속에서 서로 따뜻하게 소통하는 하나된 우리 사회 그게 바로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이자 저력이 될 것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 이석현** 류지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기 수원갑 출신의 새정치민주연합 이찬열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찬열 의원** 몇 분 안 남으셨는데도 또 나가시네요.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이석현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여러분!

수원시 장안구 출신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이찬열 의원입니다.

우리 국민의 삶이 팍팍한 지금 대통령께서는 국민의 살림살이가 나아지고 국민이 미래에 대한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대통령께서는 국민만 바라보고 국민만 생각해야 합니다. 하지만 현재 박근혜 대통령께서는 국민을 생각하지 못하고 그저 권력에만 몰입하는 제왕적 대통령에 머물고 있습니다.

황교안 국무총리 초청하겠습니다.

인사 안 하셨지요? 인사하시자고요, 인사.

반갑습니다.

○**국무총리 황교안** 예, 반갑습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이찬열 의원** 인사를 하시자고요, 같이. 인사들을 안 하셔.

아니, 초청은 제가 했는데 항상 보면 인사는

의장석에만 하고 왜 초청한 의원들한테는 인사를 서로 안 하시는 겁니까?

같이 하시자고요.

(인사)

○**국무총리 황교안** 예.

(인사)

○**이찬열 의원** 하신 거지요?

지난 6월 박근혜 대통령께서는 여야가 합의로 통과시킨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총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무총리 황교안** 거부권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찬열 의원** 그렇습니까?

그래서 처음에 여야 합의로 다 찬성을, 많은 의원님들께서 하시고 해서 통과시킨 겁니다.

국회의원을 이렇게 우습게 만들어도 되는 겁니까?

여야 합의로 한 겁니다. 그것을 대통령께서 다시 국회로 돌려보내 갖고 기존에 찬성했던 분들이 나중에 와서 반대하게 만드는 이게 우리 현재의 박근혜 대통령 모습입니다.

그리고 당시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에 대해 '배신의 정치'라는 주홍글씨를 새겨 그 자리에서 끌어내렸습니다.

당시는 메르스 창궐로 국민의 고통이 극심했지만 대통령께서는 국민의 고통은 외면한 채 불신과 대결의 정치를 선택했습니다. 삼권분립과 의회주의에 기초한 대한민국의 민주적 기본 질서마저 거부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그치지 않고 여야 당 대표가 합의한 안심번호 국민공천제와 관련해서도 똑같은 일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총리, 안심번호제도는 어디서 나온 겁니까, 근본적으로?

○**국무총리 황교안** 개인정보 유출의 우려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제도를 만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찬열 의원** 어느 부처에서 만들었습니까? 누가 만든 겁니까?

○**국무총리 황교안** 글썄, 그 법을 누가 만들었는지는 제가 확인해 보지 못했습니다. 관련된 일 에.....

○**이찬열 의원** 누가 도입을 권고했습니까? 어디

서, 어느 부처가?

○국무총리 황교안 그런 구체적인 내용은 제가 확인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이찬열 의원 그것은 구체적인 내용이 아니고 헌법기관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도입을 권고한 제도입니다. 이 제도를 양당 대표가 합의를 해서 채택을 하려고 그런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대통령이 다 묵살시켜 버린 겁니다.

그래도 제왕적 대통령이 아닙니까?

하물며 헌법기관에서 권고한 제도를 무시하는데 여기에 국무위원들 나와 계시지만 일반 행정 부처에서 뭘 갖다가 대통령한테 제안을 하고 얘기를 할 수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까?

○국무총리 황교안 무시하는 것이 아니고 국정을 총괄하고 있는 대통령의 입장에서……

○이찬열 의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이 누구입니까?

○국무총리 황교안 입장에서 정치적인……

○이찬열 의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이 누구냐고요?

○국무총리 황교안 이름을 물으시는 건가요?

○이찬열 의원 직책만 얘기해도 됩니다, 직책만.

○국무총리 황교안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이 맡고 있습니다.

○이찬열 의원 예?

○국무총리 황교안 지금 뭘 질문하신 겁니까?

○이찬열 의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을 누가 맡고 있느냐 이겁니다. 이름이든 직책이든 한번 얘기해 보세요.

○국무총리 황교안 글썄, 그 위원장을 누가 맡고……

위원장이 맡고 있는 겁니다. 지금 법원 출신의, 대법관 출신이……

○이찬열 의원 아니, 대법관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인지도 모르십니까?

○국무총리 황교안 방금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누가 맡고 있느냐고 해서 그것은 중앙위원장인데 지금 그 위원장은……

○이찬열 의원 중앙위원장을 누가 맡느냐고, 누가?

○국무총리 황교안 왜, 질문을……

잘 들어 보십시오.

제가 대법관이 그 일을 지금 맡고 있다는 말씀까지 드렸습니다.

○이찬열 의원 안 들렸어요, 안 들렸어. 좀 크게

얘기하십시오, 하셨다면.

○국무총리 황교안 그렇게 질문……

○이찬열 의원 그러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이 대법관입니다. 그런 조직에서 제안한, 권고한 제안도 대통령이 일방에 다 묵살시켜 버립니다. 이것 또한 제왕적 대통령의 가장 근본적인 본보기입니다.

그렇다면 박근혜 대통령께서는 민심을 왜곡하고 조직을 동원하는 경선에서 후보로 선출된 겁니까?

○국무총리 황교안 국정의 책임자로서 필요한 얘기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찬열 의원 박근혜 대통령 후보 당시에는 되고 지금은……

제가 답변하라고 그럴 때만 하세요.

○국무총리 황교안 질문을 하셨길래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이찬열 의원 그건 제 스스로 물어보는 겁니다.

박근혜 대통령 후보 당시에는 되고 지금은 안 되는 이유가 무엇인가? 대통령께서 내년 총선에 유리하도록 룰에 개입하려 하는 건 아닌지?

총리, 박근혜 대통령께서 연이어 여야 두 정당 대표의 합의를 깨도록 주도하고 여당의 원내대표와 당 대표를 원색적으로 비난하는 과정을 국민들이 지켜보면서 과연 국민들은 무슨 생각을 했을 것이라고 예상을 하십니까? 답변하십시오.

○국무총리 황교안 국민들께서는 나라가 바로 잘되기를 원하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취지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찬열 의원 그러면 국민들께서 대통령이 이렇게 하시는 걸 보고 ‘아, 나라가 과연 잘 돼 가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총리는? 답변해 보십시오.

○국무총리 황교안 국민들의 생각은 의원님께서 잘 아실 테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찬열 의원 저한테 넘기지 마세요. 총리님 답변하실 것만 하시면 됩니다. 답변하실 얘기가 없으시구면.

또 이렇게 청와대가 선거 룰에 대해서 관여하는 것을 총리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답변해 보십시오.

○국무총리 황교안 국정을 맡고 있는 책임자로서 필요한 말씀들이라고 판단해서 하시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찬열 의원** 그렇지만 본 의원은 전혀 그렇게 볼 수가 없습니다.

많은 국민들이 얘기합니다. 박근혜 대통령께서 내년 총선에서 어떻게 하면 박근혜 대통령의 사람들을 국회의원으로 만들 것인지에만 몰두하고 있다고 많은 분들이 얘기합니다.

내년 총선 직후 국정 하반기에 발생할지도 모를 레임딕 걱정에 국정 동력 확보를 위해 대통령께서 선거에 개입하고 있다고 다들 얘기하십니다. 이 견해에 대해서 총리는 어떤 의견이십니까?

○**국무총리 황교안** 국정이 잘 돼서 국민들이 행복해지고 지금 경제가 어렵기 때문에 경제에 주력하는 이런 분위기를 만들어 가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계십니다. 어떤 부적절한 개입을 염두에 두고 계시지 않은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찬열 의원** 우리 총리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제가 말씀드렸듯이 우리 많은 대다수의 국민들이 그렇게 생각을 안 하고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십시오.

대통령께서……

염두에 두십시오!

대통령께서 과거 여당의 지도자로서 선거를 이끌던 선거 여왕에 아직까지도 집착하는 나머지 대통령이 되어서도 선거를 좌지우지하려는 제왕적 대통령이라고 비판합니다. 한 나라의 대통령이 제왕의 자리에서 선거에 개입한다면 그 피해는 결국 모두 우리 국민에게 돌아옵니다.

대통령이 됐는데도 예전 생각 그대로라면 정말 보수 중의 보수라고 생각을 합니다.

총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정부질문 내용이 뭐 그래」 하는 의원 있음)

(「그만합시다」 하는 의원 있음)

보수 중의 보수라고 생각합니다.

총리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무총리 황교안** 지금 제왕적 대통령이라는 말씀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제가 옆에서 보고 있는 대통령은 헌법과 법률에 규정돼 있는 권한과 책임을 다하고 계십니다. 그런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찬열 의원** 그렇게 이해할까요?

○**국무총리 황교안** 그렇게 법대로 집행하고 있습니다.

○**이찬열 의원** 다음, 역사 교과서 문제만 봐도 그렇습니다.

현재 교사, 교수, 학생, 학부모, 시민에 이르기까지 짧은 시간에 많은 국민들이 역사 교과서 국정화에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1972년 유신체제 이후 1974년에 전체 교과서가 국정 교과서로 바뀌어 갑니다. 또 지금까지 잘 오다가 2003년 7월 달부터 중학교 1학년부터 고1까지 국사를 국정 교과서로 했습니다. 고등학교 2학년·3학년은 한국 현근대사를 검정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2010년도에 국사와 현근대사가 한국사로 합병되면서 검정체제로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 국정 교과서로 간다는 얘기는 생각 자체가 유신 이후의 41년 전으로 회귀한다고 생각하는데, 총리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무총리 황교안** 어떤 체제로 교과서를 발행할 것인가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어떤 내용으로 발행되게 할 것인가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찬열 의원**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얘기하세요, 제가 준비할 테니까.

○**국무총리 황교안** 지금 말씀드렸다고 해서 검정체로 바뀐 이후에 많은 오해와 또 곡해가 있었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국민들께서 많이 걱정을 하시기 때문에 바른 역사를 가르치자 하는 취지에서 이번 체제개편이 시도·진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찬열 의원** 아까 존경하는 백재현 의원님 질의에서 총리가 답변하신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려 보겠습니다.

‘전쟁 중 공권력에 의해 여러 곳에서 민간인이 희생되기도 하였다. 북한군은 함남 함흥과 전남 영광 등지에서 민간인을 학살하였다’ 이게 고등학교 한국사입니다, 주식회사 미래엔.

(책자를 들어 보이며)

또 한 가지, 주체사상 얘기하셨지요?

○**국무총리 황교안** 그렇습니다.

○**이찬열 의원** 간단하게 읽겠습니다.

“그러나 주체사상은 김일성주의로 천명되면서 반대파를 숙청하는 구실 및 북한주민을 통제하고 동원하는 수단으로 이용되었다.” 무슨 주체사상을 어떻게 교육시킨 것으로 보셨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하시는지 이해가 안 됩니다.

○**국무총리 황교안** 지금 그 교과서에 대해서 말씀을 잠깐 드릴까요?

○**이찬열 의원** 됐습니다.

아까 얘기하신 답변, 그것에 대해서 ‘총리께서

잘못 알고 계시구나' 하는 것을 짚어 드린 겁니다.

○국무총리 황교안 잘못 알고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찬열 의원 또 OECD 국가 34개국 중 국정 교과서를 사용하는 나라가 몇 개국이나 되는지 아십니까? 3개 나라입니다, 3개 나라.

○국무총리 황교안 나라 수로 말하면 세 나라입니다. 다만 그중에는 분단돼 있는 나라는 아무도 없습니다.

○이찬열 의원 그것만 얘기하세요.

(「답변을 해야지」 하는 의원 있음)

가만히 계세요, 답변은 내가 하도록 기회를 드릴 테니까!

(「언제 기회를 줬어?」 하는 의원 있음)

터키, 그리스, 아이슬란드……

(「답변을 해야 될 것 아냐?」 하는 의원 있음) 반말하지 마세요!

(장내 소란)

○부의장 이석현 좀 들어 보세요.

(「뭘 들어 봐요? 답변을 해야지, 답변을」 하는 의원 있음)

○이찬열 의원 질문은 제가 합니다!

(「잘하세요 좀」 하는 의원 있음)

경우가 없어.

자, 2013년 유엔은 다양한 종류의 역사 교과서 가운데 교사가 선택할 수 있도록 보장하도록 권고했습니다. 역사교육에 정부가 개입하지 말고 다양한 교과서는 지양해야 한다는 유엔의 권고사항이 있었습니다. 불과 2013년입니다.

따라서 박근혜정부의 교과서 국정화는 역사를 정치적 목적에 의해서 조작하지 말라는 유엔의 권고를 정면으로 위배한 것 아닙니까, 총리님?

답변하십시오.

○국무총리 황교안 유엔의 권고에 대해서는 그 권고보고서가 어떤 이상점을 지향하고 있는 이런 권고보고서입니다. 그러나 의원님 아시다시피 우리나라는 분단돼 있습니다. 지금 안보상의 많은 위협을 수시로 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우리의 특수성을 고려해서 유엔의 권고라 하더라도 우리가 비판적으로 수용을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검정 교과서의 많은 문제점을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그런 문제점들이 바로잡혀서 어떤 특정 목적이 아니라 바른 역사에

근거한 균형 있는 교과서를 만들어서 그것을 토대로 해서 어린 학생들이 바로 교육을 받게 하자, 이것이 이번 체제 개편의 목적입니다. 그런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찬열 의원 그러면 답변 다 하신 겁니까?

이 책 가지고 지금 읽어 드렸듯이 어린 학생들이 잘못 배우겠습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좋습니다. 이쪽에서 보면 이런 문제가 있고 저쪽에서 보면 저런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하나하나 어떤 부분이 문제인지를 전문가들에게 토론을 시키든 연구를 시켜서 그 문제를 보완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것을 모조리 내 마음에 조금 안 든다고 통틀어서 국정화를, 한 권을 책으로 만들어서 아주 일관된 교육을 시키겠다, 저는 애를 넷을 키운 사람입니다.

애 넷 키워 보셨습니까? 이런 애들한테 이런 일관된 교육을 주입시켜야 되겠습니까?

○국무총리 황교안 다양하고 사실에 입각한 정확한 교과서를 학생들에게 가르쳐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찬열 의원 국정 교과서 하나인데 어떻게 다양하게 가르칩니까?

○국무총리 황교안 국정 교과서에 내용을 담을 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편집위원들을 다양하게 각계의 권위자들을 모셔서 바른 교과서를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찬열 의원 더 할 얘기가 많은데 시간관계상……

총리, 우리가 지난 4월에 대한민국을 들썩이고 성완중 회장 리스트가 있었지요. 아시지요?

○국무총리 황교안 예,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이찬열 의원 허태열 7억, 김기춘 10만 달러, 그 아래에 또 돈인지 뭔지 안 쓰여 있지만 현 비서실장……

총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국무총리 황교안 그 문제에 관해서는 검찰에서 객관적인 입장에서 철저히 수사를 했습니다. 했지만 수사해서 기소를 하려고 그러면 증거가 있어야 되는데 그 메모를 쓴 분은 돌아가셨고, 메모지에는 딱 이름하고 액수가 있고 또 액수도 없는 것도 있고 또 실제 조사해 보니까 본인들은 그런 일이 없다라고 하고 있고, 이래서 검찰에서 할 수 있는 증거들을 최대한 수집해서

일부 처리가 되고 또 증거가 확보되지 않는 부분은 형사소송법에 따라서 불기소처분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찬열 의원** 대한민국 청와대 대통령비서실장 자리가 그렇게 하찮은 자리이고 우스운 자리입니까?

본 의원은 그 명단에 이름이 있다는 그 자체로서 이 사람들은 그 자리에 가면 안 될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언제부터 우리 대한민국 청와대 비서실장 자리가 이렇게 까마귀 소굴로 변했습니까? 이게 나라입니까, 이게!

○**국무총리 황교안** 말씀드릴까요?

○**이찬열 의원** 답변해 보세요.

○**국무총리 황교안** 어떤 개인이 어떤 주장을 했다고 해서 바로 그것이 사실로 확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민주국가이고 또 형사소송법에 관해서 인권을 전제로 한 그런 여러 절차들이 있습니다. 그런 절차를 통해서 스크린해 본 결과 증거가 있으면 기소를 하는 것이고 증거가 없으면 누구라도 기소를 못 하는 것입니다. 그런 원칙에 따라서 검찰이 처리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 신분이 무엇이나 그것은 검찰의 판단의 기준이 되지 않습니다.

○**이찬열 의원** 그렇습니까?

○**국무총리 황교안** 그렇습니다.

○**이찬열 의원** 그것은 뭐 생각하는 사람 입장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본 의원 같으면,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은 지금 현재에도 버티고 있어요. 빨리 옷 벗고 내려와야 됩니다. 명색이 대한민국 일국의 대통령비서실장이 그런 구설수에 올라 있는데도 지금 버티고 있는 이런 상황이 현재 대한민국 대통령비서실의 현실입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시간은 자꾸 가고 할 얘기는 많고……

고영주 이사장 아시지요?

○**국무총리 황교안** 알고 있습니다.

○**이찬열 의원** 총리, 내용은 다 아실 테니까 이 사람 빨리 해임하라고 대통령께 건의하실 생각 없습니까?

물어보는데 시간이 자꾸 갑니다.

○**국무총리 황교안** 방문진 이사장의 해임에 관해서는 방문진의 관련 규정에 따라서 방송통신위원회에서 논의할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찬열 의원** 대통령이 한마디 하면 여당은 물론 야당은 물론 전 국민이, 온 나라가 벌집 쑤셔

놓은 듯이 다 난리가 납니다. 또 이런 사람들, 극우인사라고 평가되는 사람들 임명해 가지고 온 나라를 또 벌집 쑤셔 놓은 듯 만들어 놓고, 하루도 나라가 편한 날이 없어요. 벌집 쑤셔 놓고 오늘 대통령께서는 미국 가신다는 것 아닙니까? 벌이 거기까지 쫓아갈 수 없습니까?

(「아이, 너무 유치하다」 하는 의원 있음)

○**국무총리 황교안** 그런 중요한 국정일정에 관해서 존중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찬열 의원** 입 좀 조심시키세요.

(장내 소란)

(「말 함부로 하지 마세요」 하는 의원 있음)

입 좀 조심시키세요!

(「야당이나 조심하세요」 하는 의원 있음)

입 좀 조심시키자고!

(「누가 누구를 조심시켜요!」 하는 의원 있음)

총리,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지방자치제에 대해서 더 할 얘기가 있는데 시간 관계상 맺음말로 들어가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박근혜정부의 가장 큰 문제는 국정이 민주적 제도의 시스템에 의해 운영되기보다는 대통령과 집권세력에 의해 자의적으로 운영된다는 것입니다. 민주주의는 개인의 권리와 자유를 보장하는 제도이며 민주사회는 권력의 분립을 통한 균형 있는 권력구조를 핵심으로 해야 합니다. 현재 박근혜정부는 대통령제도의 단점만 활용하고 있습니다.

개혁되어야 합니다. 개혁은 권력의 집중을 차단하는 데에서 시작되어야 합니다. 권위주의적인 제왕적 대통령의 재등장을 구조적으로 막아야 합니다.

이를 위해, 첫째 대통령의 절대적인 권력을 견제하기 위하여 대통령의 인사권과 예산권 그리고 감독권에 대한 견제장치가 필요합니다. 행정부의 입법 발의권을 폐지하고 감사원은 국회로 편입시켜야 합니다.

둘째, 중앙정부의 권한과 예산을 지방정부로 대폭 이양하여 중앙집권적 국가체제를 지방분권적 지방체제로 변화시켜야 합니다. 이제는 지방의 활력과 경쟁을 통해 국가의 총체적인 역량을 키워 나가야 합니다.

셋째, 검찰과 경찰, 국세청과 공정거래위원회 등 사정 및 감독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기관들의 정치적 독립이 확보되어야 합니다.

넷째, 대통령의 단임제는 이제 바뀌어야 합니다. 단임제는 임기 내에 성과를 남기려고 여론과 민심의 수렴 없이 정책의 수립과 집행을 서두르게 됩니다. 권위주의적 발상이 나타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다섯째, 청와대 수석비서관제도를 폐지하고 작은 청와대가 되어야 합니다. 정책 결정 과정이 청와대 비서실장과 수석비서관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원래 헌법의 취지대로 각 부 장관들과 관료를 중심으로 이루어져야 정부의 행정능력이 극대화될 수 있습니다.

국민들을 행복하게 만드는 정치, 국민들이 희망을 품게 하는 정치, 국민들에게 용기를 주는 정치가 필요합니다. 이처럼 국민을 위한 정치가 바로서려면 국가의 수장인 대통령 리더십부터 먼저 바뀌어야 됩니다.

우리는 작고 효율적인 능력 있는 정부, 사람이 우선시되는 정부, 탈규제 정부, 투명하고 창의적인 정부, 광범위한 참여와 분권화를 이룰 수 있는 민주적인 정부가 필요합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제왕적 대통령이 아닌 지혜롭고 창의력이 필요한 대통령을 원합니다, 국민들은.

먹고살기는 힘들어도 마음만은 행복하게 해 주는 그런 대통령을 국민들은 원합니다.

대한민국에 공존하는 다양한 목소리를 희망으로 담아 낼 수 있는 포용력과 국민 대통합, 국민 대화합의 철학이 있는 대통령을 원합니다, 우리 국민들은.

감사합니다.

○부의장 이석현 지금 마이크가 꺼졌는데도 목소리가 크셔서 마이크가 안 꺼진 것처럼 들렸습니다. 착오 없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경남 밀양·창녕 출신의 새누리당 조해진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해진 의원 안녕하세요?

경남 밀양시창녕군 새누리당 국회의원 조해진입니다.

국무총리님 잠깐 모시겠습니다.

역사는 집단기억이고 국가는 그 집단기억을 공

유하는 공동체라는 말이 있습니다. 집단기억을 공유하는 것이 가능하게 만드는 것이 교과서이고 그래서 우리에게 교과서라고 하면 무오류, 진리 같은 그런 절대신뢰의 가치를 가진 것입니다. 그런 기준에서 보면 우리에게 역사에 관한 한 교과서는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역사 인식에 관한 한 대한민국은 아직도 진정한 공동체라면 것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역사 교과서 시장을 지배하는 것은 잘못된 책자들입니다. 지금의 역사 교과서 시장은 악화가 양화를 완전히 구축해서, 쫓아내서 잘못된 1개의 서적이 사실상 시장을 장악하고 독점하고 지배하는 구조입니다. 이런 현실에 대해서 총리님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국무총리 황교안 정부는 기본적으로 검정체제를 존중하고 그동안 계속 확대해 왔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지금도 중·고등학교에서 사용하고 있는 교과서의 85% 정도가 검정체제로 유지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역사 교과서에 관해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국정으로 돼 있는 것을 검정으로 전환을 해서 운영해 보니까 특정 성향의 특정 의견을 가지고 있는 좀 편파적인 이런 분들이 교과서에 아무 통제 없이 직접 관여할 수 있게 돼 있어서 이런 것들이 좀 시간이 지나면서 결과적으로 지금 보면 우리 학생들이 보고 있는 역사 교과서가 굉장히 왜곡되어 있고 편향된 시각으로 기술돼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학생들에게 그대로 가르쳐서는 안 되겠다, 바른 역사를 균형 있게 가르쳐야 되겠다 이런 생각에서 국정 교과서를 올바른 역사 교과서라고 하는 이름하에 올바른 역사 교과서를 학생들에게 제공하기 위한 그런 노력을 시작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조해진 의원 저는 딸 셋을 키우면서 학교에서 배워 온 역사 내용 가지고 집에서 토론을 참 많이 했습니다. 잘못 배워 온 것을 제대로 바로잡아 주느라고 부녀간에 대화가 굉장히 많이 늘었습니다. 그것을 보면서 저는 일선에 있는 교사들이 내 소중한 자식들을 자신들 목표의 도구로 생각하는가, 실험의 모르모트로 생각하는가 하는 그런 정말 참담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이들한테 바른 역사를 가르쳐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올바른 교과서를 만들어야 되고 올바른 역사 교과서를 만드는 데 우리 국민들의 뜻

그리고 국론을 모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당연한 말씀이지만 바른 역사 교과서는 친일이나 반민족행위 같은 것을 은폐하거나 두둔해서도 안 되고 그렇게 할 수도 없습니다. 또 동시에 북한의 저 반인륜적이고 인권을 유린하는 그런 폭압적인 체제를 두둔해서도 안 되고 시대착오적인 공산 봉건·세습 독재체제를 비호해서도 안 됩니다. 전 세계에 유례없는 성공 신화를 일궈 낸 우리 대한민국의 역사를 부정해서도 안 됩니다. 그리고 이승만 전 대통령을 비롯해서 독립과 건국을 일궈 낸 건국의 아버지들 그리고 공산 침략으로부터 나라를 지켜 낸 위대한 지도자들을 모략하거나 격하해서도 안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한 총리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국무총리 황교안** 의원님 말씀에 공감하는 바가 많습니다.

자라나는 우리 미래 세대에게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의 정체성과 또 민족적 자긍심 이런 것들을 길러 주고 또 현재를 바르게 이해하고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교훈과 지혜를 줄 수 있도록 만들어지는 역사 교과서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서 객관적 사실에 입각하고 더 헌법적 가치에 충실한 균형 잡힌 교과서를 개발해서 학생들로 하여금 공부할 수 있도록 해 주어야 한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해진 의원** 바른 교과서 만들 때 유념해야 될 게 중국의 덩샤오핑도 마오쩌둥의 공과에 대해서 공이 7이고 과가 3이라고 그랬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성공의 역사 이면에 있는 그들은 그늘대로 직시하는 그런 교과서가 되어야 되고 친일과 종북을 동시에 청산하고 극복하는, 단절하는 그런 교과서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연구 과정에 있는 서투른 집필자들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대표 지성들, 석학들이 이 일을 맡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지금의 이 교과서 논쟁이 그동안 앞만 보고 숨차게 달려온 우리 소중한 대한민국 근대사, 현대사를 우리 모두가 돌아보고 또 성찰하고 평가하는 그런 국민적 공론의 계기로 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다음 두 번째, 총리님 지금 선거구획정위가 난항을 겪고 있고 농어촌선거구에 대해서 아직 결론을 못 냈는데 저는 인구수만을 가지고 선거구를 획정하는 것은 잘못이라고 생각합니다. 인구수 이외에도 각 선거구의 면적 또 행정구역 그

리고 역사성이나 생활권 그리고 현실적합성,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다 고려해서 선거구를 획정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석현 부의장, 정의화 의장과 사회교대)

왜냐하면 농어촌의 지방사무는 주민 복리만기 전부가 아닙니다. 국토 관리도 굉장히 중요한 책무입니다. 주민 개개인의 삶을 대변하는 것뿐만 아니고 그 지역에 산재해 있는 농지, 산림, 하천, 해수면 그리고 자연 또 환경, 생태, 유적과 유물, 문화재, 이런 국토의 영속성이나 생명성을 보존하고 관리하고 지키는 것도 지방의 굉장히 중요한 책무입니다. 이런 모든 사무를 전체적으로 대변하는 것이 또 그 지역구의 국회의원입니다.

총리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국무총리 황교안** 의원님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공감합니다.

농어촌의 선거구 문제가 얼마나 중요한지, 얼마나 또 심각한 문제인지 같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조해진 의원** 대의적 측면에서도 농어촌 복합 선거구는 워낙 지역이 넓고 이동에 제약이 심하기 때문에 그 지역구 국회의원이 주민 한명, 한명을 만나서 이야기 듣고 소통하고 대변하는 것이 굉장한 물리적 한계가 있습니다.

그 국회의원을 뽑은 주민 입장에서 보면 대도시 유권자보다도 그 의원 만나서 자기 뜻 전하기가 10분의 1, 20분의 1밖에 기회가 없는 겁니다. 정치적으로 굉장한 불이익과 불평등을 겪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런 현실을 도외시했던 우리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전형적인 책상물림 재판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런 오류에 대해서 저는 우리 국회의 정개특위하고 선관위 선거구획정위원회에서 꼭 바로잡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총리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무총리 황교안** 그 문제는 지금 의원님 걱정하시는 바와 같은 어려움들을 이야기하시는 분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여야 간에 충분한 협의를 거쳐서 좋은 결론을 내 주시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조해진 의원** 다음 여쭙겠습니다.

지금 100년 만에 최악의 가뭄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4대강 유역은 지금 관리 수위가 넘어 가지고 물이 넘쳐흐르고 있습니다. 그 유역에 있는 주민들은 가뭄 이

야기가 남의 이야기처럼, 남의 나라 이야기처럼 들립니다. 이 물이 넘쳐흐르는 4대강하고 바닥 드러나고 또 바짝바짝 땅이 타들어 가는 가뭄 지역하고 이 풍경이 너무 대조적입니다. 가뭄 걱정 없는 4대강 유역의 주민들의 그 여유하고 가뭄 피해 지역의 주민들의 그 한탄이 너무나 대조적입니다. 그렇게 안 보십니까?

○**국무총리 황교안** 아쉬운 부분입니다. 4대강 사업을 통해서 많은 수자원이 확보돼 있는데 그것에 대한 활용 방안이 조금 더 일찍 논의되고 추진이 되었으면 이런 가뭄으로 인한 국민들의 고통이 훨씬 더 덜어질 수 있었는데 이 부분에 관해서 사회적 논란이 많이 있어서 진행되지 못한 점에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지금이라도 할 수 있는 수자원 관리 대책을 만들어서 추진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조해진 의원** 한동안은 이 4대강을 왜 한꺼번에 했나, 하나만 먼저 해 보고 그 결과를 보고 나머지 천천히 해도 되지 않았느냐 하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지금은 거꾸로 4대강 할 때 왜 섬진강까지도 못 했느냐, 그 지류·지천까지 왜 못 했느냐, 그리고 저수지·소류지 같은 데를 준설하고 둑 높여 가지고 저수량을 왜 더 못 확보했느냐, 중·소형 댐 그때 왜 좀 더 만들어 가지고 수자원 확보 못 했느냐 하는 그런 아쉬운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총리님 말씀처럼 앞으로도 기후변화, 기상이변이 계속 심해질 거고 기상청은 이 100년 만의 가뭄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 안 끝나고 내년 까지도 계속될 거라고 지금 예보를 하고 있는 상황을 생각한다면 그동안 미뤄 뒀던, 4대강 논란 때문에 정치적으로 더 미뤄졌던 지류·지천 정비하는 거, 또 저수지와 소류지 준설하고 둑 높이고 저수 용량 넓히고 중·소형 댐 만드는 거, 이 일을 빨리 착수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

지금 긴급하게는 4대강의 넘치는 물을 빨리 멀리 떨어져 있는 가뭄 지역에 관로를 매설해 가지고 연결해서 사용하게 하는 이수사업을 빨리 저는 시급하게 진행을 해야 된다고 보고.

제가 듣기에는 이 사업에 대한 연구용역이 지금 진행 중인데 이게 내년 10월에 나올 예정이라고 합니다. 내년 10월에 연구 결과 보고서 하면 예산이 후내년 예산은 안 잡히고 2018년 예산이라야 겨우 빨리해도 잡힙니다. 그래서 이걸 용역을 당겨 가지고 내년 상반기에 용역이 나와서 상

반기 정부 예산편성할 때부터 이 사업들에 대한 예산이 들어가야 2017년부터는 이 사업을 저는 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총리님께서 이 부분은 잘 살피셔서 좀 독려를 해 주실 걸 부탁드립니다.

○**국무총리 황교안** 중서부 지역의 가뭄에 대해서는 제가 언론을 통해서도 많이 봤지만 또 현지에서의 어려움 호소도 있었기 때문에 저희 총리실에서 또 중심이 돼서 이게 여러 부처와 관련된, 치수 문제는 여러 부처와 관련된 업무이기 때문에 총리실에서 그걸 총괄적으로 관리를 하면서 우선 급한 물들을 좀 공급할 수 있는 방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모여져 있는 물을 관수로 연결해 가지고 우선 급하게 좀 진행하는 것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당초 계획보다 좀 당겨서 가급적 조속하게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고 앞으로도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해진 의원** 총리님 좀 답답한 말씀을 하나 드려야 되는데, 작년에 올해 연이어서 풍작이 되어서 굉장히 좋은데 쌀값 떨어질까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현지에서는. 그런데 수확기를 앞두고 농수산물유통공사에서 9월 말, 10월 초, 2주 동안에 수입쌀, 밥쌀용 수입쌀을 국내산 쌀의 60%, 70% 가격에 방출을 시작해 가지고 쌀값이 지금 폭락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의 시름에 분노를 촉발하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농정 당국이 어떻게 참 이런 정책을 할 수 있는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인데, 안 그래도 정부가 지금 WTO의 의무수입 물량보다도 공공비축미를 더 적게 매입해 가지고 우리 농민들이 분노를 나타내고 있는데, 쌀 수확기에 수입쌀을 대량으로 방출해 가지고 값을 떨어뜨리는 이런 거는 농촌에 있는 농민들은 대놓고 정부가 농업 죽이고 농민 죽이는 살농정책이라고 생각하고 격분하고 있습니다.

총리님, 이게 잘한 일이라고 보십니까?

○**국무총리 황교안** 그런 일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사전에 조치를 하도록 그렇게 농림부와 상의를 하고 있었습니다마는, 지금 의원님 말씀하시는 그런 문제가 있는지 검토를 해서 쌀 수확기에는 방출 물량을 축소해서 국내 쌀값에 미치는 영향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운영되도록 상의를 하겠습니다.

○**조해진 의원** 그리고 농민들이 바라는 대로 쌀

수입은 최소한으로, WTO 협정 범위 내에서 최소한으로 줄이고 공공비축미 매입은 더 확대해주는 정책을 고려해 주시고요. 수입쌀에 대해서는 대북 지원용이나 아니면 해외 원조용이나 주정용 또 가공용, 이런 용도로 격리시키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국무총리 황교안** 의원님 말씀을 충분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다만 여러 가지 FTA상의 문제가 있다든지 또 대북 지원의 부분에 관해서는 검토할 필요가 있는데 전반적으로 의원님 말씀을 감안해서 농민들의 어려움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조해진 의원** 그리고 이미 여야 정당들이 걱정하고 있었던 대로 김영란법으로 농민들이 직격탄을 맞고 있는데 이것도 막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김영란법 시행령이 10월에 입법예고가 예상되는데 가능하면 여기에서 농수축산물을 제외해 주고, 그게 완전 제외하는 게 불가능하다면 농수축산물 그것을 이용한 선물의 경우에는 허용 상한가를 현실에 맞게 책정해 달라는 그런 우리 농민들의 애타는 목소리를 꼭 수용해서 가지고 시행령에 반영해서 농민들, 그렇지 않아도 어려운 농민들 억울한 피해가 없도록 애써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국무총리 황교안** 그 문제는 부패를 바로잡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부패척결 추진을 하는 과정에서 입법이 된 것인데 어떤 특정 품목을 제외하는 것은, 그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쉽지가 않은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농어민들 또 수업인들의 어려움들을 최대한 감안해서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합리적인 방안들을 마련하도록 관계부처와 상의를 해 나가겠습니다.

○**조해진 의원** 시행령으로 만약에 해결이 안 되면 입법으로 해결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노동 개혁에 대한 논란이 많습시다마는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노동개혁의 핵심이, 첫째 노동자들의 처우개선이나 후생복리와 관계없는 정치투쟁, 이념 투쟁 이것을 이제 청산해야 된다는 거고, 두 번째는 노사 간에 대화하고 타협하는 것을 백안시하면서 강경 일변도로 투쟁만 내세우는 그런 노선을 이제 종식시켜야 된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중소 하청 근로자들과 비정규직

또 청년실업자들의 희생을 딛고 서 있는 대기업·공공기업 중심의 기득권적인 귀족노조 노동계급을 저는 혁파해서 극소수의 노동귀족과 나머지 절대다수의 저임금 노동자 또 실업자들 간의 이 양극화, 이 계급화를 해소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보는데, 총리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무총리 황교안** 중요한 핵심 중 하나입니다. 노동개혁의 기본적인 방향은 노동시장의 이중구조,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도 넓은 의미의 이중구조입니다마는 그것을 개선하는 것과 특히 지금 어려운 청년 일자리를 확충해서 청년들의 애로를 해소하는 것, 그 두 가지를 큰 목표로 가지고 있는데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사회 각계가 모두 대승적인 그런 시각에서 양보와 타협을 통해서 어려운 분들의 힘든 것들이 조금이라도 해소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주셨으면 좋겠다…… 정부도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조해진 의원** 그런 측면에서 저는 우리 정치권도 재벌도 비호해서는 안 되지만 기득권적인 귀족노조 비호하는 일도 이제 그만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양심적인 선택이라고 생각합니다.

말로는 노동약자들 편이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강자 편에서 가지고 결과적으로는 착취와 격차와 노동 양극화 구조를 고착시키는 일을 이제 그만하고 우리 정치권도 노동사회 내부의 피착취 계층이라고 할 수 있는 중소기업 근로자, 노조도 만들 수 없는, 자기주장 한마디 못 하는 이 대다수의, 절대다수의 근로약자들, 노동약자들과 비정규직 노동자들 그리고 청년실업자들 편이라는 것을 분명히 밝혀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총리님, 그것에 대해서 혹시 하실 말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국무총리 황교안** 의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많은 걱정들을 하듯이 귀족노조가 일반 근로자들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고액 연봉을 받으면서도 파업을 계속 반복하고 있고 또 일자리를 양보하지 않고, 비정규직에게 또 하청에 양보하지 않고 하는 이런 문제들은 정말 빨리 좀 해소가 되어서 어려운 근로자들에게 기회가 더 확충이 되어야 된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이번 노동 개혁도 중요한 아이টে으로 그 부분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조해진 의원** 고맙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지난번에 노벨과학상 수상 실적이 일본과 한국이 21 대 0이라는 보도를 보고 어떻게 느끼셨습니까? 저는 일본에 대해서 패배감과 열등감을 느꼈습니다. 우리가 이 정도밖에 안 되나, 열심히 쫓아왔다고 생각했는데 아직도 일본과의 사이에 이렇게 먼 격차가 있나, 일본에 대해서 정신적 자존심 말고는 우리가 내세울 게 이렇게 없나 하는 그런 자괴감이 들었습니다.

실력이 뒷받침되지 않는 말은 메아리 없는 공허한 외침입니다. 노벨과학상 21 대 0은 오늘 우리가 서 있는 냉엄한 현실을 일깨워 준 죽비입니다. 진정한 그 길을 하루라도 앞당기기 위해서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 시점에서 우리 모두 겸허한 마음으로 스스로 돌아보고 굳은 결의와 각오로 참된 해방과 독립을 위해서 온 나라가 새롭게 출발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

○의장 정의화 조해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남 무안·신안 출신의 새정치민주연합 이윤석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석 의원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정의화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황교안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새정치민주연합 전라남도 무안군신안군 출신 이윤석 의원입니다.

총리님께 질문하겠습니다.

국정 교과서 블랙홀이 시작됐습니다.

총리님, 경제가 이토록 어렵고 국민의 삶이 참 어려운데 민생에 온 힘을 쏟아야 하고 민생경제 살리고 청년 일자리를 늘려야 할 이때에 대통령과 정부 여당이 왜 굽어 부스럼을 만드는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총리님, 생각 어떠세요?

○국무총리 황교안 경제를 살리는 일은 온 국민들이 다 바라는 바고 또 꼭 필요한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미래를 위해서는 미래 세대가 바른 교육을 받고 바로 성장해서 우리나라의 자랑스러운 전통을 이어가는 것도 못지않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을 언제까지 미룰 수가

없기 때문에, 물론 경제를 살리는 것이 중요하고 긴박한 현안이라는 합니다는 말이 고칠 점들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윤석 의원 자, 총리님, ‘훌륭한 지도자는 역사를 바꾸고 저열한 권력자는 역사책을 바꾼다’는 말씀을 들어 보셨습니까?

○국무총리 황교안 예, 그런 말을 들어 본 것 같습니다.

○이윤석 의원 또 총리님, ‘좋은 대통령은 역사를 바꾸고 나쁜 대통령은 역사책을 바꾼다’는 말씀을 들어 보셨습니까?

○국무총리 황교안 뭐 말씀하시지요? 저는 그런 부분은 잘 들어 보지 못했습니다.

○이윤석 의원 자, 역사란 권력 투쟁에서 승리한 자의 전유물이라는 아주 바람직하지 못한 역사관을 박근혜 대통령이 따라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무총리 황교안 대통령께서 그런 역사관을 따라가고 있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로 많은 여론을 수렴하고 합리적인 방법들을 강구하면서 미래 세대의 역사교육을 어떻게 할 것인가 고민하면서, 어제 교육부의 정책 발표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윤석 의원 총리님, 박정희 대통령, 아버지는 군사쿠데타, 박근혜 대통령, 그분의 따님은 역사 쿠데타 이런 이야기가 시중에 돌고 있는 것 들어 보셨습니까?

○국무총리 황교안 그런 말씀은 함당치 않은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윤석 의원 아니, 들어 보셨냐고요?

○국무총리 황교안 들어 보지 못했습니다.

○이윤석 의원 신문에도 나온 이야기이고 시내 곳곳에 걸려 있습니다.

왜 이 지경까지 국론분열 사태를 이끌고 가고 있는 겁니까?

○국무총리 황교안 지금 기본적으로 역사 교과서 문제는 균형 있는, 전문가들로 하여금 역사적 사실에 입각한, 그래서 국민적 공감대에 부합되는 이런 올바른 역사 교과서를 만들어서 우리 차 세대를 교육하자 이런 취지에서 정책을 진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관해서 제가 말씀드린 그 부분은 한치의 변화도 없이 그대로 정확하게 미래 세대를 위한 교과서로 만들어지고 진행이 될 것입니다.

그것이 왜 나쁜 평가를 받아야 하는지에 관해

서 정말 저희가 더 많은 설명을 드려야 되겠다 생각합니다.

○**이윤석 의원** 제가 차근차근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국정 우선순위에 아주 큰 문제가 있습니다.

국무총리는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총리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우리 국무총리께서는 무조건 ‘예스맨’ 총리가 아니십니까?

○**국무총리 황교안** 저는 옳은 일은 ‘예스’로 답하고 또 옳지 않은 일은 ‘노’로 답해 왔습니다. 지금도 그런 기조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윤석 의원** 황우여 지금 교육부총리께서 ‘이번 국정 교과서 문제, 총대를 메고 싶지 않다. 수많은 역사학자들을 만나 보니 정말 할 수 없는 일이다’, 그리고 특히 ‘이미 내 손을 떠났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국무총리께 그 손이 지금 있습니까?

○**국무총리 황교안** 뭐가 있냐고 말씀하십니까? 내 손을 떠났으니까 그 결정권이 저에게 있느냐?, 이런 말씀 하신 겁니까?

○**이윤석 의원** 결정권이 총리님께 있냐고요.

○**국무총리 황교안** 기본적으로 이 문제는 교육부의 일이고 교육부가 그동안 여러 전문가들의 이야기를 꼭 수렴해서 그런 결정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윤석 의원** 자, 정리를 해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부총리도 아니고 총리도 아니고 대통령께서 독단적으로 지금, 강압적으로 밀고 가고 계십니다.

국정 교과서 여론이 처음에는 안 좋았습니다. 찬성이 많았습니다. 이게 점점 더, 지난 주말에는 국정 교과서에 대해서 반대 여론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특히 무당층에서는 찬성이 35.8%인데 국정 교과서 반대가 지금 56%로 나오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국정 교과서의 내막을 잘 몰랐던 국민들이 이제 정권의 의도를 알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동의하십니까?

○**국무총리 황교안** 정권의 의도는 학생들에게 바른 역사를 가르치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관해서 공감하는 여론이 적지 않다, 더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어떤 여론의 다과를 떠나서 우리나라의 미래를 어떻게 설계할 것인가에 관한 근본적인 문제라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석 의원** 자, 이런 여론 때문에 정부에서는 국정 교과서라는 표현을 대신해서 ‘단일 교과서’ ‘통합 교과서’ ‘균형 교과서’, 별의별 말을 다 끌어다가, 이제는 ‘올바른 역사 교과서’로 내놓았습니다.

출판사가 편집을 했을 때 검정 교과서는 마지막 책임은 교육부에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국무총리 황교안** ……

○**이윤석 의원** 검정 교과서의 문제점을 지금 계속 지적하시는데 그 책임 또한 정부에, 교육부에 있다 그 말이에요.

알고 계십니까?

○**국무총리 황교안** 교육부에도 책임이 있고 또 집필진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이윤석 의원** 최종 감수자가 교육부이지 않습니까?

○**국무총리 황교안** 지금 교육부가 잘못된 부분을 수정하라고 하는 지시를 하자 그 당사자들이 소송을 내서 1심에서 패소하고 2심에서도 패소했는데 다시 또 3심에까지 올려 보내서 계속 논란을 확산시키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우리 교육자들의 입장에서는 좀 자제해야 될 일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윤석 의원** 총리님, 일제 쌀 수탈을 수출로, 의병 학살을 토벌로, 이토 히로부미 을사조약을 아주 성공적으로 한일합방까지 마무리했다, 이런 친일미화, 역사 왜곡 이것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무총리 황교안** 그런 부분들을 고쳐가자는 것입니다. 이번에 우리가 객관적 사실에……

○**이윤석 의원** 이게 과거의 정권들에서 이야기 한 것입니다.

○**국무총리 황교안** 근거한 균형 있는 역사 교과서를 만들자고 하는 것이 지금의 우리의 목표입니다.

○**이윤석 의원** 이게 바로 여러분들이 지금 40년 전으로 회귀하려고 하는 교과서에 실렸던 내용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반대를 하고 있는 것이고, 이 문제가 대통령이 결심을 했기 때문에 대통령 한 사람 생각이 바뀌면 해결되는 문제입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국무총리 황교안** 과거로의 잘못된 회귀는 있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의원님께서도 그렇게 되지 않도록 우리 국정 교과서 개편 작업에 관심을 가지고 조언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미래에 좋은 교육을 하기 위해서 역사

교과서를 개편하고자 하는 방침을 정한 것이라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윤석 의원 우리 총리님께서 법과 원칙주의 자시지요?

○국무총리 황교안 민주시민은 법대로 살아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윤석 의원 아주 소신이 확실한 분이시지요?

○국무총리 황교안 법조인이 법대로 사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이윤석 의원 민주주의에 대한 신념이 아주 강하신 분이시지요?

○국무총리 황교안 민주주의, 소중한 것입니다.

○이윤석 의원 민주주의에 대한 신념이 아주 강한 분이시지요, 대한민국 국격에 맞게?

○국무총리 황교안 민주주의가 소중하기 때문에 지키기 위해서 노력을 해 왔습니다.

○이윤석 의원 자, 지금부터 총리님의 역사성, 정체성은 무엇인지 여쭙겠습니다.

5·16은 됩니까?

○국무총리 황교안 저의 어떤 의견들을 여러 번 여쭙 보셨는데 그 문제에 관해서 제가 일일이 다 말씀드리지는 않는 것만 야기하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우리 헌법에 기초한 역사관을 갖기 위해서 노력을 해 왔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윤석 의원 이런 우유부단한 답변이 어디 있습니까, 천하의 총리께서!

5·16이 도대체 됩니까?

○국무총리 황교안 원칙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왜 답변을 못 해요?」 하는 의원 있음)

○이윤석 의원 (책자를 들어 보이며)

이 책은 됩니까?

○국무총리 황교안 제가 쓴 집시법 해설서입니다.

○이윤석 의원 이 책에 보면 5·16을 혁명이라고 해 뒀습니다.

이것 총리께서 쓰신 책 맞지요?

○국무총리 황교안 그 집시법은 집시법 개정 시안에서 설명한 이런 용어들을 그대로 전제해서 기록을 한 책입니다.

○이윤석 의원 구차하게 변명하시면 안 됩니다.

헌법재판소에서 93년, 95년, 2003년…… 2009년에 총리님께서 이 책을 쓰셨어요. 그 전에도 군

사쿠데타라고 했는데 우리 총리님께서서는 군사혁명으로 썼다는 말이에요.

도대체 황교안 총리, 정체관이 됩니까? 역사관이 됩니까?

○국무총리 황교안 제가 지금 말씀드렸습니다.

집시법 해설서를 쓰면서 집시법……

○이윤석 의원 그런 우유부단한…… 아니, 총리님 이것 진짜 심각한 겁니다.

정체성이 됩니까?

(「말씀을 들어 봐」 하는 의원 있음)

총리님 정체성이 됩니까?

○국무총리 황교안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헌법에 충실……

○이윤석 의원 역사성은 됩니까?

○국무총리 황교안 우리 헌법에 충실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혁명이에요, 쿠데타예요? 심플한 대답을 왜 그렇게 돌려서 해?」 하는 의원 있음)

○이윤석 의원 총리님, 총리님 자리가 어떤 자리입니까? 정체성이 뭐고 역사성이 됩니까, 도대체?

헌법재판소·대법원 판결 모두 쿠데타라는데 본인은 아직도 혁명이라고, 오전 답변 정말 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정체성이 뭔지 말씀해 보세요.

○국무총리 황교안 헌법가치에 따라서 공직생활을 하기 위해서 노력해 왔고 공사 생활에서 그 점을 유념하면서 지금까지 지내왔습니다.

○이윤석 의원 부끄러운 줄 아세요.

국무총리님, 부끄러운 줄 아세요.

○국무총리 황교안 무슨 말씀이십니까?

○이윤석 의원 부끄러운 줄 아세요.

5·16이 도대체 쿠데타입니까, 혁명입니까?

부끄러운 줄 아세요.

○국무총리 황교안 그렇게 말씀하실 일이 아닙니다.

○이윤석 의원 뭐가 이렇게 말하는…… 이걸 심각한 거예요.

○국무총리 황교안 여러 가지 견해들이 있습니다.

(「답을 하세요, 답을」 하는 의원 있음)

○이윤석 의원 이걸 대한민국의 어떤 역사성을 가장……

(「얘기를 좀 들어 봐요」 하는 의원 있음)

해 보세요, 한번 또.

「답변을 안 하잖아요, 지금 답변을. 두둔할 걸 두둔하세요」 하는 의원 있음

「답변을 못 하고 있잖아요, 지금」 하는 의원 있음

「총리가 그것도 답을 못 합니까? 혁명입니까, 쿠데타입니까?」 하는 의원 있음

「애기를 들어 봐요, 들어 봐」 하는 의원 있음

총리님께 다시 한 번 제가 여쭙겠습니다.

국민을 강제로 통제하려고 한다든지 또 공포정치로 억압해서 몰고 가려는 유혹에 대통령과 총리가 빠져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같이 한술밥을 먹는 한식구라는 새누리당도 통제가 되지 않고 시끄럽습니다. 그리고 우리 국민의 반은 박근혜 대통령을 지지하지 않았다는 사실도 기억해야 됩니다.

공정한 예산 분배, 탕평 인사를 통해서 박근혜 대통령께서는 좀 더 진지하고 겸손하게 국정을 이끌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총리 공감하십니까?

○국무총리 황교안 공정한 국정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윤석 의원 저는 황교안 총리님이 이 정도이실지는 몰랐습니다.

○국무총리 황교안 어느 부분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윤석 의원 아주 실망스럽습니다. 역사관, 정체성 그리고 소신, 민주주의의 어떤 끝없는 본인의 추구, 그런 게 다 실망스럽습니다.

우리가 이 정부가 잘되기를 바랍니다. 세월호와 메르스 사태에 대해서 어떤 아픔들은 하늘에서 그냥 내렸던 그런 일들이라 생각하고 위안을 삼더라도 정말 이렇게 국론을 분열시키는, 여의도 정치와 시도 때도 없이 대립을 세우는 이 박근혜정부와 황교안 국무총리에 대해서 이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총리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무총리 황교안 의원님의 구체적인 팩트에 대해서는 제가 의견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마는 평가에 관해서는 그렇게 쉽게 평가하시지 않았으면 좋겠고, 저는 말씀드렸듯이 우리 헌법과 법 질서를 지키기 위해서 노력해 왔고 지금도 그 기초하에서 그러나 국민들이 원하는 것을 추구하면서 국민들을 위해서 어떤 것이 좋겠는지 여러 의견들을 모아 가면서, 제 독단이 아니라

여러 의견들을 수렴해 가면서 지금 직무를 수행하고 있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이윤석 의원 우리 역사 교과서를 과거에 손을 대서 수정해서 어려웠던 시절이 세 번 있습니다. 조선왕조실록—선조수정실록, 현종개수실록, 경종수정실록—입니다. 이 핵심은 정당성이 미약한 반정과 사화의 기록을 수정한 것입니다.

조선왕조실록이 수정된 세 차례의 공통점이 권력은 잡았지만 역사 앞에 자신 없는 세력들에 의해 자행된 일이었습니다.

총리님, 혹시 지금의 흐름 자신이 없습니까?

○국무총리 황교안 무슨 말씀입니까? 전혀 그런 생각 없습니다. 거듭 말씀드렸듯이 바른 교과서를 만들어서……

○이윤석 의원 그러면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총리님의 역사성, 역사관, 정체성은 뭘니까, 5·16?

○국무총리 황교안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그 부분 말씀드리면 또 다른 많은 논란이 생기기 때문에, 저는 기본적으로 우리 헌법가치에 충실한 공직자가 되기 위해서 노력해 왔다는 점을 거듭 말씀드립니다.

「총리가 그렇게 말하니까 논란이 더 생겨요, 시끄러워지고」 하는 의원 있음

「왜 답변을 강요해요, 강요하기는?」 하는 의원 있음

○이윤석 의원 자유민주주의 국가인 대한민국에서 역사 교과서의 국정화가 군사작전 하듯이 강행되고 있습니다. 이는 역사 앞에 당당할 수 없는 친일파와 유신 군사독재의 후예들이 자신들의 부끄러운 역사를 뒤집으려는 역사 쿠데타라고 생각하는데, 총리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무총리 황교안 오늘에 이르기까지, 어제 교육부에서 발표를 할 때까지 정말 다양한 의견들을 수렴하는 절차들을 거쳤습니다. 전문가들의 이야기도 들었고 교육현장의 이야기도 수렴했고 또 정치권의 얘기도 들었고, 이런 다양한 많은 의견들을 들어서 절차를 밟아서 진행하고 있는 것이지 이것이 무슨 군사작전 하듯이 그렇게 몰래 진행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많은 논의들을 거쳤습니다.

「야당에 자료도 제출 안 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제대로 알고 답변하세요」 하는 의원 있음

「본인이 나와서 질의해」 하는 의원 있음

○이윤석 의원 총리님, 40년 전의 동아일보 기사들을 몇 가지 보겠습니다, 총리님이나 저희들 자신이 얼마나 부끄러운 시대를 살고 있는지.

‘61년 5·16 혁명을 감행하여 정권을 장악하였다’……

화면 띄워 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한번 자세히 봐 보세요.

지금 총리님은 두려워서 말씀하시지 못하는 이야기들을 40년 전에 동아일보는 저렇게 잘못됐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또 두 번째 띄워 보세요.

한번 보시지요. 보이시지요?

‘자의적으로 해석할 수도 있기 때문에 교과서의 국정화는 문제가 있다’ 이런 내용들이지요.

또 세 번째 한번 띄워 보세요.

자, 또 계속 지금…… 국정 교과서입니다, 40년 전에. 지금 여러분들이 시도하려는 내용하고 비슷한 것들이에요.

자, 다음에 오전에 말씀했던 지금 북침이라는 용어는 어느 검정 교과서에도 없는데 총리님은 여러 교과서에 그런 비슷한 용어들이 있다고 했는데 아직도 못 찾으셨지요, 북침이라는 용어는?

○국무총리 황교안 아니,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고, 그런 부분에 관해서 제가 북침이라고 말씀을 드린 것이 아니었고 6·25 전쟁의 책임이 남북에 다 같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서술되어 있다는 취지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지금 이번에 교과서 개편을 하는 것이 40년 전에 그런 잘못된 그 부분들이 있는 부분을 답습을 해서 가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시대에 맞게 우리 국민들의 정서나 또 공감받을 수 있는 이런 새로운 바른 교과서를 만들자는 것이 지금의 목적입니다. 그게 이름이 ‘국정이다’ 하는 이 하나에 매어서 과거에 그 잘못된 것을 다시 할 그런 공무원이 어디 있겠습니까? 지금 저희가 바로 잘 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입니다.

○이윤석 의원 자, 여러분들은 여론몰이를 위해서 거짓말과 색깔론을 들고 나와서 국론을 분열시키고 있습니다, 지금. 역사 교과서 국정화의 명분이 없으니까 정부 여당이 들고 나온 것이 색깔론입니다. 다양한 국사 교과서를 싸잡아 중복 교과서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지금 김인정 교과서가 학생들에게 주체사상을

가르치고 6·25에 대해 북침인지 남침인지 헷갈리게 기술하고 있다고 했는데 과연 그런지 미래엔 교과서……

다섯 번째 띄워 보시기 바랍니다.

자, 총리님, 여러분들이 주장했던 북침이라는 용어는 전혀 나오지 않고 오히려 미래엔 교과서에 ‘6월 25일 새벽, 북한은 전면적으로 남침을 해왔다’고 기술돼 있습니다.

또 여러분들이 주장하시는 여섯 번째, 금성교과서를 한번 보겠습니다. 금성교과서에는 철저히 주체사상을 비판하고 있습니다. ‘김일성 개인 숭배로 이어졌다’고 아주 비판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런데도 국론을 갈가리 찢어 놓는 거짓말까지 동원을 해서 색깔론을 펴고 있는 이 상황이 정상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친일을 미화하고 유신을 찬양하려는, 역사 앞에 부끄러운 이런 현상들에 대해서 총리 인정하십니까?

○국무총리 황교안 친일이나 유신을 학생들에게 가르칠 사람 지금 없습니다. 그리고 미래에 맞는 이런 역사 교과서를 가르칠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검정체제하에서 만들어져 있는 교과서들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종합적으로 보시면 과거에 아까 의원님께서 보여 주신 이런 교과서도 그 이전 판을 한번 보십시오. 그런 부분들이 잘못되고 왜곡돼 있는 부분들이 많은데 그것을 교육부에서 많은 수정 요청을 해서 고쳐진 부분도 있고 출판사에서는 고쳤는데 집필진은 수용하지 못하겠다 해 가지고 지금 소송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런 분들이 쓴 이런 역사 교과서를 가지고 우리 어린애들에게 그것을 교육을 하는 것이 좋겠는가 저는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구체적으로 자료를 내세요. 여당한테만 주지 말고 자료를 같이 내세요」 하는 의원 있음)

○의장 정의화 자, 의원 여러분들! 지금 대정부 질문에서는 좌석에 계신 의원님들께서는 좀 발언을 삼가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국민들이 지금 보고 있습니다.

계속하십시오.

○이윤석 의원 자, 총리님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저희들이 이 시기에는 민생을 안정시키고 어떤 서민경제를 살리고 여러 가지 청년일자리를 늘리고 그리고 대한민국의 모든 문제들을 해결해

야 될, 그런 열심히 일해야 될 시기입니다. 지금 엉뚱하게 국정 교과서 문제를 들고 나와서 굵어 부스럼을 만들고 있단 말이에요. 이런 부분을, 지금 총리님 생각이 대통령 생각보다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는 않아요, 지금 보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대통령께도 건의를 해 주시고 총리님의 생각도 바꾸셔야 되고, 저는 그렇다고 생각하는데, 총리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무총리 황교안** 어떤 생각을…… 저는 소위 우리 교과서의……

○**이윤석 의원** 제가 또 반복을 해야 됩니까?

○**국무총리 황교안** 주체사상을 그대로 수용하는, 무비판적으로 수용하는 이런 것은 잘못됐다는 말씀을 드렸고……

○**이윤석 의원** 총리님, 총리님!

○**국무총리 황교안** 또 6·25 전쟁의 책임을 양측에 다 있는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하는 그런 교과서는, 그런 것들은……

(장내 소란)

그런 것들은 곤란하다고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런 부분은 우리가 학생들에게 바로 교육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윤석 의원** 총리님, 다시 북침이고 주체사상을 떠나서 지금 총리님께 제가 간절하게 요구한 게 있습니다. 총리님은 천하, 천하의 총리님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도대체 총리님, 총리님의 역사성은 무엇이고 정체성은 무엇이나 그 말이에요. 누구든지 지금 청문회에 나와서 '5·16은 쿠데타였다. 잘못된 역사였다', 박근혜 대통령까지도 후보 시절에 이야기했어요.

도대체 총리님, 5·16이 총리님한테는 쿠데타입니까, 혁명입니까? 너무 듣고 싶어요.

○**국무총리 황교안** 그 부분에 관해서 거듭 말씀드리다시피 지금 그 말씀을 또 하면 또 다른 논쟁이 지금 계속되지 않습니까? 지금도 제가 답을 안 드렸는데도 많은 논란이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관해서는 제가 '헌법적 가치에 입각해서 공직생활을 했다'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윤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세요.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정의화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여러분!

시대착오적인 반공 이데올로기가 뒤흔들고 있

습니다. 21세기 대한민국을 정부 여당의 누구 하나 제지하는 사람도 없습니다. 유신과 군사독재의 망령에 사로잡혀 국론은 갈가리 찢어지고 민생은 파탄 지경인데 나라를 이 지경으로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역사의 시계를 거꾸로 돌려도 분수가 있는 법, 어떻게 이렇게 한순간에 40년을 돌아가려 합니까? 이 나라는 대통령의 대한민국이 아니라 국민의 대한민국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정의화** 이윤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재차 의원님들에게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가 후진국 국회에 가 보면 많이 보는 모습을 우리는 안 보이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질문자가 모든 것을 책임지고 질문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다음 기회를 가져 가지고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장님, 후진적인 답변을 하잖아요, 후진적인 답변을」 하는 의원 있음)

그것도 질문자의 몫입니다. 그에 대한 것도 질문자에게 다 맡겨 두십시오.

다음은 충남 보령·서천 출신의 새누리당 김태흠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흠 의원**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정의화 국회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황교안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충남 보령·서천 출신 새누리당 김태흠 의원입니다.

이제 국가경쟁력 강화, 행정의 비효율과 낭비를 막기 위해 행정체제 개혁에 적극 나서야 합니다.

현 행정체제와 구조는 농경시대이자 일제시대였던 100여 년의 제도로 교통·통신·인터넷 등의 발전에 따른 주민의 생활·문화·경제권의 변화를 전혀 반영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교통과 과학이 발달된 첨단시대를 살아가면서 낡은 행정체제를 고수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하의는 한복 바지저고리를 입고 상의는 양복을 입고 살아가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또한 인구 감소 등으로 많은 지자체들이 기능을 상실했음에도 낡은 행정체제가 유지되고 있어 예산·인력 낭비가 극심하며 지자체 간 격차가 커지는 등 지자체 발전에 저해 요인이 되고 있습

니다.

본 의원은 시대의 흐름에 적합하며 행정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행정체제 대개혁에 정부와 정치권이 적극 나서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국무총리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억지 질문에 하여간 답변하시느라 고생이 많습니다.

질문에 앞서 충남 서부권이 유례없는 가뭄으로 8개 시·군에 식수를 공급하는 보령댐 저수용량이 20%, 그래서 제한급수를 하고 있어서 지역주민들이 고생이 많은데 정부에서 이에 대한 계획을 발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총리님께서 현장 방문 등 직접 챙겨 주실 것을 먼저 부탁드립니다.

○국무총리 황교안 예, 그 부분에 관해서는 저희 총리실에서 좀 선제적으로 대책을 마련해 가고 있는데 지금 의원님 말씀대로 한번 현장을 둘러보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김태흠 의원 총리님, 현행과 같이 200여 개 시·군으로 나누고 시도 또 시·군·구, 읍·면·동, 통·리 이런 4단계 행정체제를 시작한 것이 언제부터입니까?

○국무총리 황교안 4단계 체제가 여러 번 있었습니다마는 지금 체제와 같은 것은 1988년도에 도입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태흠 의원 그것은 일부 변경한 것이지만 기본체제의 큰 틀은 1914년에 이루어진 것 아니겠습니까?

○국무총리 황교안 예, 1914년부터 이런 체제가 진행이 돼 왔습니다.

○김태흠 의원 지금 전국 226개 기초단체 중 5만 이하 지자체가 몇 곳인지 아십니까?

○국무총리 황교안 한 50여 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태흠 의원 그렇습니다.

총리께서는 100여 년이 지난 시대에 뒤떨어진 현행 행정체제 개편 필요성에 공감을 하십니까?

○국무총리 황교안 많은 분들이 걱정하듯이 그러한 행정체제를 개편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저도 가지고 있습니다.

○김태흠 의원 지금 226개 기초단체 중에서 5만 이하가 48개, 인구가 1만 명에서 2만 명대가 열다섯 곳입니다. 그래서 다섯 곳 중 하나가 지금 5만 이하입니다.

총리께서는 이러한 인구 2만~3만 명의 지자체

가 지자체로서의 기능을 하고 경쟁력을 갖출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국무총리 황교안 그런 기능과 경쟁력을 유지하고 갖추는 데 아마 어려움이 없지 않다는 생각을 합니다.

○김태흠 의원 물론 이런 문제의 인식 속에서 과거 모든 정부나 정치권에서 이 행정체제 개편을 시도했었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실패를 봤지요. 노무현 정부 때도 지방행정체제개편특위를 국회에서 구성을 했고 행정체제 개편안도 마련했으나 결과를 이끌어 내지 못했고 또 이명박 정부에서도 국회에 특위 구성하고 또 정부에서 교부세 50억 지원하는 이런 부분도 발표하고 그랬지만 통합에 성공한 것은 창원·마산·진해 합친 통합 창원시 하나였습니다.

2010년도에도 지자체 간 통합의 방법과 절차를 정한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제정했고 또 자율통합 법제화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2013년에는 이 법을 또 보완해서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을 만들었습니다. 또 이 법에 의해서, 이 근거에 의해서 대통령 소속 지방자치발전위원회도 설립을 해서 지금 운영이 되고 있는데 지금 지자체 통합이 이루어진 곳은 청주와 청원 이거 하나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2개밖에 없는데……

총리님, 이렇게 통합 논의가 너무 저조한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국무총리 황교안 기본적으로 지자체가 시행이 되면서 지자체가 통합되기가 좀 어려운 구조로 바뀌었습니다. 그런 기본적인 구조가 좀 어려움을 주고 있고 또 지역주민들도 마찬가지로 통합에 대해서, 통합을 하는 곳이야 좋겠지만 되는 곳은 여러 가지로 좀 반발들을 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게 쉽지 않은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김태흠 의원 아니, 그렇다고 해서 그대로 방치시키면 안 되지 않습니까?

○국무총리 황교안 추진은 계속 해 나가야 됩니다.

○김태흠 의원 그 말에는 저도 동의를 하는데……

그래서 이게 95년도에 지방자치 실시되기 전에는 강제통합이었습니다. 그런데 지방자치 실시하고 이후에 자율통합에만 맡기기 때문에 이렇게 통합 논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래서 저는 이 지자체 간 자율에 맡겨서는 안

되고 행정구역 통폐합은 법 재개정을 통해서 강제성을 가지고 임해야 된다, 그래서 이 법 개정에 착수할 용의가 있는지 총리님께 묻고 싶습니다.

○**국무총리 황교안** 행정구역 통폐합에 대해서는 정치·경제·사회·문화 이렇게 굉장히 다양한 요소들이 복합적으로 돼 있는 사회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사안이기 때문에 어떤 행정가의 의지가 아니라 충분한 공감대가 형성되는 것이 선행이 돼야 된다, 그렇지만 필요하면 그런 것도 같이 공감대 형성을 위한 노력도 해 가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마는 그런 방법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총리님 들어가시고 행자부차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해 10월 헌법재판소가 선거구 간 표의 등가성을 2 대 1 이내로 맞춰야 한다며 헌법 불합치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 정치권에서 지금 한창 선거구 획정이 논의되고 있는데 현재의 인구편차 2 대 1 판결의 의미는 표의 등가성은 고려하되 도시지역 선거구는 인구수를 2에 가깝게 그리고 농촌지역은 1에 가깝도록 하라는 의미도 저는 내포되어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현재 논의되는 선거구 획정을 보면은 특별시·광역시 자치구와 수도권 대도시 행정구 중에 인구하한선을 겨우 넘긴 선거구는 그대로 두고 또 상한선을 넘는 구는 분구를 시키다 보니 인구 15만 내지 16만 대도시에는 그런 선거구가 많고 이는 결국 대도시 선거구만 대폭 늘리는 상황으로 지금 가고 있다, 그리고 반면에 농어촌 지역은 3~4개 군을 합쳐서 인구상한선에 육박하는 선거구를 만들다 보니 농어촌 지역의 대표성만 축소시키는 이런 형태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정부도 이에 대한 책임이 있다고 저는 봅니다.

현재의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에 따르면 행정구역 개편과 관리를 정부가 해야 되는데 이게 제대로 하지 않았다 하는 게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차관님,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제19조에 특별시 및 광역시의 관할구역 안에 두고 있는 구 중에서 인구 또는 면적이 과소한 구는 적정 규모로 통합하게 되어 있는데 진행되는 상황

이 있습니까?

○**행정자치부차관 정재근** 지금 현재 과소 구에 대한 통합은 진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김태흠 의원** 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행정자치부차관 정재근** 행정구역의 통폐합은 아까 총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무엇보다도 공감대나 지역주민의 통합 의지 또 주민의 합의 이런 것을 통해서 해야지만 무리 없이 진행이 되면서 여파가 크지 않기 때문에 저희들은 자율적으로 주민들의 의견을 듣는 과정에 있습니다.

○**김태흠 의원** 아니, 특별법 제19조 내용 정리 한번 해 주시지요.

○**행정자치부차관 정재근** 19조에……

○**김태흠 의원** 특별법 제19조에 과소한 구는 적정 규모로 통합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규정에 의해서 제가 지금 파악하기로는 인구와 면적이 과소해 통합 대상인 구가 지금 한 10개 정도 됩니다. 서울에는 종로구·중구 그다음에 부산 중구·동구, 부산의 연제구·수영구, 대구의 중구·남구, 인천의 중구·동구.

○**행정자치부차관 정재근** 예, 지금 지방자치발전위원회에서 발굴한 과소 자치구는 10개인 것으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알고 있습니다.

○**김태흠 의원** 인구가 과소한 구라면 인구 얼마를 기준으로 하는 겁니까?

○**행정자치부차관 정재근** 지금 인접 구하고 통합을 해도 해당 특별시나 광역시 자치구 평균에 미치지 못하는 구를 기준으로 삼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태흠 의원** 그래서 본 의원은 특별시·광역시 자치구의 인구는 최소 50만은 되어야 하고 그 이하면 과소 구의 통합을 적극 유도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차관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정의화 의장, 정갑윤 부의장과 사회교대)

○**행정자치부차관 정재근** 말씀드린 것처럼 과소 구의 통합에 대한 당위성은 이미 지방자치발전위원회에서 조사와 기준을 만들어서 이미 발굴이 된 거고요. 이것을 실제 통합하는 문제는 지금 말씀드린 대로 여러 가지 공감대 형성이라든지 지역주민의 의견 이런 여러 가지 변수를 고려해가지고서 추진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태흠 의원** 정부에서 이를 태만하게 관리했기 때문에 도시지역 선거구는 늘어나고 농촌지역만 줄어들어 농어촌지역 대표성이 훼손되는 상황이 이렇게 초래되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그중의 하나입니다.

차관님, 수도권 대도시의 행정구 설치 기준이 얼마나 됩니까?

○**행정자치부차관 정재근** 행정구는 지금 현재 인구 50만 이상이 된 자치단체의 경우에 행정구를 설치할 수가 있는데 이것은 반드시 설치해야 되는 것은 아니고 자치단체의 조례에 의해서 설치하되 행정자치부와 협의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김태흠 의원** 저는 이 문제도 50만인 수도권 행정구의 설치 기준을 상향을 시켜야 된다고 봅니다. 실제로 인구가 60만, 70만의 도시를 행정구 2개로 쪼갭니다. 그리고 그 행정구에서 선거구를 또 2개로 쪼갭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60만~70만의 그런 도시는 선거구가 4개나 됩니다. 농촌은 한 서너 개밖에 안 되는데요. 이게 지금 올바르게 행정시스템이나 행정관리가 제대로 된다고 생각합니까?

○**행정자치부차관 정재근** 지금 일반구의 설치와 관련해 가지고서는 선거구 획정과 관계없이 행정의 효율성 문제에서 저희들은 바라보고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구를 설치할 경우에는 대개 구청 하나당 공무원이 200~300명이 추가로 들고 또 동과 구와 시를 거쳐야 되는 새로운 계층이 생기기 때문에 구를 설치하는 것보다는 동을 크게 해서 그 동에서 시의 기능을 일부 가지고서 수행을 하는 것이 더 좋다는 식으로 지금 저희들이 해서 그것을 가칭 책임읍면동제로 해서 자치단체에 제안을 했더니 많은 대도시에서 구 설치보다는 이렇게 동이나 읍 단위를 크게 해 가지고 하는 것이 좋겠다고 해서 시범적으로 지금 제안이 많이 들어와서 하고 있습니다.

○**김태흠 의원** 지금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 가지고는 100년이 가더라도 행정 개편이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이런 불합리한 그런 부분에서 뭔가 도전적이고 좀 적극적으로 이 불합리함을 개선하기 위해서 정부에서는 지방자치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용의가 없습니까?

○**행정자치부차관 정재근** 저희들은 일단 행정을 얼마나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느냐의 문제는, 지금 4단계 행정체제를 어떤 식으로 개편해야 되는가는 지금 지방자치 20년이 된 시점에서 신중하게 검토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태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총리님, 잠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총리님과 행정자치부차관께 행정체제에

대한 질문을 드렸습시다마는 행정체제 개혁을 위해서는 행정체제 자율 통합을 유도해 대개혁을 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강제성을 띠어야 됩니다. 이미 시행착오도 거쳤습니다.

총리님, 정부에서 행정체제 대개혁안을 준비할 용의가 없으십니까?

○**국무총리 황교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충분한 공감대가 필요한데 또 한편으로는 시급성도 거론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발전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의견을 거쳐서 논의할 때 이런 부분들을 참작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태흠 의원** 그리고 이제는 행정체제 개혁의 추진을 역발상으로 대도시부터 시작하고 본 의원이 제기한 특별광역시의 인구 과소 자치구 등의 통합과 대도시 행정구 설치 기준부터 변경하시고 그리고 생활권 문화 차이 등으로 저항이 좀 큰 지방으로 저는 확대를 해야 된다고, 순서를 좀 역발상으로 바꾸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무총리 황교안** 한번 잘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김태흠 의원**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농어촌은 도농복합 형태의 30만~50만의 행정 단위로, 수도권과 대도시인 인구 100만 이상의 중대형 행정 단위로, 그래서 전국을 칠팔십 개 정도의 그런 지자체로 만들고 광역 시도를 없애서 행정 체계를 줄이는 것도 하나의 큰 방법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총리님께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서 적극적으로 문제 해결에 나설 용의가 있으십니까?

○**국무총리 황교안**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그런 방안은 오래전부터 논의가 되어 온 것입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진행이 잘 안 되고 있는 부분인데 그 방향을 긍정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이런 방법들이 있겠는지 관련 부처와 충분히 상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태흠 의원** 총리님께서 그동안 법무부장관으로서 헌법의 가치 수호와 또 법과 원칙을 지키는 데 노력을 해 오셨습니다. 그리고 또 총리 되신 후에 노인 시설이라든가 또 장애인 시설들 휴일을 통해서 돌보면서 사회적 약자의 입장에서 또 관심을 갖고 여기 행정을 펴시는 그런 부분들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개인적으로 이를 높이 평가합니다.

하지만 이제는 국무총리를 맡게 되셨기 때문에 국정 전반을 관리하고 국가의 현안에 대해서 적극 나서야 됩니다.

노동 개혁 등 4대 개혁 추진 과정에서 제가 볼 때는 정부의 국정홍보 기능이 미약합니다. 국정홍보 기능을 더 강화하기 위해서 홍보 전문가들로 구성된 기구 설치도 좀 고민해 봐야 된다고 그러는데, 총리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국무총리 황교안** 국정의 상세한 내용들을 국민에게 효과적이고 적절하게 과장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잘 알리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체제를 어떻게 하는 것이 좋겠는가에 관해서는 다시 고민을 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무튼 홍보에 대해서 국민들에게 알리는 일에 관해서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태흠 의원** 지금 온 나라가 역사 교과서 문제로 시끄럽습니다. 방금 전의 질의와 답변을 보면서 저도 참 답답함을 느꼈습니다. 마치 조선시대 사초로 갈등을 빚고 국력을 낭비했던 것이 연상돼 안타깝습니다.

총리님, 정부가 국정 교과서를 채택하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정리 좀 한번 해 주시지요.

○**국무총리 황교안** 거듭 말씀드렸듯이 역사 교과서를 검정으로 체제 선언을 한 이후에 많은 사실오류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편향성의 논란도 지속되고 있고 그것을 고치기 위한 정부의 노력에 대해서는 또 소송으로 대응을 해서 장기화하고 있고 이런 과정들을 거치면서 정말 시스템이 어떤 것이든 좋은 필자들이 다양한 국민들의 의견을 편향되지 않게 객관적으로 잘 정리해서 균형 있는 역사 교과서를 어린 학생들에게, 물론 대학생들 같으면 자기들이 스스로 이것저것 탐구해서 연구해서 할 수 있습니다마는 아직 어린 학생들에게는 바른 역사 사실들을 전제로 해서 교육을 하는 것이 필요하겠단 그런 방향으로 국정 교과서에 대한 논의를 시작했고 앞으로 그렇게 진행을 해 나갈 계획입니다.

○**김태흠 의원** 저도 총리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본 의원은 역사의 기록은 두 가지 원칙에 의해서 기록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첫째는 팩트입니다. 즉 사실에 입각해야 합니다.

동의하십니까?

○**국무총리 황교안** 예, 맞습니다. 그렇게 해야만 됩니다.

○**김태흠 의원** 그리고 둘째는 균형감이 있어야 합니다. 역사 기록은 승리자와 패배자 그 시대의 주류 비주류의 입장에서 벗어나서 균형감 있게 기록이 되어야 됩니다.

이 말에도 동의를 하십니까, 총리님?

○**국무총리 황교안** 예, 의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객관적 사실에 입각하고 또 우리 국민들이 추구하는 헌법적 가치에 충실한 균형 잡힌 교과서를 만들어서 학생들을 교육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김태흠 의원** 이 두 가지는 역사 기록의 과정에서 양 수레바퀴와 같은 필수조건입니다. 이 부분에 총리님 동의를 하시지요?

○**국무총리 황교안** 그렇습니다.

○**김태흠 의원** 그리고 이번에 역사 교과서 국정화 결정은 국회에서 법으로 뒷받침되고 하는 문제가 아니라 행정예고 사항이지요, 그렇지요?

○**국무총리 황교안** 그렇습니다. 교육부의 행정고시 사항입니다.

○**김태흠 의원** 그런데 야당이 예산안 처리라든가 산적한 현안들과 연계해서 반대를 하겠다는 그런 입장 표명도 하고 그러는데 이는 역사 기록을 논하기 전에 후세의 역사에 오점을 남기는 일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총리님 동의하십니까?

○**국무총리 황교안** 예, 국정이 법대로 그렇게 진행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김태흠 의원** 총리님, 국정 역사 교과서를 만들기로 한 만큼 국민이 납득할 만한 집필진으로 구성을 하시고 또 역사적 사실에 따라 균형감 있는 교과서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국무총리 황교안** 지금까지의 역사 교과서들은 소수의 집필진에 의해서 만들어졌습니다. 이번에 만들려고 그러는 올바른 교과서는 다수의 전문성이 검증된 전문가들로 집필진을 구성을 해서 여러 차례에 걸친 검증 과정을 거쳐서, 물론 현장의 이야기도 듣고 전문가의 이야기도 듣고 국민들의 이야기도 듣고 여러 단계의 검증 과정을 거쳐서 또 최종적으로는 웹으로 띄워서 국민들의 의견을 낼 수 있도록 웹 전시도 하고 이런 소통의 절차를 거친 뒤에 정말 국민들이 '균형 있게

잘 만들어졌다’, ‘사실에 근거한 바른 교과서다’라는 평가가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겠습니다.

○**김태흠 의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리님, 또 하나 이 역사 교과서 못지않게 심각한 문제는 일부 대안학교에서 정치·이념적으로 편향된 교육으로 잘못된 가치관을 어린아이들한테 심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전국에 대안교육 시설이 얼마나 되고 있는지 아십니까?

○**국무총리 황교안** 230여 개 정도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태흠 의원** 230여 개, 미인가가 많아서 약 300여 개라고 합니다. 이 300여 개 중에서 50여 개 정도만 교육부에서 지금 인가를 받았고 나머지는 미인가 시설인데 그 미인가 시설 중에서 40여 개 학교가 이념적으로 편향된 교육을 하고 있다는 내용 알고 계십니까?

○**국무총리 황교안** 그런 걱정의 말씀들을 하는 것을 들은 일이 있습니다.

○**김태흠 의원** 심지어 전남 강진의 늦봄문익환 학교는 현장학습을 명목으로 해 가지고 학생들을 광우병 촛불집회 등에 동원했고 광주 지혜학교 같은 경우도 국정원 선거개입 규탄 시국선언 행렬에 학생들을 참여시켜서 물의를 빚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대안학교들 중에서 친북좌파사관 학교들이 많이 있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그 얘기가 들어 보셨습니까?

○**국무총리 황교안** 그런 여러 가지 걱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교육부에서 현장조사를 진행을 하면서 그런 잘못된 부분들에 대해서는 바로잡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태흠 의원** 이쯤 되는 그런 상황이라면 정부가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고 재정 지원 등을 끊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지금 정부가 대안학교에 연간 지원하는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총리님?

○**국무총리 황교안** 그 금액을 제가 집계는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지금 정부에서 재정 지원을 하는 대안학교는 모든 미인가 대안학교에 다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탈북 또는 부적응 학생 등 학업 중단에 특별한 사유가 있는 이런 대안학교에 대해서 제한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태흠 의원** 이런 부분들을 제대로 점검을 해 보시고 지원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한번 챙겨 봐 주시기 바랍니다.

미인가 대안학교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만들어서 인가를 받도록 하고 정상적인 교육이 진행되도록 정부에서는 관리 감독을 해야 될 그런 책임이 있는데 이 부분이 본 의원이 볼 때는 너무나 미흡하다 해서 지금 이 부분을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다시 한 번 총리님께서 각별히 챙겨 봐 주시기 바랍니다.

○**국무총리 황교안** 예,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수조사를 하고 있는데 가급적 신속하게 그런 절차들이 마무리돼서 가급적이면 금년 말까지 그런 제도권 편입과 또 불법 운영 개선 등의 제도 준비를 위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됩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지난주 꺾림이 19대 국회에 대해 평가하는 여론조사를 한 결과 국민 82%가 잘못했다고 답했다고 합니다. 19대 국회가 수고는 했으나 공이 없는 노이무공의 평가를 받을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서 마지막 정기국회가 남아 있습니다. 이번 정기국회에서 4대 개혁 입법에 적극 나서 19대 국회가 대한민국을 바꿨다는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다 함께 노력할 것을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들께 호소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 정갑윤** 김태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북 익산갑 출신의 새정치민주연합 이춘석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춘석 의원** 전북 익산갑 출신의 새정치민주연합 이춘석 의원입니다.

총리 좀 나와 주시지요.

좀 전에 존경하는 이윤석 의원님 질의 중에 제가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두 부분이 있습니다. 5·16이 혁명이나 쿠데타냐 이 부분은 차후에 물어보기로 하고요, 국정 교과서 부분에 대해서 하나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과서를 들어 보이며)

이 책이 사회과 5학년 2학기 교과서입니다. 이게 내년부터 학교에서 가르칠 교과서거든요. 지

금 실습용으로 쓰이고 있고 내년부터 쓰는데요. 이게 국정 교과서입니다. 지금까지의 검정 교과서가 여러 문제점이 있다 해서 지금 국정 교과서로 채택을 했는데 그중에 제가 한 세 가지만 묻겠습니다.

이게 국정 교과서인데 여기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일본은 군대를 늘려서……’, 의병활동을 어떻게 했느냐 하면 ‘의병들을 소탕하고자 했다’, 일반적으로 다른 교과서들은 ‘학살’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의병들이 학살당했다’라는 표현을 쓰는데 여기는 ‘소탕당했다’는 표현을 쓰고요. 그다음 장 95페이지를 보면 ‘이토 히로부미가 을사조약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다음 장인 96페이지를 보면 ‘일본은……’,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쌀을 수탈해 갔다’라는 표현을 쓰는데 ‘쌀을 수출해 갔다’ 이렇게 표현을 씁니다.

이런 내용, 총리님이 생각하시기에 잘못된 내용입니까?

○국무총리 황교안 지금 그게 어느 교과서를 말씀하시는지 정확하게……

○이춘석 의원 이게 내년부터 우리 초등학교 5학년이 사용할 국정 교과서입니다.

○국무총리 황교안 초등학교?

○이춘석 의원 예, 이런 내용 잘못된 내용입니까, 잘못된 내용입니까?

○국무총리 황교안 그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있다고 그러면 그런 부분도 고쳐가야 된다는 것이 정부의 방침입니다, 입장입니다.

○이춘석 의원 그래서 지금 총리님께서 얘기하시는, 여당께서 주장하시는 국정 교과서를 채택해야겠다고 하면 내년부터 채택하기로 한 초등학교의 이러한 잘못된 표현들 먼저 고치시고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무총리 황교안 같이 병행을……

○이춘석 의원 그러면 이 부분, 내년 초등학교에 사용하는 책 수정하시겠습니까?

○국무총리 황교안 그런 부분은 교육부로 하여금 검토를 해서 필요한 조치들을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춘석 의원 그 필요한 조치가 수정하겠다는 뜻으로 받아들이면 되겠습니까?

○국무총리 황교안 잘못된 부분들은 고칠 것입니다.

○이춘석 의원 그럼 아까 그 부분은 잘못된 겁니까, 잘된 겁니까?

○국무총리 황교안 제가 앞뒤 문맥을 다 못 봤습니다마는 지금 의원님 말씀 취지에 비춰 보면 그 부분은 보완이 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춘석 의원 그 내용 잘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총리, 뉴라이트가 뭔지 아시지요?

○국무총리 황교안 예, 알고 있습니다.

○이춘석 의원 뭘 뜻입니까?

○국무총리 황교안 말씀한 것처럼 라이트, 우파 운동을 새롭게 시작하겠다 이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춘석 의원 국민들은 대개 뉴라이트를 극우파나 친일로 이해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극좌만큼 극우도 위험하다는 생각에는 동의하시지요, 총리?

○국무총리 황교안 어느 것이든 한쪽으로 극히 치우쳐 있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그 부분은 아마 정통성을 바로 지키는 그런 노력으로 좀 보완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춘석 의원 화면 좀 보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저기 지금 화면에 뜨고 있는 게 우리나라 정부 요직을 차지하고 있는 뉴라이트 인사들 명단입니다. 지금 안중범 청와대 경제수석은 뉴라이트 싱크넷의 발기인이었습니다.

총리,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상생하는 경제민주화를 이루겠다’ 이게 박근혜 대통령의 10대 공약 중 하나지요?

○국무총리 황교안 그렇습니다.

○이춘석 의원 그런데 분배와 균형을 추구하면 안 된다 하는 게 뉴라이트의 창립 발기문에 나오는데 이런 사람을 경제수석으로 앉혀 놓고 경제민주화 정책을 하겠다는 것 납득이 됩니까?

○국무총리 황교안 어떤 단체가 단체로서 어떤 정치적인 성향을 갖고 있는가, 견해를 갖고 있는가 하는 문제와 그 소속원들이 구체적으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가 또 사인일 때와 공인일 때의 생각은 좀 보정될 필요가 있다, 조금 더 자유로운 부분에서 조금 더 제한적인 그런 내용으로 보정이 되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춘석 의원 알겠습니다.

통일부장관도 뉴라이트 싱크넷의 발기인입니다

다. 대통령께서 통일은 대박이라고 외칠 때는 언제시고 민족 공조를 비판하는 뉴라이트 인사를 통일부장관으로 앉히면 남북관계를 원만히 이끌어 나갈 수 있겠습니까?

○국무총리 황교안 지금 정부가 함께 잘 살아갈 수 있는 남북관계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이춘석 의원 엄연히 사상의 자유가 있으니까 저 개인적으로는 뉴라이트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분들을 정부 요직에 임명한다는 것은 뉴라이트 사상을 정책적으로 추진하겠다는 하는 의사의 표현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무총리 황교안 어느 집단의, 어느 단체의 생각이나 사상을 정부가 그대로 집행하는 것은 아닙니다. 내 주장들, 물론 그것은 뉴라이트의 주장일 수도 있고 또는 다른 여러 단체들의 주장들일 수도 있지만 그런 부분들, 총리실에도 사회단체들의 대표들과 함께 모임을 합시다라는 그런 많은 이야기들을 잘 수렴을 해서 헌법 가치에 맞고 또 우리 국민들이 공감하는 국가 정책을 집행해 나가게 될 것입니다. 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춘석 의원 뉴라이트가 장악한 것은 정부 요직뿐만 아니라 방송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고영주 방문진 이사장의 공산주의 발언 때문에 전국이 시끄러운 것 알고 계시지요?

○국무총리 황교안 예, 많은 논란이 있습니다.

○이춘석 의원 몇 가지 논란을 보면 ‘부림 사건은 공산주의 운동이었다’, 이것 거짓이지요?

○국무총리 황교안 그 부분에 관해서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것은 적절치는 않습니다라는 대법원에서는 지금 그 부분에 무죄를 선고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춘석 의원 우리 법원은 33년 뒤에 재심을 했고 결국 무죄를 선언했습니다. 용공 조작되었다고 밝혔습니다.

고영주 이사장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사법부나 검찰에는 김일성 장학생이 있다’. 그런데 그다음 날 대법원 국정감사장에서 이것을 질의해 보니까 사법부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법부 내에 김일성 장학생은 절대 없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변형된 공산주의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렇다고 하면 당시 노무현 대통령을 찍었던 우리 국민의 과반수 역시 공산주의자

다 하는 논리가 일치되는데, 사람도 많고 많은데 이런 사람을 꼭 방문진 이사장에 앉혀야 합니까?

○국무총리 황교안 그것은 임명을 한 절차와 과정이 다르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이춘석 의원 제가 세 가지 예를 들었는데 이 세 가지 예를 든 경우에도 비취 보면 과거를 왜곡하고 사법부와 국가 체계를 모욕하고 국민에게 모멸감을 줬는데도 이런 사람 총리가 임명권자가 아니니까, 대통령께서 임명하고 다른 절차로 임명했으니까 아무 문제가 없다 이렇게 말씀할 수 있으십니까?

○국무총리 황교안 아무 문제가 없다, 있다 이런 판단의 문제가 아니고 그 부분은 절차가 있기 때문에 절차에 합당한 의견을 말씀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이춘석 의원 왜 이 정부는 유독 이런 분들만 좋아하는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이런 분이 방문진에만 계시는 것이 아닙니다.

다음 장면 보여 주십시오.

5·16은 민주주의의 보루를 형성했다, 백범 김구 선생은 대한민국 체제를 반대했다, 검정체제는 문제가 많아 국정체가 바람직하다…… 급기야 ‘나는 독립유공자의 후손입니다’라는 다큐멘터리 프로그램을 중단시킨 사람, 이분들이 누구인지 아십니까?

○국무총리 황교안 그런 부분은 좀 알아봐야 되겠습니다.

○이춘석 의원 아까, 저기 화면에 다 떴었는데요, 이게 우리나라 주요 방송사들을 장악하고 있는 기관장들입니다. 방송통신심의위원장, KBS 이사장, EBS 이사장, EBS 사장 이런 사람들입니다. 꼭 이런 사람들만 이 방송계에 앉히는 이유가 뭐니까?

○국무총리 황교안 어떤 특정 지역의 특정 분들을 따로 앉히고 있는 그런 것 아닙니다. 우리 많은 공직·준공직이 있는데 그 가운데는 여러 가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 분들도 있을 것이고 이런 부분들을 다 통합해 가면서 그렇게 국정을 운영해 가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춘석 의원 이 중에 제가 한 가지만 지적하겠습니다.

특히 EBS 서남수 이사장은 교육부장관 당시에 세월호 참사 때 진도체육관에 갔다가 라면 먹다 걸려서 국민들이 ‘저것 뭐 하는 놈이냐?’ 이렇게

해서 바로 쫓겨났어요. 그런데 이 사람을 EBS 이사장에 앉혔습니다. 당시에 라면 먹은 일이 별거 아닌데 경질시켜서 미안하다, 그래서 EBS 이사장 시킨 겁니까?

○**국무총리 황교안** 그렇게 단편적으로 말씀하실 일은 아니고요. 현장에서 그 당시에 교육부장관이 많은 노력을 하고 있었는데 좀 오해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EBS 사장으로 임명된 경위에 대해서는 제가 알지 못하겠습니다마는 일단 공직으로 임명된 뒤에는 바로 잘 집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춘석 의원** 그게 아니면 그 양반은 교육부장관 당시에 교학사 검정 심의를 밀어붙인 공로 때문에 그 자리에 앉은 겁니까?

이 정도 제가 얘기해도 동의가 안 되시지요? 그러면 다음 화면 또다시 한번 보십시오.

이게 우리나라 주요 방송국의 임원들의 입에서 나오는 얘기입니다. ‘동성애자와 좌파의 연결고리는 노무현이다’, 당시 제1야당의 대변인에게는 ‘미친 여성’이다라는 발언도 했습니다. 저게 도대체 말입니까, 막걸리입니까? 저런 일 일반 사인도 못 하는 얘기인데 이렇게 중요한 직책을 차지하는 사람이 저렇게 이야기해도 되는 겁니까?

○**국무총리 황교안** 공직자는 언행에 신중해야 된다는 기본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춘석 의원** 다음 발언 보시지요.

첫 번째 발언을 봐 주십시오. ‘영당이가 썩었다고 했으면 나는 좋았을 것 같다’, 이게 다 사석에 있었던 자리가 아니라 방송심의를 하는 회의 중에 나온 발언이라는 사실 믿어지십니까?

○**국무총리 황교안** 글썄, 그 내용들은 제가 들어 보지 못했습니다.

○**이춘석 의원** 이 발언을 한 합귀용 위원은 이외에도 ‘참여연대를 이적단체로 규정해야 한다’, ‘민주화운동 관련자에 대한 보상 자체가 위법하다’ 하는 주장까지 있습니다.

이 합귀용 위원, 조영기 위원, 박효종 위원장 다 청와대에서 위촉한 사람들입니다. 한결같이 청와대가 위촉한 3명이 다 극우이거나 아니면 다 뉴라이트 인사입니다.

위촉할 때 과거의 행적들, 과거의 발언들 검증 거치는 것 아닙니까?

○**국무총리 황교안** 지금 공직에는 정말 많은 수 천 명의 공직자들이 일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들

에 대해서 어떤 특정 자리에 임명되기 전에는 필요한 부분들을 검증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많은 분들이 많은 영역에서 일을 하기 때문에 어느 한 부분을 특정해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제가 답변드리기는 좀 어렵습니다.

○**이춘석 의원** 박근혜정부의 편협한 인사가 어떤 결과를 초래하는지는 다음 사례가 더 극명하게 나타납니다.

총리, 민주화운동기념사업비 설립 취지가 무엇입니까?

○**국무총리 황교안** 말 그대로 민주화운동을 기리고 또 그 취지를 우리 국민들이 함께 공유하도록 하기 위해서 만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춘석 의원** 정답 말씀하셨습니다.

다음 장면 봐 주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저 말이 제가 방금 얘기한 민주화운동기념회장이 말씀하십니다. 박상중 이사장의 인터뷰 내용입니다.

이런 사고를 가지신 분이 민주화운동 기념하고 계승할 수 있겠습니까?

○**국무총리 황교안** 지금 제가 그 말씀의 앞뒤 배경이나 취지를 모르기 때문에 지금 말씀을 바로 드리는 것은 어렵습니다.

○**이춘석 의원** 아니, 민주화운동을 기념하고 계승할 수 있는 사람인데 ‘민주화 투쟁 다 썩었다. 제발 민주화 투쟁이라고 생색내지 마라’ 이렇게 하시는 분, 이분은 박근혜 대통령을 공개 지지한 것에 대한 선거 시에 보상 차원에서 이렇게 임명한 것입니까?

○**국무총리 황교안** 이 정부의 공직 임명이 그런 기준으로 되고 있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춘석 의원** 민주화운동기념사업비를 없애 버리는 것은 독재이고 저런 말도 안 되는 사람들 이사장에 앉히는 것은, 그래서 무력화시키는 것은 독재 아닙니까?

○**국무총리 황교안** 독재라고 하는 개념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신중하게 잘 해서 국민들에게 불편을 드리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춘석 의원** 그러면 다음 사례 한번 봅시다.

세월호특별조사위원회 내용입니다.

세월호 유족들은 이미 정부 보상금을 받았으니 진상규명 요구를 그만하라라고 주장하신 분, 이게 특조위 부위원장 이현 변호사의 말입니다. 이

사람은 뉴라이트 변호사모임의 대표입니다.

이런 사람을 부위원장에 보란 듯이 임명한 것은 특조위의 진상규명 대놓고 막겠다 하는 것과 뭐가 다르니까, 총리?

○**국무총리 황교안** 기본적으로 특조위의 조사활동이 원활하게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고 하는 것이 정부의 기본 입장입니다.

○**이춘석 의원** 정부의 기본 입장이 그런데 이게 304명 희생자들의 유가족들에 대한 반성은 못 할 망정 정부가 할 일입니까? 이런 인사 임명하는 게 맞습니까?

○**국무총리 황교안** 지금 특조위에서 임명된 절차는 아마 제가 알기로는 정부에서 임명한 것이 아니고 다른 절차로 임명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무튼 공직·준공직에 임명돼 있는 분들은 언행을 좀 조심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춘석 의원** 뉴라이트의 정권 장악은 마침내 우리 아이들의 교과서를 정복하는 데까지 저는 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1974년 박정희 정권 때 도입했던 국정제를 40년이 지난 지금 다시 도입하겠다는 겁니다.

박근혜 대통령께서 국사 과목은 국정 교과서가 필요하다고 하면서 뭐라고 하셨는지 기억하십니까?

○**국무총리 황교안** 학생들에게 바른 교육이 필요하다 이런 취지로 말씀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춘석 의원** 균형 잡힌 역사 인식을 가르치기 위한 것이라라고 박근혜 대통령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다음 화면 봐 주시지요.

‘민주당은 교과서 유언비어 유포자들이다’ ‘교학사의 뉴라이트 교과서는 우리 역사를 따뜻한 시선으로 보고 있다’ 이 발언들은 소위 우리나라의 3대 역사기관인, 앞으로 국정 교과서를 만들어야 할 기관인 동북아역사재단, 국사편찬위원회, 한국학중앙연구원의 현직 장들이 한 말들입니다. 이것이 지금 박근혜정부가 말하는 균형 잡힌 역사 인식이십니까?

○**국무총리 황교안** 그런 개별적인 발언 내용을 가지고 제가 그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거듭 말씀드렸다시피 기본적으로 이번 작업은 객관적인 사실에 근거해서, 역사적 사실에 근거해서 균형 잡힌 역사 교과서의 내용을 만들어서 어린 학

생들에게 교육하자, 과거에 잘못된 그런 국정 교과서가 있었다고 한다면 그 부분도 이번에 고쳐서 바른 교과서를 만들자, 이것이 지금 정부의 방침입니다.

○**이춘석 의원** 저도 총리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에 관여된 사람들의 역사 인식이 전부 다 친일 비호하고 독재 감싸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지금 다.

김정배 국사편찬위원장이 1982년에 전두환 정권에서 발행한 국정 교과서 연구진이었던 사실을 아십니까? 연구진이었습니다.

○**국무총리 황교안** 연구 지원을 했다고요?

○**이춘석 의원** 연구진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국무총리 황교안** 연구진, 그런 내용은 제가 모르고 있습니다.

○**이춘석 의원** 그 당시에 지금 김정배 국사편찬위원장이 만든 교과서의 한 대목을 제가 보여 드리겠습니다.

저것 한번 보시지요. 제5공화국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정의사회를 구현하기 위한 모든 비능률, 모순, 비리를 척결하며 국민의 진정한 행복을 위해 민주복지국가 건설을 지향하고 있는 만큼 우리나라의 장래는 밝게 빛날 것이다’ 이렇게 쓰셨습니다. 그런데 제5공화국이 정말 그렇게 됐습니까?

○**국무총리 황교안** 지금 어느 한쪽 부분을 부각해서 그렇게 평가할 일이 아니고 총체적으로 앞으로의 교과서는 균형 잡힌 그런 교과서를 만들어 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춘석 의원** 이런 여러 사례를 들었지만 우리 아이들에게 이렇게 편협된 역사를 가르치려고 이렇게 수많은 기관들이 반대하는데도 불구하고 국정 교과서 만들겠다는 것 아닙니까?

○**국무총리 황교안** 편협된 시각이 아니고 균형 잡힌, 바른 역사에 근거한 교과서를 만들겠다는 것이 방침입니다.

○**이춘석 의원** 제가 이명박 정부 때, 박근혜 정부 때 인사청문회를 30번 이상 했는데요, 박근혜 정부 들어서 인사청문회 때 새롭게 생긴 관행이 하나 있습니다. 모든 후보자에게 5·16이 쿠데타냐, 혁명이냐는 질문을 하는 겁니다.

좀 전에 이윤석 의원이 물어볼 때 그 부분 답변을 안 하시던데 총리는 법무부장관 청문회 때 당시 뭐라고 답변하셨습니까, 5·16이 쿠데타냐, 혁명이냐 하는 얘기에 대해서?

○**국무총리 황교안** 그 부분에 관해서 다양한 의견이 있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또 그 당시에 많은 이야기들을 요구하셔서 제가 교과서에는 5·16이 군사정변으로 기록돼 있다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춘석 의원** 그것은 제가 나중에 추가로 물어볼 때 나왔고요. 이렇게 궁극적으로 답변했어요. ‘역사적·정치적으로 다양한 평가가 진행 중이므로 법무부장관후보자 신분에서 개인적인 의견을 밝히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라고 하셨지요?

○**국무총리 황교안** 지금 그런 과정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이춘석 의원** 지금 다양한 평가가 진행 중이라서 총리님도 답변 못 하는 내용을 한 가지로 통일해서 지금 아이들에게 가르치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5·16 어떻게 가르치겠습니까?

○**국무총리 황교안** 특정 부분에 관해서는 균형 잡힌, 경륜을 가진, 전문성을 갖춘 이런 집필진이 많은 의견들을 모아서 그렇게 국민이 공감하는 방향으로 교과서 내용을 집필할 걸로 생각합니다.

○**이춘석 의원** 지금 로드맵을 보면 1년 만에 국정 교과서 만들어서 2017년부터 시행한다고 하고 계시지요?

○**국무총리 황교안** 예, 지금 시기적으로 그와 같습니다.

○**이춘석 의원** 갑자기 1년 만에, 이렇게 다양한 평가들이 많은데 하나의 교과서로 만들어 낼 수 있겠습니까?

○**국무총리 황교안** 그동안 많은 경험이 있었고……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는 기존의 교과서들이 하나 만드는 데 대개 4개월 또는 7개월 정도가 걸렸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이 새로 만드는 올바른 역사 교과서라고 하는 것은 많은 집필진들을 위촉해서 그분들이 다양한 의견들을 수렴해서 균형 있는 역사 교과서를 만들겠다는 방침을 가지고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시간적으로는 큰 문제가 없다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춘석 의원** 총리님, 지금 총리님께서 1년 내에 다양한 사람들을 참여시켜서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겠다는 말씀을 하시지만 진보 쪽이라든가 중립적인 시각을 가진 사람들은 이 국정화 안 된다고 다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

그 집필진에 안 들어가실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 보수정권에 동의하는 극우 역사학자들만 가서 그 역사 교과서 만들 텐데 그 역사 교과서가 올바른 역사 인식을 가진 그런 역사 교과서로 만들어질 수 있겠습니까?

○**국무총리 황교안** 균형 있는 집필진을 만들겠다 하는 기본방침을 말씀드렸고, 앞으로 진행과정은 같이 고민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춘석 의원** 그러면 균형 있는 집필진을 못 만들면 국정 교과서 안 가겠습니까?

○**국무총리 황교안** 우리나라의 지금 수준이나 역량이 그것을 할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춘석 의원** 지난 92년에 국정 교과서 제도에 대해 헌법소원이 있었던 것 알고 계시지요?

○**국무총리 황교안** 몇 년도예요?

○**이춘석 의원** 92년도에.

○**국무총리 황교안** 예.

○**이춘석 의원** 그때 국어 교과서에 대해서는 합헌이라고 했으면서도 국사 교과서에 대해서는 국정화가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명시한 사실 알고 계시지요?

○**국무총리 황교안** 어느 한 부분을 단정적으로 얘기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현실에 비추어서 이런저런 점이 고려가 가능하다 그런 판결이었던 것으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춘석 의원** 총리, 지금 고시 이후에 의견수렴 절차가 남아 있지요?

○**국무총리 황교안** 그렇습니다.

○**이춘석 의원** 이 의견수렴 절차 그냥 형식적으로 하는 겁니까, 제대로 하는 겁니까?

○**국무총리 황교안** 물론 제대로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춘석 의원** 제대로 할 겁니까?

이 행정절차법에 보면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를 존중하여 처리하여야 한다’로 돼 있는 것 알고 계시지요?

○**국무총리 황교안** 예.

○**이춘석 의원** 그러면 만일 이 국정 교과서에 대해서 반대하는 의견들이 합리적이라고 판단된다고 하면 그 의견 수렴할 생각 있으십니까?

○**국무총리 황교안** 말씀드렸다시피 국편에서 지금 균형 있는 그런 집필진들을 구성을 해서 그분들이 충실하게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각계의 의견을 모아서 좋은 교과서, 올바른 교과서를 만

듣기 위한 노력을 할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춘석 의원** 국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신다는 약속, 하셨습니다. 이것 반드시 지키시기 바랍니다.

들어가십시오.

황우여 부총리는 ‘새 교과서는 헌법정신인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와 객관적 사실에 입각해 서술될 것이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적어도 일국의 부총리가 헌법정신을 얘기하려면 현행 교과서의 내용을 왜곡하고 국민들에게 거짓된 내용을 설교해서는 안 됩니다. 교육부차관도 마찬가지입니다. 김재춘 교육부차관은 가장 채택률이 높은 교과서에는 북한 관련 기술에서는 ‘독재’라는 단어가 두 번, 남한 관련 기술에서는 스물네 번 언급됐다고 밝혔습니다. 차관이라는 분이 교과서를 놓고 독재라는 단어를 세고 앉아 있을 정도로 우리나라 교육 현실이 한가롭고 만만한지 되묻고 싶지 않을 수 없습니다. 참으로 소가 웃을 일이지만 동시에 이 발언은 이 정권이 우리 역사 교과서에서 독재라는 단어를 지우기 위해서 국정화를 강행한다는 분명한 자기 고백이기도 합니다.

헌법재판소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국사의 국정 교과서를 반대했습니다.

첫째, 국정제도보다는 검인정제도가, 검인정제도보다는 자유발행제가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할 수 있기 때문이다.

둘째, 국사의 경우 어떤 학설이 옳다고 확정할 수 없고 설득력 있는 다양한 견해를 소개하는 것이 바람직하기 때문이다라고 말합니다.

우리나라 헌법 제31조4항에서는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대한민국 헌법 제69조에 입각해 헌법을 준수할 것을 서약하고 취임하신 분입니다. 본 의원은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박근혜 대통령이 이 선서와 헌법을 반드시 지켜 줄 것을 엄중히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정갑윤** 이춘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북 고령·성주·칠곡 출신의 새누리당 이완영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완영 의원**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정갑윤 부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경북 칠곡·성주·고령 이완영 의원입니다.

오늘 19대 국회 마지막 대정부질의를 박근혜 정부의 성공과 대한민국의 부강한 미래 그리고 우리 19대 국회의 성공을 위해 매우 중요한 시간입니다. 그러나 저는 침통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국회가 바로 서야 합니다. 정부가 국민을 위해 일하려 해도 사사건건 발목을 잡고 법안 처리도 미루고 있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특히 제1 야당의 대표가 국회 안에서 대화와 타협을 버리고 외국인 관광객이 많이 찾고 있는 광화문 광장에서 피켓 시위를 하는 모습을 보면서 정치인의 한 사람으로서 부끄럽고 자괴감을 느낍니다.

민주화의 화신 본 의원이 존경하는 만델라 대통령은 ‘그 어떤 개인이나 분파, 단체도 국민의 공익보다 위에 있을 수는 없다’고 설교를 하셨습니다. 우리 국회의원 모두 깊이 새겨야 할 것입니다.

국정 교과서에 담은 내용도 보기 전에 친일 교과서라고 호도하는 것을 보면 국민을 무시하는 것 아닙니까? 그들이야말로 국론 분열의 주동자 아닙니까? 야당은 자중하십시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지금 야당은 ‘좋은 대통령은 역사를 만들고 나쁜 대통령은 역사책을 바꾼다’는 피켓을 걸고 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 때 역사책 바꾸지 않았습니까? 야당에게 묻습니다. 노무현 대통령께서 나쁜 대통령입니까?

국민 여러분!

합법적인 절차를 거쳐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교육부장관에 대해 야당은 해임건의안을 제출했습니다. 이런 일로 장관을 해임한다면 어느 누가, 공직자가 일을 하겠습니까? 헌정사상 참 보기 드문 일입니다. 웃음거리가 아닐 수 없습니다.

여러분, 국민 여러분들이 심판해 주십시오.

총리님 나오시지요.

문재인 대표는 ‘박근혜 대통령은 당적을 정리해 달라. 지금 대통령은 민주주의와 경제를 파탄 내면서 실패한 전임 대통령의 전철을 밟고 있다’, 막말했습니다. 정치적 코미디 아닙니까?

지금 제가 문재인 대표보고 야당대표를 그만두고 탈당하라면 코미디입니까?

○**국무총리 황교안** 대통령께서는 경제를 살리고 민생 안정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완영 의원** 대통령의 당적은 책임정치를 위해 당연히 갖고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총리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국무총리 황교안** 여러 가능성이 있겠지만 가장 정상적인 것이 좋은 것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완영 의원** 늘 야당의 탈당·분당, 그 중심에는 문재인 대표가 있었습니다. 2002년 민주당에서 열린우리당, 대통합민주신당, 민주통합당, 새정치민주연합을 창당하고, 금년도 재보선에 이르기까지 늘 탈당·분당 사태를 맞고 있는 중심에 있었습니다.

제가 문재인 대표의 아들은 요즘 젊은이들 표현을 빌리면 금수저를 물고 태어난 것 아닌가 하는 지적을 해 보겠습니다.

문 대표가 노무현 대통령 청와대 근무 시절…… 한국고용정보원에 일반직 5급으로 특채됐습니다. 내용을 제가 알아보니까 채용 공고도 매우 기술적으로 오프더레코드했을 뿐만 아니라 채용 기간은 단 6일이었습니다. 응시했던 사람이 단 이 사람 한 사람뿐입니다. 100만 명이 넘는 청년 실업자가…… 어떻게 원서를 한 사람만 냈겠습니까?

채용되고 나서 이 문재인님의 아들은 동아방송예술대학교 교수님, 한동준 교수입니다. 프로그램을 제대로 된 것을 한 번도 만들어 본 적이 없는 사람이 제작을 한 것이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총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채용 과정에 대해서 한번 감사해 본 적 있습니까?

○**국무총리 황교안** 감사를 해 보지는 않았습시다마는 지금 그 자세한 내용은 제가 파악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필요하면 좀 알아보겠습니다.

○**이완영 의원** 감사를 좀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또 제가 한 가지 더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2008년 문재인 대표는 양산시의 매곡동 별장을 불법인 줄 알면서 매입을 하게 됩니다.

(패널을 들어 보이며)

양산시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합니다.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건축사무소에서 이것은 불법이니 까 합법적으로 만들자라고 제안하는데 문재인 대표께서는 “이행강제금이 너무 많이 든다. 나는 앞으로 정치할 생각이 전혀 없다. (불법 상태) 그

대로 두라.” 이렇게 지시를 한 사실이 있습니다.

지금도 양산 자택은 아직도 사랑채의 처마가 하천 경계를 침범하는 불법 상태입니다. 자, 현재도 이렇게 불법 상태인데 양산시청에서는 철거 공문을 보냈지만 행정심판을 제기하고, 행정심판이 기각되자 소송까지…… 그것도 범무법인 부산입니다.

저는 이 사실을 보면서 ‘참 힘 있는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인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대한민국 공권력에 압력을 행사하고 법률을 무시한 처사다. 아직도 불법입니다. 이것을 법원에서도 합법화해 준 게 아니라 철거하는 그 비용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이대로 두는 겁니다.

총리님, 제 얘기 듣고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국무총리 황교안** 제가 확인하지 못한 내용을 가지고 의견을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이완영 의원** 또 범무법인 부산이라고 들어 보셨습니까?

○**국무총리 황교안** 범무법인 부산, 부산에 있는 범무법인입니다.

○**이완영 의원** 지난 총선 이전까지 문재인 대표가 대표변호사를 역임했습니다. 2005년 41억 원, 2002년에 비하면 3배 가까이 증가했습니다. 공교롭게도 이때 청와대 수석을 역임했습니다.

제가 이 사실을 보면 전관예우도 아니고 현관예우의 첫 사례를 저는 보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 범무법인 부산은 급속도로 성장을 합니다. 한편 ‘부산’은 특보 시절에 대한주택공사, SK, 포스코건설, 부산도시가스, 신문에 났습니다, 법률신문에. 막강한 기업들로부터 고문을 체결하게 됩니다. 저는 문재인 대표는 고문 당시 고문료를 얼마나 받았는지 스스로 밝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총리님, 고문 계약에 특정 권력의 압력이 있었다고 어떻게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국무총리 황교안** 사실관계가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는 의견을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이완영 의원** 그 와중에 부산저축은행의 부실 아시지요?

총리님, 처음 들습니까?

○**국무총리 황교안** 부산저축은행이 부실로 문제가 많이 있었던 저축은행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완영 의원** 피해 본 서민이 약 3만여 명이고 피해액만 해도 약 3000억 원 됩니다.

당시의 민정수석인 문재인 대표는 금감원 국장

에게 전화를 합니다, 부산저축은행을 신중하게 처리해 달라고. 아무리 간이 큰 사람이라도 위축될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저는 2003년 문 대표의 청탁전화가 서민의 피해를 더 키웠고 부산저축은행 피해자들의 눈물의 씨앗이 된 압력전화라고 봅니다.

총리님, 제 말씀 듣고 어떻습니까?

○**국무총리 황교안** 역시 사실관계가 확인되지 않은 내용이어서 의견을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이완영 의원** 대법원 판결도 야당 탄압이라고 하는 야당과 야당 대표가 있습니다. 한명숙 전 총리의 판결 이후 대법원 판례도 야당 탄압, 부당한 탄압 그리고 모금운동까지 벌이고 있다고 합니다.

야당의 대표가 법치주의의 근간을 흔든다고 생각하십니까?

○**국무총리 황교안** 지금 대한민국의 사법부는 법에 따라서 바르게 재판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완영 의원** 그리고 이 대법원 판결은 한명숙 전 총리의 정치적 보복이라고 보십니까?

○**국무총리 황교안** 말씀드린 것처럼 사법부가 바르게 재판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완영 의원** 김만복 전 국정원장 회고록 때문에 지금 시끄럽습니다.

총리님, 잘 아시지요?

○**국무총리 황교안** 그런 내용이 보도가 돼서 알고 있습니다.

○**이완영 의원** 그렇다면 국정원은 공무상 비밀 누설 혐의와 국정원직원법 위반 혐의로 김만복 전 원장을 고발했습니까?

○**국무총리 황교안** 제 기억으로는 고발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완영 의원** 그러면 당시에 노무현 대통령 때 남북 정상 간 핫라인 의사소통 구조가 있는 것으로 확인했습니까?

○**국무총리 황교안** 지금 검찰에서 제 기억으로는 수사 의뢰가 있어서 자료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완영 의원** 진행 결과를 보면서 허위사실유포죄도 포함될 수 있는 여지가 있겠지요?

○**국무총리 황교안** 검찰에서 필요한 부분들에 대한 수사를 진행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완영 의원** 알겠습니다.

통일부장관님!

어제 가우크 독일 대통령의 이 자리에서의 연설문을 듣고 저는 감명받은 게 많습니다.

독일의 경우도 서독의 이산가족이 동독 주민에게 많은 경제적 지원을 허용하고 받아들였습니다.

이번에 곧 이산가족 상봉이 있는데 잘사는 우리가 북한의 이산가족 주민에게 무한정 지원할 수 있는 남북 간의 합의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통일부장관 홍용표** 이산가족 문제는 인도적 차원이고 또 우리 분단의 가장 큰 상처이기 때문에 그 문제를 반드시 해결하고 보다 많은 이산가족들이 만나실 수 있도록 가능한 한 다양한 방법들을 검토하고 또 필요한 조치들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이완영 의원** 저는 2014년 11월 이 자리에서 총리님께 말씀드렸습니다.

이산 상봉으로 만나면 이제는 한 가족으로 살게끔 해 줄 대책도 당연히 필요하다라고 저는 역설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사항까지 전개할 용의가 있습니까?

○**통일부장관 홍용표** 우선은 북한이 굉장히 생사확인조차 소극적인 상황이기 때문에 전면적인 생사확인을 통해서 그런 것들을 북한한테 전달을 하고 또 상호 교환을 함으로써 생사확인이라는 절차부터 먼저 진행을 시키고, 그것을 기초로 상봉 정례화라든지 서신 교환 이런 것들을 진행해 나가면서 점차 보다 근본적인 해결방안을 찾아 나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완영 의원** 독일 대통령께서는 통일 독일의 결정적인 기여는 서독의 TV를 동독이 시청하게 된 것을 들었습니다.

앞으로 이런 TV 시청을 북한에 허용할 수 있는 조치, 대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통일부장관 홍용표** 동·서독 간의 그런 다양하고 전면적인 교류 협력이 통일 이후에 동·서독이 통합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지금 정부도 민간 교류를 포함해서 교류 협력의 범위를 넓혀 가기 위해서 차근차근 필요한 노력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완영 의원** 들어가십시오.

이웃 일본의 아베는 교과서 내용이 판례나 내각 결정에 어긋나서 안 된다고 합니다. 정부 방침에 어긋나는 내용도 담지 못하도록 검증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독도 문제도 더 강화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검정 교과서는 집필진 겹치기로 다양성을 잃어버렸습니다. 특정한 학교·인맥·파벌 위주로 끼리끼리 대표팀을 만들어서 책을 만들고 있습니다. 이게 제대로 나오겠습니까?

히딩크는 이런 파벌·인맥을 해체해서 월드컵 4강을 이뤄 냈습니다. 반드시 이번에 국정 교과서 표준화를 통해서 끼리끼리 대표를 없애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총리님, 나오십시오.

17년 만에 노사정 대타협이 우리 국민들에게 희망을 줬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무총리 황교안** 어려운 결단을 해 주신 노사정 대표들에게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있고 그 대타협의 정신이 이어져서 노동 개혁을 통해서 우리 청년 일자리들이 확충이 되고 또 근로자·노동자들의 어떤 차별이 개선되는 좋은 계기가 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이완영 의원** 저는 이번에 노동시장선진화특위의 간사를 맡았고 또 고용노동부에 25년 근무하면서 노사 간의 이해관계, 갈등이 해결을 몸소 체험을 많이 한 사람입니다. 과정의 고통과 진통은 결국 노사 간 합의, 성과로 결론이 나서 기업의 성장까지 도모를 하고 있는 동행의 노사가 우리나라에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번 노사정 대타협도 그런 맥락에서 DJ 정부 때 우리 노사정 대타협 이상으로 큰 의미가 있다고 보지요?

○**국무총리 황교안** 예, 중요한 타협이 이루어진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완영 의원** 그런데 야당은 매우 폄하를 하고 있습니다.

자, 질의드리겠습니다.

노사정 대타협 이렇게 실천하고 노동법이 개정되면 우리 정부가 보는 고용기대 효과는 얼마라고 보십니까?

○**국무총리 황교안** 그 부분에 관해서는 정부가 직접 그렇게 연구를 하지는 않았습시다라는 민간 연구 결과에 따르면 임금피크제 도입으로 해서 최소 통계를 8만 명 또 많게는 31만 명의 청년고용창출 효과가 있다 이런 보고가 있습니다.

○**이완영 의원** 그러니까 야당은 지금도 임금피크제를 도입할 수 있는 청년 일자리는 고작 8000개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재계의 노력은 야당의 주장과는 전혀 다르지요?

○**국무총리 황교안** 재계도 지금 청년 일자리 확보를 위해서 자기 살을 깎는 이런 노력을 하는 기업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들에게 약속한 일자리만 해도, 지금 제가 기억하기로는 14만 자리를 마련하겠다 이런 약속을 국민들에게 하고 있습니다.

○**이완영 의원** 지금 우리 여당이 발의한 노동법에 의하면, 기간제, 파견법에 대한 개정안을 보면서 야당은 비정규직을 양산할 거다라는 우려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정부 입장은 어떻습니까?

○**국무총리 황교안** 기간제 사용기간 제한을 전면적으로 완화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현재 검토하고 있는 것은 정규직 전환이 어려운 35세 이상된 이런 근로자들에게 조금 더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드리기 위한 것입니다. 이분들도 정규직으로 전환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실질적인 고용안정이 이뤄질 수 있게 하는 것이 정부의 목표입니다.

○**이완영 의원** 자, 우리 4대 개혁 대통령께서 진행하고 있는데 지금 제일 먼저 노동개혁이지요, 진행하고 있는 게?

○**국무총리 황교안** 다 중요합니다마는 노동 개혁 매우 중요합니다.

○**이완영 의원** 자, 그러면 노동시장 개혁 입법적 조치가 언제까지 마무리됐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까?

○**국무총리 황교안** 노사정의 타협 절차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진행을 합니다마는 정부의 바람은 지금 워낙 청년 일자리가 심각한 문제고 또 청년들이 힘들어 하니다가 급적이면 관련된 법안들이 빨리 통과가 돼서 청년 일자리 문제도 해소하고 또 근로자들의 안정성도 더 확보할 수 있는 노동개혁의 본지가 빨리 실현됐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완영 의원** 19대 국회에서 마무리돼야 되겠지요?

(정갑윤 부의장, 이석현 부의장과 사회교대)

○**국무총리 황교안** 예, 그렇게 되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많이 지원해 주시기 바

합니다.

○이완영 의원 대통령께서는 이번 노동법 개정 이후에는 정말 선진국 될 수 있는 그런 청사진을 갖고 계시지요?

○국무총리 황교안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마는 우리가 꼭 조만간 3만 불 시대를 넘어가고 고도선진화 국가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정부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완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정치권에서 허위사실 유포와 폭로식 정치, 아니면 말고 식의 정치로 그동안 정치권이 국민들로부터 외면당하고 불신당해 왔다는 것은 삼척동자도 다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저는 10년 아니, 5년 이내에 통일이 될 것이라 믿는 사람입니다. 찌든 가난을 이겨 낸 산업화의 선구자 박정희 대통령의 위업을 우리 후손은 절반의 광복을 넘어서 통일 대한민국을 이룩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통일은 대박이다'라고 말씀하신 박근혜 대통령이야말로 통일 대통령으로 길이 남도록 저는 앞장서겠습니다.

노동시장 개혁을 입법을 잘 마무리 짓고 우리가 9년간 담보 상태에 있는 국민소득 2만 불 시대를 넘어 3만 불 선진국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우리 야당의 협조, 우리 정치권의 개혁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봅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이석현 이완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북 남원·순창 출신의 새정치민주연합 강동원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동원 의원 전라북도 남원·순창 출신 강동원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좋은 대통령은 역사를 만들고 나쁜 대통령은 역사책을 만든다'고 방금 우리 당의 이윤석 의원이 말씀하셨습니다. 역사책을 바꾸려는 박근혜 대통령은 참으로 나쁜 대통령입니다. 조선왕조실록은 조선의 정통성을 입증하는 역사 교과서였습니다. 사초를 기록하는 사람은 법으로 보호했고 편찬된 실록은 왕이라 할지라도 단 한 자도 고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작금의 대한민국은 일본 천왕께 혈서로

충성맹세를 했던 친일파 아버지를 그의 딸이 조국 근대화의 영웅으로 왜곡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아베가 지금 덩실덩실 춤을 추고 있습니다. 이순신 장군은 난중일기를 통해서 역사를 바로 썼고 일제의 역사왜곡을 막았습니다.

저는 오늘 태어나지 말았어야 될 정권, 박근혜 정권의 태생 과정을 대한민국의 역사에 기록해서 후세에 남기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총리,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먼저 묻겠습니다.

박근혜정부의 정통성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국무총리 황교안 국민들의 선거를 통해서, 선거과정을 통해서 대통령으로 당선되었고 국민들에게 그 권원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강동원 의원 맞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선거를 통해서 선출된 대통령입니다.

그런데 선거부정, 개표조작에 의해서 당선되었다면 대통령의 정통성과 자격에 중대한 문제가 발생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무총리 황교안 지금 '면'이라고 하는 조건을 붙여서 말씀하시기 때문에 제가 답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부정선거에 의해서 이 정부가 출범했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강동원 의원 (영상자료를 보며)

영상을 먼저 보시겠습니다.

서울 광화문 동화면세점 앞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퇴진을 외칩니다. 이들은 지난 2013년 1월부터 2015년 10월 10일까지 총 92주째 계속해서 시위를 하고 있습니다. 저분들이 무슨 이유로 왜 박근혜 퇴진을 외치고 있는 걸까요?

총리, 이 사실을 보고받은 사실 있습니까?

○국무총리 황교안 그런 자세한 내용까지 제가 보고를 받지는 않았습시다마는……

○강동원 의원 아니 왜 이렇게……

말씀해 보세요.

○국무총리 황교안 이 정부에 대해서 다른 이야기를 하는 분들도 있고 또 이 정부가 성공하기를 기원하는 많은 국민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이 민주사회라고 생각합니다.

○강동원 의원 보고받은 사실이 있어요, 없어요?

○국무총리 황교안 지금 그 시위에 대해서는 제가 직접 보고받지는 않았습시다.

○강동원 의원 그러면 법무부장관 시절에도 이

사실을 몰랐습니까?

○국무총리 황교안 어디에서 지금 있었던 거예요?

○강동원 의원 법무부장관 시절에도 이 사실을 보고받지 못했느냐……

○국무총리 황교안 저게 어디에서 있었던 시위입니까? 다시 한 번 제가……

○강동원 의원 광화문 동화면세점 앞에서 92주째 하고 있습니다.

○국무총리 황교안 예, 그런 시위가 있다는 얘기를 들은 것 같기도 합니다.

○강동원 의원 그렇다면 2013년 1월 4일 국민 2000여 명이 대법원에 대통령선거무효소송을 제기한 사실이 있는데 알고 있습니까?

○국무총리 황교안 그런 소송도 있었습니다.

○강동원 의원 그러면 2013년 5월 9일 이명박·박근혜·김무성·원세훈·김용관·김능환·이종우·문상부·김하영 등 9명을 형법 제87조 내란죄, 동법 제91조 국헌 문란죄 등으로 형사고발했는데, 이 사실 알고 있습니까?

○국무총리 황교안 그 내용을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마는 고발된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고발이 적법하고 정확한 것이냐 그것은 결국 검찰과 법원의 수사와 재판에 의해서 나오는 것이니까 그 결과를 가지고 말씀을 하셔야지 고발이 되었다는 것만 가지고 말씀드리는 것은 적절치 않습니다.

○강동원 의원 말씀을 드릴게요.

대법원은 공직선거법상 180일 이내에 재판을 끝내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오늘이 1015일째, 2년 10개월이 지나도록 심리조차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이한 사실이 있어요. 백주 대낮에 서울의 한복판에서 마이크를 잡고 92주째 박근혜 퇴진을 외쳐도 청와대나 경찰이나 검찰에서는 일체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답하시겠습니까?

○국무총리 황교안 여러 집회가 있습니다마는 불법집회에 대해서는 경찰도 바로 수사에 나서고 있고 지금 말씀하신 그것에 대해서 만약 경찰이나 아무 조치를 하지 않고 있다 그러면 그것은 법에 위반된 부분이 없기 때문에 집회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강동원 의원 그렇습니다. 박근혜 퇴진이 정당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국무총리 황교안 그 내용이 아니라 그 절차에 관한 얘기입니다.

○강동원 의원 그렇다면 지금부터 왜 국민들이 박근혜 퇴진운동을 계속하고 있는지 그 이유를 밝혀 보겠습니다.

제18대 대선은 가장 악질적이고 조직적인 관권선거, 부정선거였습니다. 새누리당이 십자군 알바단을 운영해서 부정선거를 자행했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영상을 보세요.

십알단을 지휘한 윤정훈 목사는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징역 10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사실상 선거무효에 해당하는 중범죄를 범했습니다.

두 번째, 국정원·경찰청·국방부·사이버사령부·국가보훈처가 총동원된 총체적인 관권선거였습니다. 박정희 씨가 만든 중앙정보부의 후신 국가정보원이 그의 딸 박근혜를 당선시키기 위해서 조직적으로 선거에 개입했습니다. 이것은 민주주의를 송두리째 뽑아 버린 중대한 국가범죄였습니다.

1960년 3·15 부정선거, 4·19 혁명 과정에서 국민의 피로 쟁취했던 헌법적 가치, 즉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을 훼손한 것이었습니다. 역사는 이승만의 관권선거보다도 더욱더 악랄한 국기문란 사범으로 기록할 것입니다.

2012년 12월 19일 선거 당일 출구조사는 어떠했습니까? KBS·MBC·SBS의 합동 출구조사는 오후 3시까지도 문재인 후보가 2.2%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모든 출구조사에서 문재인 후보가 이겼습니다. 심지어 삼성에서도 문재인 후보가 이긴 것으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개표가 시작된 지 2시간 후인 밤 8시 45분에 KBS는 '박근혜 당선 유력'이라는 방송을 내보냈습니다. 이때의 전체 개표율은 24.4%였습니다. 서울의 개표율은 6.4%였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초저녁에 당선 유력이라는 방송이 나갈 수가 있습니까?

서울 유권자 839만 표 중 6.4%인 53만 표만 개표했을 뿐인데 적어도 개표 시작한 지 7시간 정도는 지나야 개표의 윤곽이 나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다음에는 세 번째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개표 조작 의혹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총리, 개표 조작이라는 말씀 들어 본 사실 있

습니까?

○국무총리 황교안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은 사실과 다른 부분이 많습니다. 그 말씀이 아무리 국회에서의 말씀이라 하더라도 사실에 근거해서 정확하게 말씀하셔야지, 이 방송을 젊은 사람도 보고……

○강동원 의원 내가 책임져요.

○국무총리 황교안 국민들도 보고 있습니다. 거기에 사실과 다른 말씀들을 하시는 부분은 조금 자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강동원 의원 보세요. 개표 조작은 있을 수도 없고 있어서도 안 되는 거예요.

○국무총리 황교안 있을 수도 없고 있지도 않았 습니다.

○강동원 의원 그런데 전국의 각 선거관에서 날 낚이 지금 밝혀지고 있어요.

지금부터 그 상황을 유형별로 밝혀 드리겠습니다.

(장내 소란)

잠자코 있어요!

(「말도 안 되는 얘기 하고 있어요!」 하는 의원 있음)

첫 번째 사례, 투표소에서 투표가 진행 중인데 개표됐습니다. 대구시 북구 침산2동 제1투표구입 니다. 개표 개시 시각이 16시 43분, 개표 종료 시 각이 16시 57분입니다.

투표는 오후 6시까지 투표합니다. 그런데 어떻 게 투표 시각에 개표를 할 수 있습니까?

또 경기도 이천시 증포동 제5투표구입니다. 17 시 35분에 개표를 해서 17시 43분에 개표를 끝냅 니다. 이천고등학교 체육관에서 투표가 진행 중 인데 그 시각에 이천 청소년문화회관에서 개표를 했다? 이것 귀신이 곡할 노릇입니다.

(장내 소란)

이거요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제공한 자료입니 다!

두 번째 사례입니다.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지!」 하는 의원 있음)

투표함이 투표소에 있는데 개표가 진행됐습니 다.

경북 안동시 강남동 제1투표구를 보십시오. 18 시 16분에 개표를 시작해서 18시 21분에 종료가 됩니다. 그리고 선거관리위원장은 개표 결과를 18시 38분에 공표를 합니다. 또 투표참관인은 18 시 30분까지 참관을 했다고 서명을 합니다.

결국은 투표함이 18시 30분까지 안동시 정하동 417번지 시민운동장에 설치된 투표소에 있었는데 어떻게 18시 16분에 개표를 할 수 있습니까?

다음 사례입니다.

투표함이 개표소로 이동 중에 개표됐습니다.

제주시 용담1동 제1투표구입니다. 18시 29분에 개표를 시작해서 18시 36분에 개표가 끝납니다. 그런데 투표관리관과 투표사무원은 18시 25분까 지 투표함이 투표소에 있다고 서명을 합니다.

자,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충남 계룡시 엄사면 제5투표구입니다. 18시 34 분에 개표를 시작해서 18시 41분에 개표가 끝납 니다. 18시 25분에 개표함이 개표소로 출발했는 데 어떻게 개표가 진행됐는지 알 수 없는 일입니 다.

(「책임져야 돼요, 그것 다!」 하는 의원 있음)

네 번째 사례입니다.

선거관리위원장이 개표 결과를 공표하기 전에 개표 방송이 나갔습니다.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신갈동 제8투표구에서는 선거관리위원장이 개표 결과를 발표하기 1시간 15분 전에 개표 방송이 나가 버렸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보십시오. 19시 31분에 개표 시작, 20시 51분에 개표 종료입니다. 선거관리위원장의 개표 결과 공표 시각은 21시 41분입니다. 그런데 용인시 선 관위는 언론사에 개표 결과를 20시 26분에 전송 합니다. 개표 결과를 공표하기 1시간 15분 전에 방송이 나갔습니다. 개표가 한참 진행 중인 시 각에 개표 방송이 나갔다는 말입니다.

다섯 번째 사례입니다.

개표 방송이 나간 후에 개표한 사례입니다.

영등포구 대림3동 제7투표구입니다.

23시 16분에 개표 시작을 해서 23시 31분에 개 표가 종료됩니다. 선거관리위원장은 투표 결과를 자정이 넘은 영시 16분에 공표합니다. 그런데 영 등포 선거관리위원회는 개표 결과를 22시 35분에 언론사로 전송을 합니다.

결론적으로 투표함을 열기 41분 전에 언론사에 개표 결과를 보냈습니다. 선거관리위원장이 개표 결과 발표 1시간 41분 전에 개표 방송이 나갔습 니다. 정말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에 대해서?

○국무총리 황교안 지금 말씀을 꼭 들었습니다

마는 의원님의 말씀은 박근혜 대통령을 대통령으로 찍어 준 많은 국민들의 투표 결과를 정말 명예 훼손하는 이런 잘못된 내용입니다.

○강동원 의원 이게 중앙선거관리위의 투표기록표예요!

○국무총리 황교안 그리고 또 언론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언론이 부정 투표 결과를 발표했다 이 자체가…… 그 자체도 언론에 대한 중대한 명예 침해라고 생각합니다.

또 지금 말씀드린 여러 예들을 든 것은 제가 납득할 수 없는, 들어 보지 못한, 제가 그 당시에 도 정부에 있었던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강동원 의원 그러니까 이 나라가 이 꼴 아닙니까?

○국무총리 황교안 들어 보지 못한 사실과 다른 그런 얘기로 듣고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세계에서도 공정성을 인정받고 있는 우리 대한민국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명예를 훼손하는 아주 심각한 발언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강동원 의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자료라고 말씀드리지 않아요, 지금!

(장내 소란)

또 있습니다. 계속해서 말씀드릴게요.

강원도 춘천시 동내면 제1투표구입니다.

21시 14분에 개표를 시작해서 21시 24분에 개표가 끝납니다. 그런데 개표가 끝나기 1시간 34분 전인 19시 40분에 선거관리위원장이 개표 결과를 공표합니다. 보십시오. 투표함이 뚜껑도 안 열린 채 멀쩡히 있는데 어떻게 1시간 34분 전에 개표 결과를 발표하고 방송할 수 있습니까?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볼게요.

부산시 사상구 엄궁동 제6투표구입니다.

21시 34분에 개표를 시작해서 21시 46분에 개표가 끝납니다. 선관위원장은 개표 결과를 22시 09분에 공표합니다. 그런데 개표 결과를 언론사에 제공한 시각이 20시 57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개표 방송이 나간 37분 후에 개표가 시작됩니다. 개표 방송이 나간 1시간 12분 뒤에 개표 결과가 공표됩니다. 참으로 어처구니없는 일입니다.

이와 같은 일들이 전국 각 지역 선관위에서 60% 이상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개표 조작이 아니고 무엇입니까?

○국무총리 황교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동원 의원 결과로 말씀드리면, 또 있어요.

충청남도는 투표수보다 득표수가 5만 9420표가 더 많았어요. 또 인천시는 최종 집계 과정에서 1657표가 사라져 버렸습니다. 18대 대선 부재자 투표수는 시간이 갈수록 줄어듭니다.

질문하겠습니다.

총리,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개표 결과 사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무총리 황교안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 당시에……

○강동원 의원 그러니까 있을 수 없는 일인데……

○국무총리 황교안 말씀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제가 말씀……

○강동원 의원 중앙선거관리위에서 제공한 자료가 이기 때문에……

○국무총리 황교안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동원 의원 그러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해 조사할 용의 있어요?

○국무총리 황교안 만약 그렇다면 의원님께서 그 자료를 잘못 읽으신 것이고 지금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강동원 의원 이것은 엄연한 범죄행위입니다.

○국무총리 황교안 그리고 의원님, 현장에는 투표 때도 그렇지만 개표 때도 야당 선거관리인이 다 있었습니다. 왜 그때 문제가 없었습니까? 왜 문제 제기를 하지 않았겠습니까?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그런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강동원 의원 국민이 보고 계시기 때문에 총리는 책임 있는 답변을 해야 되는 것이고 저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이 자료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자료예요!

○국무총리 황교안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자료를 의원님께서 잘못 읽으신 것으로 저는 이해가 됩니다.

○강동원 의원 내가 바보입니까, 잘못 읽게?

○국무총리 황교안 그 당시에 현장에 야당 선거관리인 다 있었는데 그분들이 왜 이의 제기하지 않았겠습니까?

○강동원 의원 총리, 답변할 자격 없으니까 들어가세요.

(장내 소란)

(○서용교 의원 의석에서 — 답변할 자격이 없다면서 왜 불러냅니까?)

가만히 듣고 계세요, 서용교 의원.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소련의 독재자 스탈린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투표는 인민이 하지만 개표는 권력자가 한다. 투표하는 자는 아무것도 결정하지 못하고 개표하는 자가 모든 것을 결정한다’고 말했습니다.

소련의 독재자 스탈린이 말한 이 현상이 대한민국에서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정도를 지키시지요」 하는 의원 있음)

결론적으로 박근혜 대통령의 정통성은 없습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세요!」 하는 의원 있음)

선거부정, 개표 조작의 증거들이 명명백백하게 밝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강동원 의원, 책임지십시오」 하는 의원 있음)

황교안 총리는 법무부장관 시절 당시 선거부정을 파헤쳤던 채동욱 검찰총장을 찍어 냈던 장본인입니다.

오늘날 사법부와 행정부는 권력의 시녀가 되어 버렸습니다. 박정희는 군사쿠데타로 권력을 찬탈했고, 그의 딸 박근혜는 선거쿠데타로 권력을 잡았습니다.

(「지나칩니다, 지나쳐」 하는 의원 있음)

박근혜 정권의 정체성은 과연 무엇입니까?

뺏속까지 친일의 피가 흐르는 친일파 후예들이 권력의 중심에서 역사를 왜곡하는 정권, 유신잔당들이 광풍으로 박정희 유신명령을 부활시키는 정권, 수구반통일 세력들이 민족통일을 외면한 정권이라고 저는 규정합니다.

저는 국민의 이름으로 대법원장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측에 요구합니다.

대법원은 18대 대통령선거 무효소송을 당장 속개하십시오. 대법원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사범들을 국헌문란죄로 엄중히 처벌할 것을 요구합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전자개표기를 없애고 투표소에서 수개표할 것을 요구합니다. 투표소에서 수개표하자는 법안은 이미 제가 대표발의해서 국회에서 지금 심사 중에 있다는 것을 국민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면서 반드시 수개표가 국회에서 처리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을 여러 동료 의원들께 간곡히 말씀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상훈 의원 의석에서 — 대정부질의의 수준 좀 지킵시다, 매너 좀 지키고)

김상훈 의원, 당신이나 잘해!

(○김상훈 의원 의석에서 — 박정희 씨가 뭐예요, 박정희 씨가!)

○부의장 이석현 강동원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대전 동구 출신의 새누리당 이장우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장우 의원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국회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선배 의원 여러분!

그리고 황교안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새누리당 대전 동구 출신 이장우 의원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미래 주역인 우리 아이들에게 바르고 균형 잡힌 역사를 교육할 것인지, 아니면 대한민국은 태어나지 말아야 할 나라로 가르치는 역사교육을 받게 할 것인지 그 기로에 어떤 선택을 하나에 따라 대한민국의 미래가 좌우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 선택의 답은 자명합니다. 상식이고 기본입니다.

한국사 교육과정에서 고시한 한국사 목표는 오늘의 우리의 삶이 역사의 산물임을 이해하고, 한국사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현대사회를 역사적으로 인식한다라고 그리고 연이어 우리가 역사의 주체임을 인식하여 현대사의 발전에 능동적으로 참여하는 태도를 기른다라고 기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실에서 지금 우리 아이들이 배우고 있는 역사 교과서를 보십시오. 그 실태는 암담함을 넘어 참담합니다.

북한은 국가 수립, 대한민국은 정부 수립으로 보천보전투와 같은 김일성의 행적을 항일투쟁사의 대표적 사례로 미화하고 있습니다.

한강의 기적이라 불리는 지금의 대한민국이 과연 누구의 피와 땀으로 만들어졌는지, 왜 우리 아이들이 그 당연하고 자랑스러운 이야기들을 교실에서 배우며 성장하면 안 된다고 하는 건지 국회의원 이전에 자녀를 둔 부모 입장에서 가슴이 멍멍해집니다.

그리고 야당에게 묻고 싶습니다.

사실상 대한민국을 폄훼하고 헌법적 가치를 부정하는 왜곡된 역사교육을 바로잡으려는 역사교육 정상화 노력에 반대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북한을 찬양하고 대한민국을 격하하는 교과서를 그대로 가르치라는 것입니까?

편향적 이념이 가득한 사실조차 왜곡하는 교과서를 우리 아이들에게 계속 배우라고 하는 겁니

까? 과연 우리는 누가 이로우라고 이런 교과서로 계속 아이들을 가르쳐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입니까? 북한의 관점에서 쓴 역사 교과서를 지키려는 진짜 의도는 무엇입니까?

국무총리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통합진보당 출신 강동원 의원님 말씀에 대해서 총리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무총리 황교안** 전혀 제가 알고 있는 사실관계와 다른, 정말 사실이 아닌 이런 내용을 꼭 말씀하셨고 그 말씀하신 대로라고 하면 우리나라는 정말 있어서는 안 되는 나라입니다. 국민들도 엉터리 대통령을 뽑았다는 것이고, 얼마나 많은 분들이 선거를 통해서 대통령을 정당하게 뽑기 위한 노력을 했습니까? 이것을 폄하하는 것이고 또 언론도 개표 조작에 가담을 해서 엉터리 보도를 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정말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그 수많은, 여러 곳의 개표소에서 선거 부정이 일어났다,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현장에는 여당 선거참관인뿐만 아니라 야당 참관인들도 수없이 많이 있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그 각 곳에 야당도 여러 명씩 나가서 다 참관을 했습니다. 거기에 그 말씀드린 시차의 문제가 있었다고 하면 ‘아니, 개표한 지 지금 몇 분 안 지났는데 어떻게 발표를 하느냐’, 금방 항의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 문제가 없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무슨 근거로 그런 말씀 하시는지, 중앙선관위 자료라고 하시는데 선관위에서 정말 허무맹랑한 이런 내용이 나왔을 리가 없습니다. 자료를 받았으면 그 자료를 잘못 읽으신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정말 이런 부분들이 국민들에게, 특히 어린 학생들에게까지 우리 대한민국의 정체성에 대해서, 정통성에 대해서 또 우리나라가 지금 우리 국민들이 어떤 나라를 만들어 가려고 하는가에 관해서 애쓰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정말 폄하하는 참 안타까운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장우 의원** 강동원 의원이 몸담았던 통합진보당, 그 당을 해산한 주무 장관이셨지요?

○**국무총리 황교안** 제가 장관 시절에 통진당을 위헌정당으로……

○**이장우 의원** 왜 해산시키는 데 앞장서셨습니까?

○**국무총리 황교안** 오래전부터 이 당이 가지고 있던 정강정책부터가 우리 자유민주체제에서 수

용할 수 없는 기본적인 북한 노선을 추종하고 있는, 목적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되는 이런 정당이었습니다.

활동이 아니라, 우리 헌법에는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될 때 해산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목적만 보더라도 위헌정당에 해당하는,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하는 이런 정당인데 그 뒤에 이석기 사건을 통해서도 알 수 있듯이 구체적인 행동에 있어서도 그 활동도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되는 정말 우리나라가 허용할 수 없는, 우리 국민들이 허용할 수 없는 이런 정당이었기 때문에 제가 그런 자료들을 토대로 해서 위헌심판제청을 한 것이고 그것이 현재에서의 13개월간의 긴, 정말 충분한 검토를 거쳐서 제가 알기로는 지금 헌법재판관 아홉 분 중에 여덟 분이 위헌정당으로 판단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8 대 1의 그런 아주 압도적인 의견으로 위헌정당으로 결정이 난 것으로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장우 의원** 통합진보당을 해산했습니다. 강동원 의원은 통합진보당 출신입니다.

저는 이번 박근혜정부를 흔들려고 하는 목적도 통합진보당이 갖고 있는 이념의 결과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무총리 황교안** 통합진보당을 다시 재건해야 된다는 얘기도 있고 그 뿌리를 더 이어가고자 하는 이런 분들도 있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그런 뿌리가 계속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꼭 통진당 소속이 아니라 하더라도 우리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되고 또 심지어 나가서는 법 위반에 해당하는 이런 활동을 하는 분이 있다고 한다면, 통진당 소속이 아니라 하더라도 그 생각의 기초를 같이하면서 같은 내용의 활동을 한다면 그것은 우리가 용인해서는 안 된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장우 의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화면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보이시려나 모르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이 보천보전투에 대해 기술한 고등학교 한국 교과서의 내용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보천보전투는 별도의 내용으로 구성해서 ‘김일성의 이름도 국내에 알려지게 되었다’라고 하면서 해방 이후의 영향까지 상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다음 화면 한번 보시겠습니다.

같은 출판사 교과서에 기술된 청산리대첩에 대한 설명입니다. 반면 독립투쟁 사상 최대 규모의 승리로 기록되어지고 있는 김좌진 장군의 청산리대첩은 본문 5줄 가량으로 간단하게 기술되어 있습니다.

총리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무총리 황교안** 그 내용만 가지고서는 판단하기 어렵습니다마는 균형이 현저하게 차이가 있다고 하면 학생들에게 잘못된 사실을 제공, 전달할 수 있다 이런 걱정이 있습니다.

○**이장우 의원** 이 교과서로 배운 학생들은 보천보전투와 청산리대첩 중 어떤 사건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겠습니까?

○**국무총리 황교안**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특정 전투에 대해서는 많은 설명을 하고 또 다른 부분은 간략하게 이렇게 설명을 한다면 어린 학생들로서는 오해의 소지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이장우 의원** 더욱이 우리 역사를 배움에 있어서 굳이 북한에서 김일성 위상화의 상징처럼 이야기하는 보천보전투를 이렇게 자세하게 배우게 하는지 역사교육 방법론의 문제에도 회의가 드는데, 총리께서는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무총리 황교안** 균형 있는 역사를 가르치겠다고 하는 이번 정부의 방침은 이런 편향된 서술들이 개선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출발이 된 것입니다.

○**이장우 의원** 저는 이 교과서를 보면서 북한 사관에 입각한 교과서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무총리 황교안** 북한 사관에 입각한 주체사상에 따른 이런 교과서들은 적어도 우리와 같은 안보 상황 속에서는, 우리나라에서는 어린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교과서로서는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장우 의원** 그렇지요?

그러면 다음 사례를 보시겠습니다.

화면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해방 후 토지 개혁에 대한 비교입니다. '1946년 3월 북한은 무상 몰수, 무상 분배 방식으로 토지 개혁을 단행하였다. 이에 자극을 받은 농민들은 북한과 같은 토지 개혁을 요구하였다' 이게 대한민국의 학생들이 배우는 교과서에 나올 내용입니까?

○**국무총리 황교안** 나중에 결과적으로는 북한에

서 다 국유화하고 토지 몰수하고 이용만 할 수 있게 이렇게 했는데 그 점을 무상으로 나누어 준 것으로 그걸 확대해서 얘기를 하면 편향적인 서술이라는 평가를 받게 될 것이고 이런 서술은 학생들에게 아주 좋지 못한 그런 영향을 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장우 의원** 그래서 올바른 교과서를 만들고자 하는 취지 아니겠습니까?

○**국무총리 황교안** 바로 그렇습니다.

○**이장우 의원** 이 수업을 받은 우리 아이들이 남한에 부정적인 인식을 하게 되고 북한이 오히려 더 개혁을 잘했다고 자연스럽게 생각하지 않을까요?

○**국무총리 황교안** 대한민국은 우리가 힘들게 만들어 낸 자랑스러운 국가입니다. 우리 국가의 존엄성을 훼손하는 이런 일들은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장우 의원** 왜곡된 사료보다 우리 아이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고자 하는 서술 기조가 의도되어 녹아 있다면 우리 아이들은 부지불식 간에 편향성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그렇지요?

○**국무총리 황교안** 지금 그런 우려가 많기 때문에 역사 교과서를 개편하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장우 의원** 최근 남북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이었던 천안함 피격과 연평도 포격 사안에 대해서 교과서마다 서술이 다르거나 아예 다루지 않는 교과서도 있습니다.

현행 17종의 중·고 역사 교과서 중에서 무려 13종의 교과서에는 천안함 피격 사건을 찾아볼 수 없습니다. 그리고 6종의 교과서에는 연평도 포격 사건이 없습니다.

총리님, 그 교과서로 배운 우리 아이들은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포격 사건을 어디에서 배울 수 있겠습니까?

○**국무총리 황교안** 중요한 역사적 사실이 누락되면 마땅히 학생들이 배워야 될 역사적 사실, 교훈을 배울 수가 없게 될 것입니다. 역사 교육에 있어서 남북이 분단되어서 대립하고 있는 우리의 특수한 역사적·정치적·경제적 상황에 대해서 학생들이 바로 알아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장우 의원** 한 집에 두 자녀가 서로 다른 학교를 다니는 중·고등학생입니다. 큰 아이는 천안함, 연평도 사건을 학교에서 배워 잘 알고 있

고 둘째 아이는 두 사건이 금시초문인 일이 벌여 질 수 있습니다. 그렇지요?

총리님, 이런 식의 교육으로 우리 아이들이 어떻게 우리의 분단이라는 특수한 상황을 인식하고 미래를 준비할 수 있겠습니까?

총리님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무총리 황교안** 균형되고 올바른, 바른 그런 역사 인식이 어린 학생들에게 교육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반드시 그렇게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장우 의원** 다시 화면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현행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 6단원, 즉 현대사 단원 첫 페이지에 나오는 이미지 화면입니다. 우리 현대사에서 민주화 과정과 그 성과를 대한민국의 국민이라면 누구나 등한시할 수 없을 겁니다. 저도 대학 내내 대한민국의 민주화를 위해서 앞장서서 싸웠던 사람입니다. 민주화를 일군 투쟁, 시위 등 과정이 대한민국의 현대사의 전부입니까? 이 이미지를 보면서 과연 무엇을 연상하겠습니까? 역사 교과서 단 한 단원을 시작하는 얼굴에 투쟁, 시위, 집회 사진이나 삽화를 배치한 것은 가치관 형성기인 우리 학생들을 저항, 대결, 투쟁 전사로 키우려고 하는 것 아닌지 다소 마음이 무겁습니다.

총리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무총리 황교안** 어린 학생들에게 외국에서 다 부러워하는 우리나라의 단기간에 걸친 성장과 또 민주화 이런 자랑스러운 모습을 가르치고 그런 포부를 가지고 어린 학생들이 미래를 설계해 나가서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을 이룩하는 일에 동참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교육에 있어서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장우 의원** 최근 통진당 해산 결정, 전교조의 범외노조 판결, 한국사 교과서 수정명령 상고 등 오늘의 혼란을 틈타 왜곡된 역사를 우리 아이들에게 강요하려는 시도는 바로잡아야 한다고 봅니다.

총리님도 그렇게 생각하시지요?

○**국무총리 황교안** 예, 그렇게 되어야 됩니다. 역사 교육에 있어서 그런 정치적 의도, 편향성이 배제되고 바른 역사를 우리 미래 세대에게 가르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장우 의원** 이러한 편향성에 대한 문제는 단순히 교과서 한 가지에만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그 교과서를 바탕으로 한 참고서나 문제집은 그 정도가 훨씬 심합니다.

시중의 문제가 있는 참고서 한번 예를 보겠습니다.

화면을 다시 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문에 ‘조선혁명이야말로 우리 당 사업의 주체입니다. 조선혁명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 역사를 알아야 하며 조선의 지리를 알아야 하며 조선 인민의 풍속을 알아야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소련식이 좋으니 중국식이 좋으니 하지만 이제는 우리 식을 만들 때가 되지 않았습니까?’ 이런 내용이 대한민국 학생들이 배우는 교과서에 수록될 내용입니까, 아니면 참고서에 수록될 내용입니까?

○**국무총리 황교안** 그런 내용은 교과서든 참고서든 수록되어서는 안 되는 내용이라고 우리 국민들이 생각을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장우 의원** 다른 예문을 보겠습니다.

‘만경대에 왜 오신 거지요?’

‘위대한 수령님의 생가이기 때문이지요. 이곳은 우리들에게 성지입니다.’

보기, 주체사상을 내세웠다, 유헌통치를 전개하였다, 선군정치를 강조하였다, 사회주의 강성대국론을 제창하였다, 사실상 국가원수인 국방위원장에 취임했다, 이게 대한민국 교과서를 참고하는 참고서의 내용으로 적합하다고 봅니까?

○**국무총리 황교안** 지금 교과서도 오류와 편향성이 문제가 되고 있지만 역사 교과서에 대한 참고서 또 문제집 이런 부분들도 같이 문제가 되고 있다고 생각하고 또 그 오류의 심각성, 왜곡의 심각성이 교과서보다 더 심한 부분들도 있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이 부분들을 사실은 고쳐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장우 의원** 이 참고서를 집필한 사람은 김일성 주체사상을 흠모하거나 아니면 종북 주사파인 것이 분명합니다. 그렇지요?

○**국무총리 황교안** 내용으로 봐서는 걱정스러운 부분이 많습니다.

○**이장우 의원** 이것에 대해서 법무부장관하고 상의해서 이 내용을 분명하게 수사할 의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국무총리 황교안** 구체적인 사실을 파악하여야 판단할 수 있는 결론이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장우 의원** 법무부장관 나와 계십니까만 법

무부장관께서 이런 부분도 면밀하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리님, 요즈음 고등학생 중에 교과서만 갖고 공부하는 학생은 없지요? 참고서를 대부분 많이 하지요?

○국무총리 황교안 그렇습니다.

○이장우 의원 참고서가 중복 주사과들이 집필한 참고서라면 대한민국의 정체성은 어디로 가겠습니까?

○국무총리 황교안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부정하거나 훼손하거나 폄하하는 이런 교육이 이루어져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장우 의원 대한민국 역사 교과서 집필 중에 통진당 출신 중복 주사과들이 있는 것 아십니까, 모릅니까?

○국무총리 황교안 그 내용을 제가 다 일일이 파악해 보지는 않았습시다라는 통진당의 생각과 사상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교과서나 또는 학생들이 참고할 참고서를 만들 때 그 생각이 반영돼서 그것이 우려를 주는 내용으로 이렇게 편찬이 된다면 이것은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장우 의원 총리께서는 북한의 주체사상을 언제 혹시 접하셨습니다?

○국무총리 황교안 저는 검사로 임관되기 전에는 북한의 주체사상에 대한 소개는 들었지만 자료를 바로 보지는 못했습니다. 검사가 된 뒤에 피의자들이 가지고 있다가 체포되고 압수된 이런 주체사상 자료들을 본 일이 있습니다.

○이장우 의원 유훈통치니 선군정치니 사회주의 강성대국론이니 이런 것들도 검사가 되시고서 접했습니다?

○국무총리 황교안 그렇습니다. 그게 한 번에 다 나온 것은 아니고 시간이 좀 가면서 그런 단어, 용어들이 더 많이 유포가 되면서 알려지게 된 것으로 기억합니다.

○이장우 의원 이런 용어들이 정상적인 국가에서 얘기되는 용어들입니까?

○국무총리 황교안 대부분은, 제가 전에 공부할 때는 대부분은 북한의 사이트나 북한의 선전 자료들, 이런 것들이 공개가 되면 또 그것들이 얼마 뒤에 우리 이쪽에서 반정부 활동, 반체제 활동, 반민주 활동을 하는 이런 사람들에게 또 나뉘지고 그런 것들이 널리 유포가 되고 이런 것을 보았었습니다.

○이장우 의원 본 의원은 우리 아이들이 무엇을

어디까지 배워야 하는지 참으로 걱정스럽습니다.

반복되는 질문입니다마는 제 걱정요에 대해서 총리님의 종합적인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무총리 황교안 기본적으로 대한민국은 많은 선열들의 피, 땀, 고통 속에서 일구어 낸 자랑스러운 국가입니다. 물론 우리 국가가 발전하는 과정에서 미진한 부분들도 있고 국민들 중에는 아쉬운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이 부분은 우리가 같이 지혜를 모아서 선진 조국으로 만들어 가는 데 힘을 합해야 될 부분이고 지금까지의 성취, 역사가 결코 부끄럽지 않은 자랑스러운 역사와 성취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들을 우리 젊은 세대에게 같이 공유해서 그들도 꿈과 희망을 가지고 우리와 함께 미래를 만들어 가는, 그래서 정말 자유, 번영 또 모든 나라의 존경을 받는 그런 선진사회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런 쪽에 정부의 역량을 모아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장우 의원 균형적인 역사관에 입각한 우리 교과서를 만들기 위해서 총리님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국무총리 황교안 기본적으로 전문성이 있고 또 균형 잡힌 그런 집필진을 확보해서 이분들이 충분한 검토와 논의를 거쳐서 바른 내용을 서술을 하고 그 과정에서 혹시라도 있을 수 있는 오류들을 잡기 위해서 검증 시스템을 만들고 또 공개하고 자료들을, 내용을 공유하는 이런 과정을 통해서 바른 교과서를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장우 의원 감사합니다.

총리님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법무부장관, 잠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사 역사 교과서를 집필했던 집필진의 대부분이 좌파 학자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교과서에, 교과서 유통 과정을 포함한 집필 과정에서 상당한 부패 구조가 있는 걸로 지금 알려지고 있습니다.

법무부장관, 이 문제에 대해서 확실하게 수사를 요청합니다.

○법무부장관 김현웅 예,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장우 의원 예.

교과서 유통 과정, 집필 과정에서 부정부패가 굉장히 심한 걸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장관께서 확실하게 수사해 줄 것을 공개적으로

요청하는 바입니다.

○**법무부장관 김현웅** 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장우 의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민 여러분!

역사적 오류, 편향성 역사 교과서는 바로잡아야 합니다. 자랑스러운 우리 역사에 대한 균형 잡힌 역사 인식을 담은 올바른 교과서를 만들어야 합니다. 특정 이념에 치우치지 않는 정치적 중립성이 확보된 역사 교과서를 만들어야 합니다. 수능 필수화에 대비, 학습 부담을 줄여 주는 단일화된 올바른 교과서를 만들어야 합니다.

마치 북한 교과서 보는 듯한 느낌을 주는 교과서, 세계에서 유례없는 3대 세습 독재체제를 옹호하고 계급투쟁의 민중사관을 주입하여 김일성 주체사상을 교묘하게 기술하는 현재의 역사 교과서를 균형 잡힌 올바른 교과서로 만들어 냅시다.

8월 15일 자 모 일간지 기사 내용입니다. ‘역사관은 미래관입니다. 하나의 작은 사건이라도 국민이 서로 다르게 기억하고 있다면 그 나라 앞날은 분열입니다. 같은 곳에 서 있어야 같은 곳을 보게 됩니다. 그래야 나라에 힘이 생깁니다’, 인터뷰 기사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오늘 대정부질문을 하고 행정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를 위해 국정감사를 하는 것도 그 원리와 원칙에는 대한민국의 무궁한 발전이 전제되어 있다고 감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는 대한민국의 찬란한 역사에 대한 자긍심을 바탕으로 대한민국 국민으로 당당한 현재를 살며 번영된 미래를 자신 있게 준비할 수 있는 첫걸음을 함께 내딛어야 할 때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 이석현** 이장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경기 안산 상록갑 출신의 새정치민주연합 전해철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겠습니다.

○**전해철 의원**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국회부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경기 안산 상록갑 전해철 의원입니다.

대정부질문을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리, 나오십시오.

총리께 본질의를 시작하기 전에 답변 과정에서 약한 미흡했던 부분을 좀 더 분명히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리께서 두 가지를 이야기했는데요, 교과서가 편향됐다는 것을. 김일성의 주체사상을 긍정적으로 기술하고 있다, 또 6·25 전쟁의 책임이 남북 모두에게 있다라고 했는데 그 근거를 지금 다 찾았습니까?

○**국무총리 황교안** 아까 그 책에 있다는 말씀을 제가 드렸습니다.

○**전해철 의원** 좀 더, 잘 안 들려요. 크게.

○**국무총리 황교안** 아까 그 자료들을, 자료의 내용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전해철 의원** 말씀드렸다고요?

○**국무총리 황교안** 예, 자료의 내용들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전해철 의원** 아니, 다시 말씀해 보세요. 근거가 정확하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교과서의, 어떤 교과서의 어떤 부분이 이와 같이 편향됐다고 이야기를 해야지요.

○**국무총리 황교안** 모든 교과서를 다 말씀을 드릴 수는 없겠습니다마는 제가 검토했던, 보고받은 내용의 교과서는 미래엔이라고 하는 그런, 거기서 만든 그런 교과서이고 그 외에도 다른 부분들도 같이 문제가 있다는 것을 검토를……

○**전해철 의원** 미래엔 교과서에 대해서는 한국 전쟁 발발의 책임이 북한에 있다, 이것을 분명하게 이야기했는데 그것을 인정 안 합니까?

○**국무총리 황교안**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남한과 북한에 같이 책임이 있는 이런 뉘앙스로 기재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전해철 의원** 그 해석이 잘못되었다고 지적한 것을 총리는 잘 모르시나요? 이 얘기를 하는 이유가 지금 국정 교과서를 주장하면서 잘못된 전제 사실로 국민들을 호도하고 있는 겁니다.

정확하게 사실을 인정하면서 ‘이 부분이 잘못됐다’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부족하다라는 것을 지금 총리한테 이야기하면 총리께서는 ‘정확하게 어떤 교과서의 몇 페이지의 어떤 서술이 이와 같이 잘못되고 편향됐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국무총리 황교안** 그 예를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제가 굳이, 이런 자료를 말씀드리는 것이 어떨까 모르겠습니다마는 미래엔이라는 교과서의 317쪽에 보면 6·25 전쟁에 대해서 ‘남침과 북벌을 위해서 그 가냘픈 주먹을 들먹이고 있지 아니하냐’, 이런 취지로 앞뒤를 보면 결과적으로 양쪽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이렇게 서술하는 내용이

여기 있습니다.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전해철 의원** 주체사상 미화 부분은요?

○**국무총리 황교안** 주체사상 미화 부분에 관해서도 아까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었는데 지금은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마는, 지금 자료를 보여 드렸습니다. 보여 드렸고, 필요하면 또 나중에 찾아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해철 의원** 지금 미래엔에, 총리께서 이야기 하는 것에 동의하지 못하고요.

○**국무총리 황교안** 아니, 지금 내용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전해철 의원** 그 판단을, 제 이야기는 그 지금 이야기하는 미래엔에 대해서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6·25의 책임을 분명하게 하고 있다라고 판단을 하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국무총리 황교안** 남침과 북벌을 위해서 했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전해철 의원** 들어 보세요. 그런 면에서 총리께서 선입견을 가지고 교과서를 보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주체사상 미화 부분도 추상적으로 이야기를 할 것이 아니라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는 게 필요하다, 이 정도 이야기를 할게요.

○**국무총리 황교안** 주체사상을 전혀 비판적 의견 없이 그대로 다 교과서에 기재한 것으로 제가 보고를 받았습시다. 몇 번 확인을 했는데 그렇게 되어 있었다. 물론 그중에는 나중에 교육부에서 수정 요구를 해 가지고 개정이 된 부분도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필자는 계속 소송을 하면서 내 주장이 옳다, 이런 소송이 지금 대법원에 계류 중에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같이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해철 의원** 총리께서 지금 5·16 쿠데타에 대해서 왜 답변을 정확하게 하지 않습니까? ‘논란을 더 키우지 않기 위해서 안 한다’ 이 답변 내용이 저는 적절하지 않은 것 같은데요.

○**국무총리 황교안** 거듭 말씀을 드렸지만 그것은 다양한 의견들이 있는데 그 부분에 관해서 한 의견을 말씀을 드리면, 또 많은 논란이 생겨서 제가 교과서에는 이렇게 되어 있다는 말씀도 드렸고,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전해철 의원** 이렇게 답변을 최종적으로 내렸지요? ‘대부분의 초중고 교과서에는 5·16을 군사정변으로 표기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러한 용어가 잘못되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이

렇게 답변했지요?

○**국무총리 황교안** 제가 청문회에서 이야기할 때 그렇게 이야기를 한 부분이 있습니다.

○**전해철 의원** 그러면 사실상 정확하게 이야기한 거잖아요. 제 말씀은 5·16에 대한, 쿠데타 혁명에 대한 이야기도 정확하게 이야기하지 못하는 총리가 사고의 다양성을 통제하려고 하는 이런 국정화에 대해서는 또 찬성하는 것은 논리적으로 맞지 않다, 그리고 아까 이야기했던 두 가지 면에 대해서도 전혀 다른 시각이 있는데 하나의 시각만을 강변하는 총리의 태도는 맞지 않다, 이렇게 지적하고 제가 본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국무총리 황교안** 제가 사고를 통제하려고 했다면 그 부분은 이렇다라고 제 의견을 강하게 얘기했을 것입니다. 지금 이 부분에 관해서는 많은 논란이 있기 때문에 총리의 입장에서 그 부분을 명시적으로 얘기하게 되는 것은 결과적으로 여러 가지 또 다른 부작용도 우려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을 자제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전해철 의원** 거듭 말씀하지만 생각하는 이념이나 사상이나 사고를 자제하는 것이 옳지 않다고요. 민주사회에서는 자기 생각을 분명하게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거기에 대한 평가를 여러 가지 다양화, 다원화된 사회에서 받아야 된다는 거지요.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본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경환 부총리의 인턴 비서였던 황모 씨의 중소기업진흥공단 특혜 의혹에 대해서 총리께서는 알고 계십니까?

○**국무총리 황교안** 그런 문제 제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해철 의원** 간단히 문제 사안을 이야기하면 박철규 전 중소기업진흥공단 이사장은 당초 2299위였던 점수를 1200위라고 조작했다가 또 미달하니까 176위로 점수를 조작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것 역시 170위에 그쳐서 미달하니까 서류전형 합격자 수 자체를 증원하고 면접에서 이와 같은 내용 때문에 외부 임원의 강한 반대 있으니까 불합격시키기로 잠정 결정했다가 다음 날 이를 번복합니다.

이것을 보면 누가 봐도 상식적으로 납득되지 않는 특혜 조치이고 아주 위중한 위법 행위다 생각하는데, 총리께서 어떻게 보십니까?

○**국무총리 황교안** 이 사건과 관련해서는 감사원이 관련 자료를 검찰에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검찰에서 지금 검토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전해철 의원** 검찰에서 지금 수사하고 있는 것은 박철규 전 이사장에 대한 것이지요? 최경환 부총리에 대해서 수사하고 있습니까?

○**국무총리 황교안** 기본적으로는 검찰에 제출된 그 자료의 내용, 그 부분은 이제 이사장의 문제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수사라고 하는 것은, 내사라고 하는 것은 그 부분부터 시작해서 다른 부분이 있다면 더 이야기가 진행이 되겠지요.

○**전해철 의원** 이미 상당 부분 사실이 나와 있어서 그렇게 막연하게 이야기를 해야 될 건 아닌 거 같은데요.

박철규 전 이사장에 대한 감사 결과 보고서를 보면 상당한 부분에, 상당한 양의 최경환 부총리의 압력 행사에 의해서 이런 행위를 했다는 것이 나옵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최경환 부총리에 대해서도 직권남용이나 아니면 업무방해교사죄로 해서 수사 대상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총리께서 어떻게 보시지요?

○**국무총리 황교안** 검찰에서 검토 중이라고 하는 말씀을 제가 드렸습니다.

○**전해철 의원** 자꾸 말씀드린 대로 이런 위중한 사안에 대해서 총리께서 답변을 회피해 가지고 부조리와 권력형 비리가 없어지겠습니까? 수사 대상이 아니다, 또는 지금 파악한 거로는 수사 대상이다 등등에 대해서는 총리께서 자신 있게 말씀을 하셔야지요.

○**국무총리 황교안**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검찰의 수사라고 하는 것은 함부로 결론을 내릴 수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감사원에서 관련 되는 자료를 검찰에 제출했기 때문에 검찰에서 검토 중에 있고 범죄단서가 있으면 그에 상응한 이런 조치들을 해 나갈 것으로 생각합니다.

○**전해철 의원** 또한 최경환 부총리의 운전기사가 2008년에 중진공의 용역회사 직원이었다가 2010년에 정규직으로 채용됩니다. 그런데 중진공 관계자의 말에 의하면 전례가 없던 일이라고 이야기하고, 이 정규직으로 채용할 당시에 최경환 부총리는 중진공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경부장관이었다는 점 등을 감안하면 이것 역시 굉장히 큰 특혜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총리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무총리 황교안** 그런 보도가 난 것은 봤습니다마는 사실관계를 모르기 때문에 제 의견을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전해철 의원** 여기에 최경환 부총리의 매제이자 보좌관이었던 장모 씨는 금융 관련 경력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11월에 금융업계의 최고 노른자 자리로 평가받는 연봉 2억 원대의 한국기업데이터 상임감사로 취업한 것도 낙하산 인사다라는 의혹이 제기됐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국무총리 황교안** 그 내용은 제가 잘 알지 못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제 의견을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전해철 의원** 이 3건의 사례를 보면 최경환 부총리를 둘러싼 이런 인사 구설은 결국 최 부총리의 직접적 관여 또는 정권 실세의 영향력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겠느냐라고 생각하는데, 어떠세요?

○**국무총리 황교안** 의원님 잘 아시다시피 검찰에서 지금 자료를 검토하고 있다고 하니까 그 결과를 좀 기다려 봐 주시기를 바랍니다.

○**전해철 의원** 총리, 앞의 것은 수사 중이지만 뒤의 의혹 제기에 대해서는 아무데서도 조사나 감사나 수사 중에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런 의혹 제기를 하는 입장에서는 밝혀지는 것을 원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처음에 그 인턴에 대한 것도 감사원에서 중진공 감사를 하지 않았으면 세상에 알려지지 않을 일이에요. 이런 일에 대해서는 적어도 총리가 사실을 확인하든 아니면 공직자 윤리 차원에서 확인을 하든 등등의 사유가 필요한 거지 그렇지 않고 그냥 기다리다가 좀 더 의혹이 사실로 밝혀지거나 다른 어떤 기관에 의해서 간접적으로 밝혀질 때까지 기다린다는 것은 총리의 태도로써 맞지 않는 것 아닙니까?

○**국무총리 황교안** 의원님 잘 아시다시피 비리에 관한 이야기를 의원님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부분에 관해서는 관계부처가 있고 수사기관들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그곳에서 판단하고 처리할 일이지 그런 부분을 총리가 일일이 보도에 난 것을 확인해서 '왜 수사하지 않느냐, 수사해라' 이런 말씀 하는 것은 적절치 않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양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전해철 의원** 총리의 답변은 실망이고요.

대통령의 가이드라인 제시에 따른 수사상의 문제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난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대통령이 주요 사건과 관련하여 한 발언이 법무부를 통해 ‘대통령 지시사항’이라는 제목으로 하달된 거에 대하여 부적절하다 이런 문제 제기가 있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총리 알고 계십니까?

○국무총리 황교안 그런 내용의 그런 질의가 있었다 하는 얘기는 들었습니다마는 그 내용 자체는 제가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전해철 의원 검찰청법 8조를 보면 구체적 사건에 관하여는 법무부장관만 검찰총장을 통해 지휘 감독할 수 있도록 정해져 있으니 대통령 구체적 사건에 대해서 지시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이는 검찰수사의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해서 이와 같은 구체적인 지시는 가능한 한 지양되어야 된다, 해서는 안 된다고 해석되고 판단되는데, 총리의 생각은 어떠세요?

○국무총리 황교안 그 사실관계와 또 의도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제가 결론을 말씀드릴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전해철 의원 그러면 구체적인 사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PPT 띄워 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2014년 9월 21일 날 청와대가 검찰에 지시한 ‘유병언 측근 수사 관련’이라는 제목의 문건에서 ‘법무부와 검찰은 유병언의 측근인 김혜경 씨가 미국에서 구속된 만큼 속히 국내에 들어와서 진실을 밝힐 기회를 주기 바람’이라고 특정 개인을 지목하며 소환조사를 지시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적절합니까?

○국무총리 황교안 그 내용을 제가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

○전해철 의원 제가 PPT 띄워서 지금 보여 드렸잖아요. 뭘 확인한다는 겁니까?

○국무총리 황교안 제가 확인되지 않은 내용을 지금 여기서 PPT를 보고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전해철 의원 지금 말씀드린 지시사항이 대통령의 지시사항이라는 것을 장관께서는 믿을 수 없다 이 말씀입니까?

○국무총리 황교안 저 말씀입니까?

○전해철 의원 예.

○국무총리 황교안 저는…… 예.

○전해철 의원 그러면 제가 총리께, 장관이 아니고요, 총리께 거짓말로 질의하겠다는 이야기입니까?

○국무총리 황교안 그럴 리는 없겠지만 제가 확인되지 않은 내용을 토대로 해서 답변을 드리는 것은 그것은 그렇게 마땅하지 않습니다.

○전해철 의원 그러면 총리 들어가시고요, 법무부장관 잠깐 나오시지요.

○법무부장관 김현웅 예.

○전해철 의원 장관, 방금 제가 PPT에 띄워 놔던 김혜경 씨 수사 관련해서는 대통령이 지시한 사항 맞습니까?

○법무부장관 김현웅 대통령 지시사항을 저희들이 요약된 것을, 법무부에서 대검에 보낸 공문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전해철 의원 그러니까 대통령 지시사항 맞지요?

○법무부장관 김현웅 그런데 그 지시사항 자체가……

○전해철 의원 다른 이야기는 필요 없고요, 일단 대통령 지시사항 맞지요?

○법무부장관 김현웅 그렇습니다.

○전해철 의원 예, 들어가십시오.

총리님 나오세요.

법무부장관 이야기 들었습니까? 이것은 지시사항 맞습니다. 제가, 본 의원이 총리께 질의하면서 사실이 아닌 것을 하겠습니까?

자, 이런 지시사항이 대통령으로서 하는 게 적절합니까?

○국무총리 황교안 들은 내용을 전달했다고 했는데 그 내용의 구체적인 내용을 사실은 그냥 이렇게 말 들어 가지고 제가 판단하기가 어렵습니다. 좀 정확한, 중요한 부분이니까 정확한 내용을 파악해야 제 의견을 말씀드릴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전해철 의원 뭘 지금 유보적으로, 어떤 부분이 유보적이라는 거예요? 제가 보여 드렸잖아요. ‘김혜경 씨가……’ 이와 같은 이야기를 하는 게 적절하냐 그말입니다, 이런 지시가.

소신껏 이야기하세요.

○국무총리 황교안 그 부분은 제가 확인되지 않은 내용이기 때문에 지금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전해철 의원 뭘 확인하겠다는 겁니까?

○국무총리 황교안 그 내용이나 경위나 어떤 문

서가 내려갔는지, 그 의도가 어떤 것인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렇게 그냥 말씀 들어 가지고 제 의견을 얘기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면 제가 답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전해철 의원** 총체적인 질문지 내용은 이야기 드렸고요. 저는 장관께서 자꾸 이렇게 유보적으로 하는 것은 장관의 소신보다도……

(「총리, 총리」 하는 의원 있음)

총리, 총리의 소신보다도 대통령의 코드 맞추기에 너무 급급한 것 아닌가 생각이 들고, 제 의견은 이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이와 같은 대통령의 지시가 횡행하고 있는 것이 현재 검찰 수사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지금 들고 있는 예가, 몇 가지 예를 들 텐데 검찰 수사가 실제로 왜곡이 됩니다, 대통령의 지시사항에 따라서. 그래서 어느 시민단체는 지난 박근혜정부 2년을 평가하면서 ‘청와대의 하명기구로 전락됐다’라는 이야기까지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 예를 들면서 장관께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성완중 리스트 사건인데요. 이것을 보면 원래는 ‘유력 정치인에 대해서 금품을 제공했느냐, 안 했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박근혜 대통령의 대국민 메시지에서 사면수사를 주문하니 이 수사는 사면수사에 집중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미 구체적인 혐의가 드러난 이완구와 홍준표에 대해서만 수사하는 모양새를 취하고 나머지 인물에 대해서는 소환조차하지 않은 것에 비해서 노건평 씨에 대해서는 전담하는 수사관을 지정해 놓고 ‘공소권 없음’ 처분을 하면서도 상당 부분 그 혐의 사실을 설명하는 그런 수사 결과를 발표합니다.

이것이 맞습니까, 적절한 수사였습니까, 총리?

○**국무총리 황교안** 사면 관련된 수사에 관해서 대통령께서 말씀하시니까 이 쪽지 수사가, 메모지 수사가 그쪽으로 흘러가 버렸다 이런 것은 사실과 다릅니다.

기본적으로 처음에 문제 제기됐던 그 8명과 또 이 사건과 관련돼서 언론 등에 논란이 되었던 이런 여러 문제 부분들에 대해서 검찰이 특별수사팀을 만들어서 수사를 진행했습니다. 전반적으로 그 여덟 분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도 내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결과 혐의가 인정되는 분들, 제 기억으로는 두 분입니다마는 두 분에 대해서는 기소를 했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그 메모지를 기록한 분이 돌아가셨고 그분의 얘기를 더 들을 수가 없고 또 다른 부분들은, 그 기록에 들어 있는 분들은 다 내용을 전적으로 부인하고 있고 다른 참고인들이 없고 증거가 없기 때문에 증거 판단에 의해서 기소하지 못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사면에 관한 얘기도 나와서 앞에 부적절한 사면이 있었던 것이 아니냐, 성완중 관련해서, 이런 제기가 됐기 때문에 그 부분도 검토했던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혐의가 밝혀지지 않고 다 종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해철 의원** 또한 적절하지 않은 예가요, 정윤희 문건 사건인데 이 건에서도 마찬가지로입니다.

정윤희 씨의 국정 농단이 사실은 주가 돼야 되는데, 2014년 12월에 세계일보에 보도되니까 박근혜 대통령은 ‘보도된 문건 내용이 찌라시 수준이라며 문건 유출은 결코 있을 수 없는 국기 문란 행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유출에 대해서 대통령기록물 관리법으로 조윤천 등을 기소합니다.

이것 역시도 본말이 바뀐 수사다라고 생각하는 데, 총리 어떻게 보세요?

○**국무총리 황교안** 의원님 잘 아시다시피 수사의 결론은 증거로 말을 해야 됩니다. 그때 검찰이 어떤 특정한 목적을 가지고, 정치적인 목적을 가지고 수사를 하지 않은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나중에 결과적으로 혐의가 인정된 부분들을 정리했고 또 그 부분에 관해서도 나중에 수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설명을 나름대로 검찰에서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해철 의원**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사건도 마찬가지로입니다. 이 대화록 사건도 실체는 대화록의 불법 유출입니다.

그런데 대통령이 2014년 8월 6일 ‘중요한 사초가 증발한, 절대 있어서는 안 될 일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니 이 수사가 사초 실종과 관련된 수사로 방향이 전환됩니다. 하지만 이 실종과 관련된 수사는 기소했지만 모두가 무죄가 되고 검찰의 처분은 아주 약한, 법원에서조차 부인되는 그런 결과를 초래합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국무총리 황교안** 기본적으로 검찰이 수사를 할 때는 ‘누가 수사를 해라’ 이렇게 한다고 해서 수사를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의원님 잘 아시다시피 수사의 단서들이 있어야 됩니다. 고소 고발이 있거나 또 진정 내사가 있거나 수사 의뢰가 있거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수사가 시작되는 것인데 그 사건도, 대화록 유출 사건도 고발이 있었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관해서 수사가 시작됐고, 관련된 부분에 관해서 스크린을 해서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한 부분은 기소를 했고 안 되는 부분은 무혐의 종결을 했습니다.

기소된 부분에 관해서 나중에 법원의 재판에서 좀 좋지 않은 결과, 검찰의 입장에서는 좋지 않은 결과가 나온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그 부분들에 관해서도 검찰이 그 이후에 계속 다른 절차들을 밟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해철 의원** 제가 총리의 답변을 듣고 있는 이유는, 맞아서가 아니라 그렇게 결과에 대해서 변명으로 급급하는 것은 맞지 않다, 왜냐하면 실제 수사 검사들의 여러 가지 영향을 받았다는 사례가 있고, 좀 더 나아가서는 이 사건의 결론들이 뒤에 법원에 의해서 번복되거나 또는 현재 수사 중으로 다른 결론이 나오에도 불구하고 이런 결론들이 모두 다 대통령이나 정부에 유리한 쪽으로 결론이 납니다, 대통령 말 한마디에 따라서.

그래서 총리께서는 여기에 대해서 그냥 이것을 설명하려고 하지 말고 이런 지적에 대해서 유념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총리, 이번에 세월호 희생자 304명 중 208명만이 정부에 배·보상 신청을 하고 나머지는 신청을 안 해서 육십몇 %만이 신청했는데, 신청 안한 이유가 뭔지 아시나요?

○**국무총리 황교안** 제가 정확하게 그 내용을 알지는 못하겠습니다마는 신뢰의 문제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전해철 의원** 어떤 신뢰요?

○**국무총리 황교안** 기본적으로 정부가 배·보상하는 것이 진상 규명이 전제가 되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의 절차를 거치는 것이 좋겠다 하는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해철 의원** 반은 맞는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유족들은 또 미신청한 사람들은 법원의 재판과정에서 참사의 진실이 밝혀지기를 원하고 있는데 이 특별법이 마련됐지만 정부에 의해서 오히려 방해받고 있고 그것이 시행령의 왜곡된 모습이다, 그래서 정부를 더 믿을 수 없다고 생각해서 이와 같이 배·보상 신청을 하지 않은 겁니다.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수차례 나와 있으니 총리께서 다시 한 번 살펴보기를 바라는데, 예를 들면 행정지원실장이 모든 소위원회 업무 분야를 협의 및 조정하는 기능을 갖는다든지 특조위의 핵심 보직을 정부의 파견 공무원이 담당한다든지 안전사회소위원회 업무를 세월호 참사 관련 업무로 국한한다든지 등등의 것은 모두 다 모법에 위반되거나 세월호 특별법의 취지에 맞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이 세 가지 지적한 것에 대해서 총리는 어떻게 보세요?

○**국무총리 황교안** 기본적으로 그 법은 여야 간에 합의를 거쳐서 만들어진 모법을 기본으로 해서, 특별법을 기본으로 해서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막 진상 규명 활동이 본격화되고 있는 이런 상황이니깐 그것이 잘 진행되기를 바라는 마음이고, 그 과정에서 부족한 부분들이 생긴다고 그러면 더 보완을 할 필요도 있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전해철 의원** 재검토해서 보완을 확실히 해야 되고요.

이 특조위의 활동시한의 시기는, 시작하는 시기는 언제라고 봅니까?

○**국무총리 황교안** 지금 법에는 위원회가 활동을 시작한 때로부터 시작되는 것으로, 1년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해철 의원** 구성이 완료된 날로부터 1년간이지요. 그 구성이 완료된 날이 언제입니까?

○**국무총리 황교안** 정부에서 해석하기는 1월 1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전해철 의원** 1월 1일 날 전혀 구성된 적이 없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도 재검토를 하고, 특히 다른 위원회 예도 봐서 시행령도 안 되어 있고 구성도 안 되어 있는 것을 시행시기로 하는 것은 맞지 않다라는 부분에 총리께서 한 번 더 재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무총리 황교안** 필요한 부분 검토를 해 보도록

록 하겠습니다.

○전해철 의원 총리, 들어가시지요.

박근혜정부 집권 절반, 대한민국은 지금 제대로 가고 있습니까? 박근혜 대통령은 실패한 전 대통령을, 이명박 전 대통령을 반면교사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권력형 비리와 범죄로 대한민국을 총체적 부실로 몰아넣었고 인권지수와 부패지수가 참여정부와 비교해 급락하는 등 역대 최악의 대통령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정직하고 투명한 사회를 만들어 가려는 노력은 우리 사회의 경쟁력을 높이는 일임에도 박근혜 대통령은 전혀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이 정권에서 살아 있는 권력의 불의와 불법 의혹은 무마되고 약자나 죽은 권력에 대한 사정은 서릿발 같습니다. 부패와 권력비리가 용인되지 않는 사회의 투명성은 사회적 자본으로서 국가경쟁력의 핵심요소입니다. 사회가 투명해야 경제도 살고 국가경쟁력도 회복될 수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검찰 수사 등에 관여하지 말고 검찰, 감사원 등 사정기관은 오로지 법과 정의만을 보면서 국민과 함께해야 합니다.

박근혜정부는 사정기관을 동원한 그 모든 정의롭지 못한 행위를 중단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박근혜 정권의 끝은 결국은 실패로 귀결될 것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 이석현 전해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끝까지 자리를 지켜 주신 여러 의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여러분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정치에 관한 질문을 종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16분 산회)

○출석 의원(268인)

강기윤	강기정	강길부	강동원
강석호	강석훈	강은희	강창일
경대수	권은희	권垠希	길정우
김경협	김관영	김광진	김기식
김기준	김도읍	김동완	김동철
김명연	김무성	김민기	김상민
김상훈	김상희	김성곤	김성주

김성찬	김성태	김세연	김승남
김영록	김영우	김영주	김영환
김용남	김용익	김용태	김우남
김운덕	김을동	김장실	김재경
김정록	김정훈	김제남	김제식
김중태	김중훈	김춘진	김태년
김태원	김태호	김태환	김태흠
김학용	김한길	김한표	김현
김현미	김희선	나경원	나성린
남인순	노영민	노응래	노철래
도종환	류성걸	류지영	문대성
문병호	문재인	문정림	문희상
민병두	민병주	민현주	민홍철
박광운	박남춘	박대동	박대출
박맹우	박명재	박민수	박민식
박범계	박병석	박상은	박성호
박수현	박영선	박완주	박원석
박윤옥	박인숙	박지원	박혜자
박홍근	배덕광	배재정	백균기
백재현	변재일	부좌현	서기호
서상기	서영교	서용교	서청원
설훈	손인춘	송영근	송호창
신경림	신경민	신계륜	신기남
신동우	신문식	신상진	신성범
신의진	신정훈	신학용	심상정
심윤조	심재권	심재철	안규백
안민석	안상수	안철수	안홍준
안효대	양승조	양창영	여상규
염동열	오신환	오영식	오제세
우상호	우원식	우윤근	원유철
원혜영	유기홍	유대운	유성엽
유승민	유승희	유은혜	유의동
유인태	유재중	윤관석	윤명희
윤상현	윤영석	윤재옥	윤호중
윤후덕	은수미	이강후	이개호
이군현	이노근	이명수	이목희
이미경	이병석	이상민	이상일
이상직	이석현	이연주	이에리사
이완영	이우현	이원욱	이윤석
이이재	이인영	이인제	이장우
이재영	이재오	이정현	이종걸
이종배	이종진	이종훈	이주영
이진복	이찬열	이채익	이철우
이춘석	이학영	이학재	이한성
이해찬	이현승	이현재	인재근

임 내 현	임 수 경	장 병 완	장 윤 석
장 정 은	전 병 헌	전 순 옥	전 정 회
전 하 진	전 해 철	정 갑 윤	정 두 언
정 문 헌	정 병 국	정 성 호	정 세 균
정 수 성	정 용 기	정 우 택	정 의 화
정 진 후	정 청 래	정 호 준	정 희 수
조 경 태	조 명 철	조 원 진	조 정 식
조 해 진	주 승 용	주 호 영	진 선 미
진 성 준	진 영	천 정 배	최 규 성
최 동 익	최 민 희	최 봉 홍	최 원 식
최 재 성	최 재 천	추 미 애	하 태 경
한 기 호	한 선 교	한 정 애	함 진 규
홍 문 종	홍 문 표	홍 영 표	홍 의 락
홍 익 표	홍 일 표	홍 지 만	홍 철 호
황 영 철	황 인 자	황 주 흥	황 진 하

○개의 시 재석 의원(119인)

강 기 윤	강 기 정	강 동 원	강 은 희
권 垠 希	김 경 협	김 기 식	김 기 준
김 도 읍	김 명 연	김 민 기	김 상 훈
김 성 곤	김 성 찬	김 세 연	김 영 록
김 영 우	김 영 환	김 용 태	김 장 실
김 재 경	김 제 남	김 종 태	김 춘 진
김 태 환	김 한 표	김 회 선	나 성 린
남 인 순	노 영 민	노 철 래	류 성 결
류 지 영	문 재 인	민 병 두	민 병 주
박 남 춘	박 대 출	박 맹 우	박 상 은
박 성 호	박 수 현	박 원 석	박 인 숙
박 해 자	백 재 현	변 재 일	부 좌 현
서 기 호	서 상 기	서 영 교	서 청 원
손 인 춘	송 영 근	신 동 우	신 문 식
심 상 정	심 재 권	안 규 백	안 상 수
안 철 수	양 승 조	양 창 영	염 동 열
오 신 환	우 상 호	원 유 철	유 대 운
유 의 동	유 재 중	윤 영 석	윤 호 중
윤 후 덕	이 강 후	이 군 현	이 상 일
이 상 직	이 석 현	이에리사	이 우 현
이 원 옥	이 윤 석	이 이 재	이 재 영
이 종 결	이 종 배	이 진 복	이 찬 열
이 철 우	이 춘 석	이 학 재	이 한 성
이 현 승	인 재 근	임 내 현	임 수 경
장 병 완	전 순 옥	정 갑 윤	정 문 헌
정 수 성	정 용 기	정 의 화	정 청 래
조 명 철	조 해 진	진 선 미	진 성 준
천 정 배	최 규 성	최 봉 홍	최 재 천
한 정 애	홍 익 표	홍 지 만	홍 철 호

황 영 철 황 인 자 황 진 하
○속개 시 재석 의원(71인)

강 기 정	강 창 일	경 대 수	길 정 우
김 경 협	김 도 읍	김 동 완	김 민 기
김 상 훈	김 상 희	김 영 우	김 영 환
김 제 식	김 춘 진	김 태 원	김 학 용
김 현	류 성 결	류 지 영	민 병 두
박 대 동	박 병 석	박 성 호	박 윤 옥
백 군 기	부 좌 현	서 영 교	손 인 춘
신 경 립	심 재 권	심 재 철	안 상 수
양 승 조	염 동 열	오 영 식	우 상 호
우 윤 근	원 유 철	유 은 혜	유 의 동
윤 관 석	이 석 현	이 우 현	이 원 옥
이 윤 석	이 이 재	이 종 배	이 진 복
이 찬 열	이 채 익	이 춘 석	이 한 성
이 현 승	이 현 재	임 수 경	전 순 옥
전 정 회	전 하 진	정 두 언	정 수 성
정 진 후	조 명 철	조 해 진	진 성 준
최 민 희	최 봉 홍	추 미 애	홍 영 표
홍 지 만	황 영 철	황 인 자	

○산회 시 재석 의원(60인)

강 기 정	강 길 부	김 기 준	김 민 기
김 상 훈	김 세 연	김 영 록	김 종 훈
김 춘 진	김 태 원	김 한 표	김 현
노 철 래	문 대 성	문 정 립	박 남 춘
박 명 재	박 지원	백 군 기	변 재 일
부 좌 현	서 영 교	송 영 근	신 문 식
신 정 훈	안 상 수	양 승 조	염 동 열
우 윤 근	원 유 철	유 대 운	유 승 희
윤 명 회	윤 재 옥	이 강 후	이 개 호
이 미 경	이 석 현	이 우 현	이 원 옥
이 윤 석	이 이 재	이 인 영	이 장 우
이 종 결	이 종 배	이 종 진	이 진 복
이 철 우	이 춘 석	이 한 성	이 현 승
이 현 재	임 수 경	장 정 은	전 순 옥
전 해 철	주 승 용	하 태 경	함 진 규

○청가 의원(14인)

김 기 선	김 진 태	김 회 국	김 회 정
박 주 선	송 광 호	유 기 준	유 일 호
이 만 우	장 하 나	정 미 경	주 영 순
최 경 환	황 우 여		

○국회사무처

사 무 총 장	장	박 형 준
입 법 차 장	장	구 기 성
의 사 국 장	장	대 대 섭

